

한·중·일 경제협의회체 구상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한 · 중 · 일 경제협약체 구상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Ⅱ 서 언 Ⅱ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역내국간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중·일 FTA의 경우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공감한 3국 정부는 경제통상장관회의를 통해 3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중·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정기적 대화채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중·일 외에 북한, 몽골 및 러시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 중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를 비롯한 정기적 대화채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와 한·중·일 3국간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 등은 보다 심화된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FTA 외에도 이들 3국간 경제협력 관련 대화채널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진일보시킬 구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한·중·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기존 대화채널을 보강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 및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 이창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방호경 전문연구원, 나승권 전문연구원, 이보람 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원고를 집필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그동안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구를 여러 차례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구의 집필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기획재정부의 유형철 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동진 과장, 본원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과 김상겸 원내 자문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국의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원장 채 욱

Ⅰ 국문요약 Ⅰ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중·일 경제협업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중·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파악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업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무역 및 투자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환경, 금융, 교통·물류 및 문화·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부문별로 3국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동안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빠른 부상으로 인해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인접한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다양한 부문에서 심화되어 왔다.

한·중·일의 역내교역 비중은 1990~2011년 동안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EU 및 NAFTA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중

· 일은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그 수준이 ASEAN, NAFTA 및 EU에 비해서는 크게 낮았다.

제조업의 경우 한·중·일 3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혹은 품목)은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업(화물선), 전자부품(액정 디바이스 등과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3국간 제조업의 상호의존도도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분야 등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의 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나, 역내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에너지·환경 분야의 경우, 최근 한·중·일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문의 3국간 상호의존 관계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통화스왑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통·물류에서는 중국의 항공 및 항만 물동량과 항공여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2000~10년 동안 한·중·일 3국의 세계 점유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해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및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역내국의 비중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 교류에서도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의 구성, 운영 및 협력과제 이행현황에 대해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 추가적인 보강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1999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래,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2008년 12월부터는 아세안+3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3국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1차 정상회의 개최 당시 환경장관회의 하나뿐이던 한·중·일 3국간 장관급회의는 2012년 12월 현재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는 13개에 달한다.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열리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연례회에 합의된 바 있으나, 2006년 제4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장관급회의의 경우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전의제 협의 또는 3국간 협력과제 이행 및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반면 한·중·일 국장급 표준협약체는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가운데 열린다.

한편 한·중·일 3국은 2010년 3국 정상회의의 합의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을 정식 출범시켰다. 사무국은 협력사업 평가 및 연간 실적보고서 정리,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정상회의 시기를 고려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는 매년 실적보고서를 통해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보고하는 3국 협력 사무국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외에 한·중·일 3국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3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3자간 혹은 양자간 교류협력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3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이 있으며, 양자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수도 한·중 484건, 한·일 174건에 달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연합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의 경우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성과보다는 인적교류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자체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 교류협력기구가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화된 의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차원에서의 3국간 교류협력 또한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비롯하여 업종별 협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비즈니스 서밋 외의 여타 업계간 교류협력은 3자간보다는 일반적으로 한·중, 한·일 등 양자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 관광·문화 부문 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교류협력의 내용은 시장정보 공유 및 투자 관련 협력(전시회 등), 환경, 인적교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협회 및 기업 차원에서 교류협력은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이들

교류협력과 업계 대표회의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밋과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혼합형 교류협력도 존재한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합의 및 추진된 사업에 업계 또는 학계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한·중·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이 있다.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3자간 협력보다는 한·일 간을 중심으로 한 양자간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한·중·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한·중·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태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한·중·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중·일 경제협약체는 협의 의제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많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면에서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요구된다.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 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 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참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중·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

영될 경우, 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중·일 경제협약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의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한·중·일 경제협약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3국 외에도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한·중·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앞서 지적한 한·중·일 경제협약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약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언	3
Ⅰ 국문요약	5
Ⅰ 제1장 서론	23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4
2.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필요성	26
3. 본 보고서의 구성	31
Ⅰ 제2장 한·중·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33
1. 한·중·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34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34
나. 한·중·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37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46
가. 제조업	46
나. 농수산업	53
다. 에너지·환경	55
라. 금융	60
마. 교통·물류	63
바. 문화·관광	65
Ⅰ 제3장 한·중·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69
1. 한·중·일 정상회의	70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70

나.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73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의 비교	77
2. 한·중·일 장관회의	79
가. 경제부문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80
나. 지속개발 부문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89
다. 사회·인적·문화 부문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95
라. 외교부문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98
3.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99
가. 경제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	99
나. 지속개발 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106
다. 사회·인적·문화 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108
라. 외교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110
4. 한·중·일 협력 사무국	111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114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114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116
다. 협력과제 이행	118
라.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123
마. 한국의 역할	124

Ⅳ 제4장 한·중·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27

1. 지방자치단체	128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128
나. 양자간 교류협력	139

2. 업계	142
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143
나. 제조업	147
다. 농수산업	155
라. 에너지·환경	156
마. 금융	158
바. 교통·물류	158
사. 문화·관광	159
3. 기타(혼합형)	163
가. 한·중·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164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165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167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168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171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171
나. 업계간 교류협력	175
다. 혼합형 교류협력	178

Ⅰ 제5장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81

1.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비교사례	182
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183
나. 아세안(ASEAN)	189
다. 아세안+3 협력체제	197
2.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200
가. 특성	200
나. 체계	203

다. 기대효과	207
3. 한·중·일 경제협체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211
가. 단계적 추진방안	211
나. 추진과제	213
Ⅰ 제6장 결론	217
Ⅰ 참고문헌	223
Ⅰ 부 록	231
Ⅰ Executive Summary	237

표 차례

표 2-1.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35
표 2-2. 주요국의 2050년 경제규모	36
표 2-3. 한·중·일 세부 제조업별 세계 점유비중 변화	48
표 2-4. 전 세계 수출에서 한·중·일 3국의 점유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의 HS 코드	49
표 2-5. 한·중·일 각국의 제조업별 대외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 ...	52
표 2-6.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역내수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	53
표 2-7. 한·중·일 3국간 농수산업의 상호의존도 변화	56
표 2-8. 한·중·일 3국의 1차 에너지 수요 장기 전망	58
표 2-9. 한·중·일 각국의 총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의 정책 목표 ...	58
표 2-10. 한·중·일 각국의 역내 총수출에서 환경재의 점유비중 추이	59
표 2-11. 치앙마이 구상(CMI)에서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61
표 2-12. 세계 30대 항만의 물동량 순위	62
표 2-13. 한·중·일의 항만 물동량 처리 변화	63
표 2-14. 한·중·일의 항공이용 화물 및 여객수	65
표 2-15.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규모	67
표 3-1.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독립적 3국 정상회의 비교	78
표 3-2.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	87
표 3-3.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내용	90
표 3-4. A3 Foresight Program 지원 예산 및 과제수	91
표 3-5.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요약	94
표 3-6.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내용 요약	95
표 3-7. 3국 경제국장급회의 개최 내용	100

표 3-8.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 추진체계	104
표 3-9. 한·중·일 과학기술국장급회의 동향	107
표 3-10. CAMPUS Asia 사업단	109
표 3-11.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	111
표 3-12.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주요 장관급회의 개최시기 및 의장국 비교	115
표 3-13. 경제 관련 한·중·일 장관급회의와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117
표 3-14. 한·중·일 3국간 경제 관련 주요 분야 교류협력(2004~12년)	120
표 3-15. 3국 경제 관련 주요 장관급회의 각국 소관 정부기관	122
표 4-1.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회원 지역	130
표 4-2.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의 회원도시 및 단체	131
표 4-3.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이력	132
표 4-4.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회원도시	135
표 4-5. 동아시아관광포럼의 회원정부	136
표 4-6.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회원도시	139
표 4-7.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개최 현황	144
표 4-8.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 현황	145
표 4-9. KEA-JEMA 교류협력 추진현황	148
표 4-10. 한·중·일 공동표준화 과제 현황	166
표 4-11. 한일(규슈)경제교류회의 추진 성과: 요약	169
표 4-12.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추진 성과: 요약	170
표 4-13. 한·중·일 업계간 교류협력체계 비교	178
표 5-1. APEC 분야별 장관회의(1992~2012년)	185
표 5-2. 아세안 정상회의	191
표 5-3.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협의회 산하 회의	193
표 5-4. 아세안 경제공동체협의회 산하 회의	194
표 5-5.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협의회 산하 회의	195

표 5-6. 아세안+3 정치·안보 부문 장관급회의	198
표 5-7. 아세안+3 경제부문 장관급회의	199
표 5-8. 아세안+3 사회·문화 부문 장관급회의	200
표 5-9. 지역경제협의회 및 한·중·일 3국간 정례화된 경제부문 장관회의	204

그림 차례

그림 2-1.	한·중·일 3국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	40
그림 2-2.	한·중·일 3국 및 주요 경제권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 추이	41
그림 2-3.	한·중·일 각국의 역내무역 의존도 추이	42
그림 2-4.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간 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43
그림 2-5.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45
그림 2-6.	일본의 대한국 및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45
그림 2-7.	한·중·일 3국 제조업의 전 세계 수출 및 비중 추이	47
그림 2-8.	한·중·일 3국 주요 철강제품의 세계 점유비중(%) 추이	50
그림 2-9.	한·중·일 3국 자동차 생산의 세계 점유비중(%) 추이	50
그림 2-10.	한·중·일 3국 농수산업의 전 세계 수출 및 비중 추이	54
그림 2-11.	한·중·일 3국 주요 농산품의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55
그림 2-12.	한·중·일 3국의 주요 에너지 소비량 및 수입량	57
그림 2-13.	한·중·일 3국 방문 관광객 변화 및 세계 비중 추이	66
그림 2-14.	한·중·일 3국의 해외 관광객 변화 및 세계 비중 추이	66
그림 2-15.	한·중·일 각국의 역내 문화상품 수출비중 추이	67
그림 3-1.	한·중·일 장관급회의 주요 부문별 현황	80
그림 3-2.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3대 목표 및 12개 실천과제	89
그림 3-3.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요	92
그림 3-4.	한·중·일 협력사무국 조직도	113
그림 4-1.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추이	140
그림 4-2.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추이	141
그림 5-1.	APEC 조직도	184
그림 5-2.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구성	207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1.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도	232
부록 그림 2. 중국 행정부 조직도	233
부록 그림 3. 일본 행정부 조직도	234
부록 그림 4. 아세안 사무국 조직도	235

제1장 서론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2.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필요성
3. 본 보고서의 구성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대응

유럽 경제통합의 역사는 195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로 시작된 유럽 경제통합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함으로써 이미 본격화되었고, 1993년에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 심화되었으며, 1999년에는 유로존이 형성되었다. 회원국 수도 초기 6개국에서 현재 27개국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다.¹⁾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주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미국도 1980년대 중반부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발효함에 따라, FTA로 상징되는 지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들 지역에 비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뒤늦게 시작되었고, 그 지향 목표 및 추진력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아직 체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아·태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 자유무역지역(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의 형성을 장기목표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비로소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

1) 유로존 국가는 현재 17개국이다.

화되고 있다. 2012년 11월 한·중·일 FTA 및 동아시아 16개국²⁾이 참여하는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각각 이루어졌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유럽 경제통합의 영향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혹은 동북아 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혹은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동북아 공동체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지향점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던 데 반해, 동아시아 공동체는 아세안+3(한·중·일) 협력체제를 비롯해 다각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비전으로 제시되고 논의되어 왔다.

동북아 공동체는 냉전종식과 함께 역내 국가간 체제의 차이, 과거사 문제, 한반도 분단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가 어려웠던 시기부터 이들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력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의 비전으로 제시되어 왔다. 지역 차원의 FTA 체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체는 궁극적 목표로만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³⁾

반면 동아시아 공동체는 2001년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2)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말한다.

3) 와다 하루키(2004)는 동북아 에너지 환경, 경제, 정치와 안보의 공동체를 골격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제안하였으며, 추진과제로 두만강 유역 개발, 동북아시아 개발 은행과 동북아시아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창재 외(2005)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보고, 구체적 목표로 동북아 FTA와 부문별 협의체를 양대 기둥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제안하였다. 한편 Lu Jianren(2005)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동북아 역내 국가간 상호 경제협력, 연합(coalition), 그리고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실현방안으로 1단계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대(FTA) 형성(2015~20년 이내), 2단계 공동시장 구축(2025~35년)을 제안하였으며, 참여국을 한·중·일, 넓게는 북한, 몽골 및 러시아를 포함하였다.

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에 의해 동아시아 통합의 비전으로 제안되었다.⁴⁾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형성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하토야마 일본 전 수상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주장한 바 있으며,⁵⁾ 최근에는 2012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⁶⁾

이와 같이 동북아 공동체에 비해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 더욱이 아세안 국가들이 2015년을 목표로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추진중이고,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의 FTA인 RCEP도 2015년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공동체 특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은 머지않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2.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필요성

지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동북아,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중층적인 지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 그중 아·태지역에서는 이미 APEC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

4) EAVG(2001).

5)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은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 지역협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 금융, 교육 등 다방면의 기능적 공동체 네트워크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주창하였다(Hatoyamao 2009).

6) EAVG II(2012).

므로, 우리의 당면과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통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및 동아시아 통합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유럽통합을 그 모델로 하고 있다. 유럽이 통합 역사 및 진척도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제반여건이 유럽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의 통합 경험에서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과 배워야 할 부분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럽통합은 경제통합을 통해 유럽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경제통합을 단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가운데 정치통합을 지향해 왔다. 또한 비교적 초기 단계인 유럽경제공동체 단계에서부터 유럽은 경제통합에서 FTA보다 높은 단계인 관세동맹을 목표로 삼았고 실제 1968년에 관세동맹을 실현하였으며, 그 후 공동시장, 경제동맹 및 화폐통합 등을 이루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 회원국도 6개국에서 점차 확대되는 점진적 방식을 택했다.

유럽통합 경험 중 일부는 동북아와 동아시아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경제통합으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초기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시기부터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경제통합을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정치통합을 비전으로서조차 상정하기 어려운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유럽의 경험에서 배울 점도 많다. 단, 이를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첫째, 경제통합으로 시작해 정치통합을 지향한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 자체를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역내 정치·안보적 긴장완화 및 관계증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 둘째, 유럽통합의 교훈은 통합에 있어서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점진적 심화·확대 방식이다. 경제통합 면에서는 FTA로 시작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수준을 높여 나가고, 회원국도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북아의 경우 주요국인 한·중·일 3국이 먼저 경제통합을 시작하고, 여타 국가들은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가입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⁸⁾

결국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는 동북아 공동체와 동아시아 공동체 대신에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⁹⁾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경제통합 면에서 유럽경제공동체보다도 낮은 단계인 FTA+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¹⁰⁾ 단, FTA 외에 무역·투자 원활화 및 기타 부문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 및 제도가 구비될

7) 아·태지역에서 이미 설립된 APEC 사례도 이에 속한다.

8) 동아시아의 경우 아세안 10개국이 일괄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RCEP에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외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참여키로 되어 있어 점진적 확대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9) EAVG II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관련 구체적 설립 목표시한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10) 현재 추진 중인 아세안 경제공동체도 관세동맹에 못 미치는 FTA+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현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실현 가능하며 구체성을 지녀 뚜렷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기목표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달리 이를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지리적으로 한·중·일 외 북한, 몽골 및 러시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 중 한·중·일 3국에만 정상회의를 비롯한 정기적 대화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한·중·일 FTA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3국간 FTA 외에도 이들 3국간 경제협력 관련 대화채널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될 ‘한·중·일 경제협의체’가 필요하다.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¹⁾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앞에서 지적한 유럽통합의 교훈과 부합한다. 경제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 외에도, 이 경제협의체는 대화채널의 확충과 체계화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 진

11) Shi Min(1994)은 정부, 업계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된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와 유사한 형태인 동북아경제협력협의체(NEAECC: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Council)를 제안하였다. 이창재 외(1999)는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경제통합 이전까지 통합 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조직적인 노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필자는 이 협의체를 통해 3국이 무역, 투자, 산업협력, 교통물류, 관광, 환경협력, 금융협력 및 거시경제정책 조율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에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세안 경제공동체 설립 이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3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경제협약체가 중기목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은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통해 3국간 정책을 협의·조율함으로써, APEC 및 여타 다자간 국제경제기구나 국제경제포럼에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발언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¹²⁾

한편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 및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북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핵심국인 한·중·일 3국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 등으로 동북아 3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이 환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갈등요인을 완화시키고 3국이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3국은 한·중·일 FTA와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12) Lee(2000)와 Lee(2004)는 역내 FTA 체결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며 APEC 및 국제경제기구의 논의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의 장으로서 동북아 경제협력체(CNAEC: Council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3. 본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동북아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로 한·중·일 경제협업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보고서에서는 실제 한·중·일 3국 경제가 어느 정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3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는 한·중·일 3국간 주요 협력 분야를 파악하는 한편, 다양한 대화채널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업체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3국간 운영되고 있는 대화채널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그 자체로서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점유하는 위상 및 3국 경제간 상호의존도를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가늠해 보고, 또한 주요 산업 및 부문별로 살펴본다.

제3장은 한·중·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화채널의 현황을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자회의로 구분하여 점검·평가하며, 아울러 2011년 출범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역할 및 운영상황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간 지방자치단체, 업계 및 여타 부문에서 운영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대화채널을 검토하고 비교·평가한다. 이 과

정에서 일부 양자간 대화채널과의 비교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 장들에서의 분석 결과에 기초해 기존 대화채널을 보강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경제협의체가 장기적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에 대비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3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 및 아세안의 체계를 검토해 본 후, 이를 토대로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 한·중·일 3국 경제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중·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1. 한·중·일 경제의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전 세계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2011년 현재 인구 13억 7천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4%를 3국이 점유하고 있다. 3국 경제규모(GDP)는 2011년 기준으로 세계경제의 2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1992~2011년 동안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2.0%에서 10.5%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은 15.8%에서 8.4%로 줄어들어, 결국 3국 경제규모의 비중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1.3%포인트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중·일 3국의 상품 및 상업서비스 무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도 중국의 전 세계 점유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본의 점유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중국 대외무역의 빠른 증가세로 3국의 전 세계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2012년 동안 12.1%에서 16.5% 및 10.6%에서 16.2%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그동안 한·중·일 3국 모두 금액 및 비중 면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컸는데, 2011년 들어 일본은 수출보다 수입규모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은 3국 중에서 수출 및 수입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 및 수입 모두 2004년에 일본을 추월하였다.¹³⁾ 그 결과, 2011년 기준

13) 상품무역의 경우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2004년 및 2003년에 각각 일본을 추월하였고, 상업서비스는 2008년 및 2009년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난다(WTO Statistics Database).

표 2-1.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

구분	1992년				2011년			
	한국	중국	일본	소계	한국	중국	일본	소계
인구 (백만 명)	43.7 (0.8)	1,173.4 (20.9)	124.2 (2.3)	1,341.4 (24.0)	48.7 (0.7)	1,363.7 (19.8)	126.8 (1.8)	1,539.2 (22.3) ²⁾
GDP (십억 달러)	338.2 (1.4)	488.2 (2.0)	3,852.8 (15.8)	4,679.2 (19.2)	1,116.2 (1.6)	7,298.1 (10.5)	5,869.5 (8.4)	14,283.9 (20.5)
수출 ¹⁾ (십억 달러)	87.6 (1.9)	94.0 (2.0)	387.5 (8.2)	569.1 (12.1)	649.0 (2.9)	2,080.8 (9.3)	9,650 (4.3)	3,964.9 (16.5)
수입 ¹⁾ (십억 달러)	95.1 (2.0)	89.8 (1.9)	325.6 (6.7)	510.5 (10.6)	622.7 (2.8)	1,980.0 (8.8)	1,020.8 (4.6)	3,623.5 (16.2)
FDI ³⁾ (십억 달러)	6.9 (0.3)	36.1 (1.5)	15.5 (0.6)	58.5 (2.4)	131.7 (0.6)	711.8 (3.5)	225.8 (1.1)	1,069.3 (5.2)
ODI ³⁾ (십억 달러)	4.4 (0.2)	9.4 (0.4)	248.1 (10.4)	261.9 (11.0)	159.3 (0.8)	366.0 (4.6)	962.8 (1.7)	1,488.1 (7.1)
외환보유고 ⁴⁾ (십억 달러)	17.1 (1.6)	21.2 (2.0)	72.8 (7.0)	111.1 (10.6)	304.3 (2.8)	3,204.6 (29.8)	1,259.5 (11.7)	4,768.4 (44.4)

- 주: 1) 수출 및 수입은 상품 및 상업서비스를 합계한 금액임.
 2) 괄호 안의 숫자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FDI 및 ODI는 저장(stock) 기준임.
 4) 외환보유고는 외환과 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Oxford Global Economic Databank, http://www.oxfordeconomics.com/oef_win/ReportPage.aspx, (접속일 2012년 8월 1일)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1/weodata/index.aspx>, (접속일 2012년 8월 1일)

WTO Statistics Database, <http://stat.wto.org/StatisticalProgram/WSDBStatProgramHome.aspx?Language=E>, (접속일 2012년 8월 1일)

UNCTAD Statistics, <http://unctad.org/en/Pages/Statistics.aspx/FDI>, (접속일 2012년 8월 1일)

으로 한·중·일 3국이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 9.3% 및 4.3%이고, 수입에서는 각각 2.8%, 8.8% 및 4.6%를 점유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FDI 누계는 1992년의 585억 달러에서 2011년에 1조 69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 비중도 2.4%에서 5.2%로 늘어났다. 3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2년 당시 일본의 활발한 투자로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11.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둔화되면서 7.1%로 다소 축소되었다. 그러나 2011년 중국

표 2-2. 주요국의 2050년 경제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국명	Foure <i>et al.</i> (2005년 불변가격)	HSBC (2000년 불변가격)	Dadush & Bennett (2005년 불변가격)
한국	3,561	2,056	2,812
중국	30,049	24,617	46,265
일본	7,847	6,429	6,216
미국	24,878	22,270	38,646

자료: Foure *et al.*(2012), *The Great Shift: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World Economy at the 2050 Horizon*, CEPII; HSBC(2011), *The World in 2050: Quantifying the Shift in the Global Economy*, HSBC.; Daduhs and Bennett(2010), "The World Order in 2050," *International Economic Bulletin*, CARNEGIE.

의 해외직접투자는 3,660억 달러(누계)를 기록하여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의 0.4%에서 2011년에 4.6%로 크게 늘어났다.

한·중·일 3국의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의 10.6%에서 2011년에 44.4%로 크게 높아졌다. 2011년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 일본 및 한국이 각각 29.8%, 11.7% 및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12년에 발표된 국가별 경제규모 변화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 중국의 경제규모가 현재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 2-2 참고). 한편 미국의 GDP 대비 한국의 경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7.4%로, Foure *et al.*(2012)에 따르면 이 수치가 2050년에 14.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일본의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및 한국 경제규모의 확대

에 따라 결국 3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빠르게 제고되어 온 상황에서 한·중·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적 수단인 무역 및 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한·중·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일반적으로 역내국의 상호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은 각국의 시현된 무역 및 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대외 총교역에서 역내국의 점유비중을 구하는 것이다(식 2-1 참고). 이는 역외국가에 비해 역내국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적 간단한 산식을 이용하여 쉽게 파악할 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내무역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¹⁴⁾ 역내 국가들의 총교역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역내교역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무역 비중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역내무역 집중도 (intra-regional trade intensity)가 사용되어 왔다(식 2-2 참고). 그러나 역내무역 집중도는 역외무역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역내무역의 집중 정도만 고려한다. 그 결과, 역내무역 집중도를 활용해 역내무역의 의존도 변화를 파악할 경우 오직 단편적 특징만 파악하게 된다.¹⁵⁾ 이에 따라 역내

14) Anderson and Norheim(1993) 및 이창재·방호경(2011) 참고.

15) A와 B지역이 있다고 가정하자. A지역의 전 세계 교역비중 및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10% 및 20%이고, B 지역은 20% 및 40%이라고 할 때, 이들 두 지역의 역내무역 집중도는 동일한 값을 갖게 되나, 역외무역에 대한 의존도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높은 특징을 갖는다(Hamanaka, 2012).

무역 집중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을 중심으로 지역무역 내향성지수(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식 2-3 참고).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는 특정 i 지역의 역내 및 역외무역의 상대적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¹⁶⁾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는 특정 지역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가 0의 값이 나오면 그 지역의 대외무역은 지리적으로 어떤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무역관계를 의미하며, 0보다 클 경우 역내무역 편향적이고, 0보다 작을 경우 역외무역 편향적임을 나타낸다.

$$\text{역내무역 비중} = \frac{T_{ii}}{T_i} \quad [\text{식 2-1}]$$

$$\text{역내무역 집중도} = \frac{\left(\frac{T_{ii}}{T_i}\right)}{\left(\frac{T_i}{T_w}\right)} \quad [\text{식 2-2}]$$

$$\text{지역무역 내향성지수} = \frac{(HI_i - HE_i)}{(HI_i + HE_i)} \quad [\text{식 2-3}]$$

$$[\text{식 2-3}] \text{에서 } HI_i = \frac{\left(\frac{T_{ii}}{T_i}\right)}{\left(\frac{T_{oi}}{T_o}\right)}, \quad HE_i = \left[\frac{1 - \left(\frac{T_{ii}}{T_i}\right)}{1 - \left(\frac{T_{oi}}{T_o}\right)} \right] \text{이다.}$$

16) 그 결과, [식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무역 집중도가 전 세계 무역(T_w)에서 차지하는 i 지역의 비중이 함수인 반면, 지역무역 내향성지수의 경우 [식 2-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역내 무역집중도(HI_i) 및 역외무역 집중도(HE_i)가 역외국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i 지역의 비중이 함수로 구성된다.

여기서 T_{ii} 는 i지역의 역내무역, T_i 는 i지역의 대세계 무역, T_{oi} 는 i지역의 역외지역과의 무역, T_o 는 역외지역의 총무역을 각각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내무역 비중 및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사용하여 한·중·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주요 경제권과 상호 비교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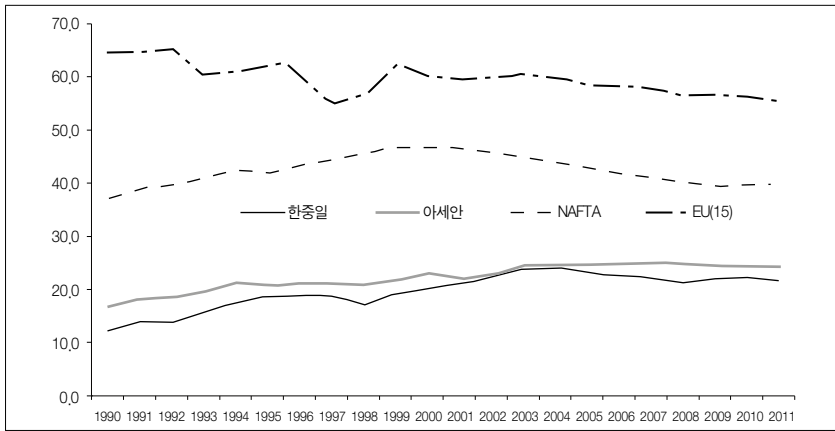
1) 무역

가) 역내무역 비중

[그림 2-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그동안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즉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1990년에 12.3%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21.3%를 보이고 있다. 물론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이후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을 제외하고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그림 2-1 참고).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 비중은 EU 및 NAFTA와의 격차를 줄여 왔으나, 여전히 크게 뒤처지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1990~2010년 동안 EU 및 NAFTA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64.5%에서 55.4%로, 37.2%에서 39.9%로 변화하여 한·중·일 3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교역의 경우 EU 및 NAFTA와 달리 지역무역협정 같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세안은 역내국간 FTA를 이미 체결한 바 있으나 역내교역

그림 2-1. 한·중·일 3국 및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 추이



자료: IMF(2012).

비중 측면에서는 한·중·일 3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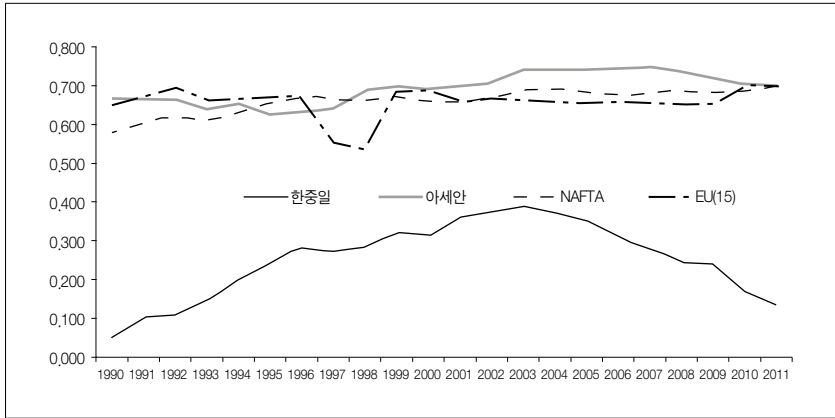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역내교역 비중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이용하여 3국간 무역의 상호의존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

여기에서는 역내교역 비중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역무역 내향성지수를 계산하였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2]이다. 이를 보면, 한·중·일 3국은 지역무역 내향성지수가 0보다 큰 값을 보여 역내무역 편향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

17) 1992년 1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가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서명한 후 베트남(1995년), 라오스 및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추가로 AFTA 회원국이 되었다.

그림 2-2. 한·중·일 3국 및 주요 경제권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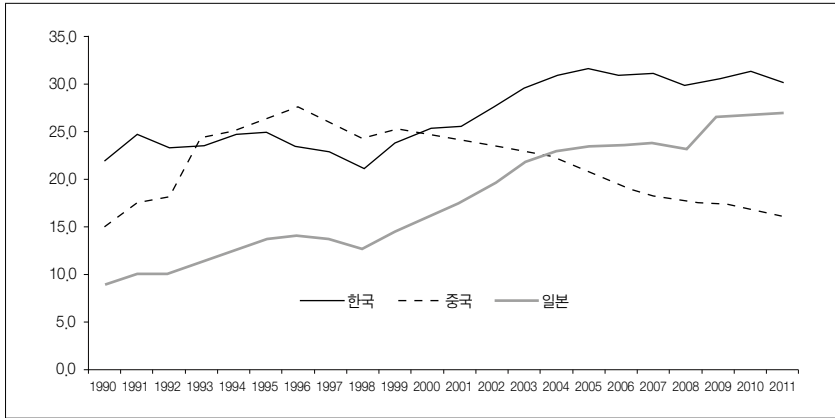
자료: IMF(2012)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빠르게 확대되어 0.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부터 3국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2011년에 0.143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1993년과 유사한 수치이다.

한편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 및 아세안의 역내무역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 오히려 아세안은 EU 및 NAFTA와 지역무역 내향성지수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2000년 이후에는 NAFTA 및 EU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¹⁸⁾

18) 지역무역 내향성지수의 개념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지수는 특정 i 지역의 역내 및 역외무역의 상대적 집중도를 통해 역내무역의 상호의존도를 측정한다.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 비중은 1990년의 12.3%에서 2003년에 23.7%를 보인 후 2011년에 21.3%를 기록한 반면, 역외국의 총무역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2%, 12.1% 및 16.9%로 늘어났다. 결국 한·중·일 3국은 1990~2003년까지 역내무역 비중이 역외국의 총무역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나, 2004~11년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아세안은 역내무역 비중이 역외국의 총무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보이면서 빠르게

그림 2-3. 한·중·일 각국의 역내무역 의존도 추이



자료: IMF(2012).

[그림 2-3]을 보면,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비중 및 지역무역 내향성지수의 증가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03년 혹은 2004년 이후 한·중·일 역내무역 비중 및 지역무역 내향성지수의 감소 추세는 주로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 역내 의존도가 낮아지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는 중국의 역외무역이 역내무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무역의 특징은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조립하여 생산한 최종재를 미국 및 EU 등의 시장에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관계에 기초하고 있다.¹⁹⁾

증가하여 아세안이 한·중·일과 역내무역 비중은 비슷하나, 지역무역 내향성지수에서는 한·중·일 보다 큰 값을 보여준다.

19) 3국의 수직적 분업관계에 대해서는 오영석 외(2010) 참고.

2) 역내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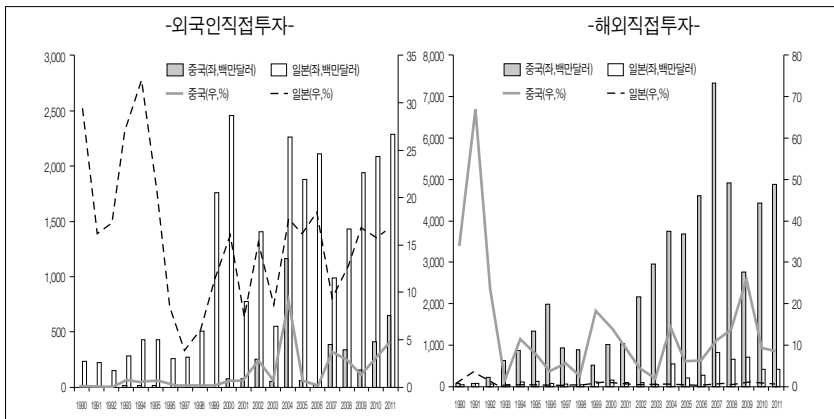
가) 외국인직접투자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일본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해외직접투자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4 참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 및 일본의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1.5%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일본이 16.7%, 중국이 4.8%를 차지한다. 분석대상 기간 동안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일본의 비중이 높았으나, 2009년부터 중국의 투자규모도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규모는 그리 큰 편은 아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역내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9.0%이며, 이 중에서 중국 및 일본이 각각 8.6% 및 0.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역내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09년에 27.3%까지 늘어난 바 있으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기

그림 2-4.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간 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한국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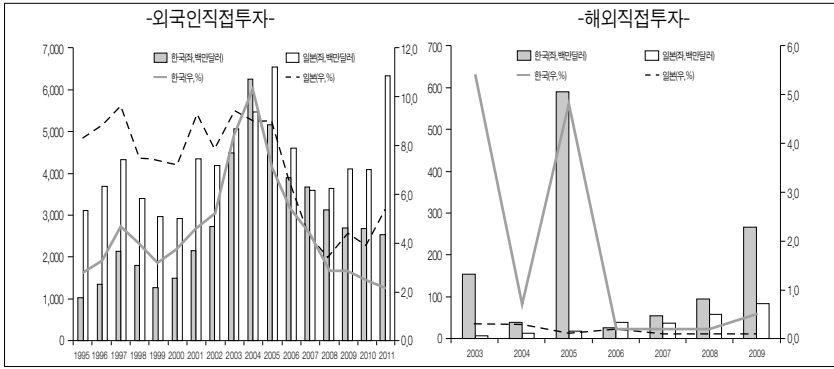
한편 중국은 한국 및 일본의 주요 투자대상국이나, 중국의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역내국의 위상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 중국의 외국인직접 투자에서 역내국의 비중은 2011년에 7.7%(한국 2.2%, 일본 5.5%)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중국의 총 외국인직접투자에서 19.3%(한국 10.3%, 일본 9.4%)까지 확대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일본의 비중은 2009년에 0.6%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투자 규모는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일본에 실제 실행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로 회수된 자금이 많아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도가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의존도를 파악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한국 및 중국의 비중은 2011년에 각각 2.1% 및 10.9%를 보여 무역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석대상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연도에서 약 2%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은 2004년에 일본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18.9%까지 차지한 바 있으나 이후 대략 10% 수준의 점유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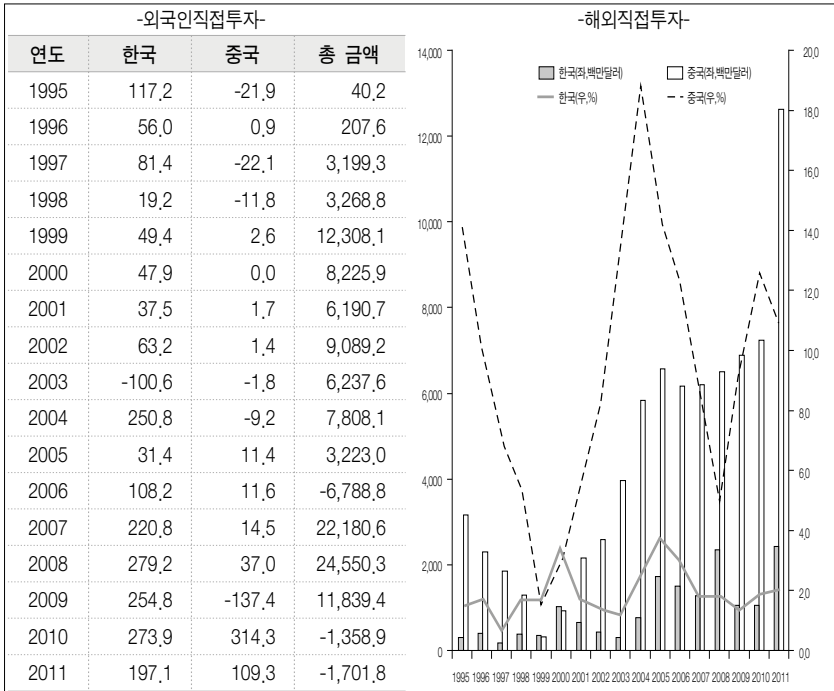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국 중에서 한국 및 일본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으나, 한국과 일본 간 무역 및 투자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위축 혹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중국의 대한민국 및 대일본 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CEIC 통계데이터베이스.

그림 2-6. 일본의 대한민국 및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일본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다음 절에서는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환경 등 주요 부문별로 한·중·일 3국의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부문별 위상 및 상호의존도

가.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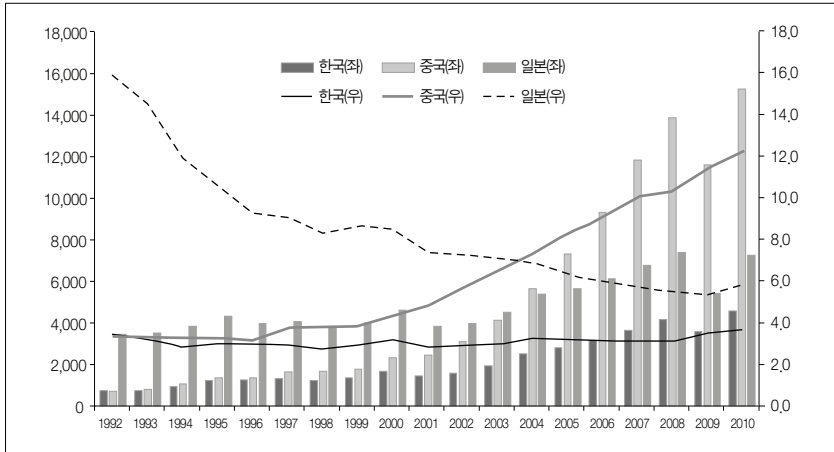
한·중·일 3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주요 품목별 생산량 비중을 구할 수 있다면 세계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3국의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일 3국 제조업의 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 기계, 철강, 섬유 등과 같은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3국 생산량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계 데이터의 제약으로 3국의 주요 제조업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량의 비중을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본고에서는 그나마 접근이 용이한 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3국 제조업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생산량 데이터가 있을 경우 무역 데이터의 분석에 따른 특징을 보완하고자 산업별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2-7]은 1992~2010년 동안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수출규모와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²⁰⁾ 이를 보면 한·중·일 3국 제조업의 수출은 3국의 대외 총수출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20) 제조업 분류는 WTO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분류기준에 기초하였다.

그림 2-7. 한·중·일 3국 제조업의 전 세계 수출 및 비중 추이

(좌: 억 달러, 우: %)



주: 전 세계 수출대상 국가의 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석에 포함된 총 국가수는 196개국임.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1992년 당시 한국 및 중국의 제조업 수출은 724억 달러인 반면, 일본은 3,322억 달러였다. 그러나 3국 제조업 수출이 1992~2010년 동안 각각 연평균 10.8%, 18.5% 및 4.4%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한국 4,608억 달러, 중국 1조 5,274억 달러, 일본 7,245억 달러의 수출규모를 시현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21.9%를 차지하여 3국의 대외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8.6%, 2010년)보다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전 세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010년 기준으로 섬유 및 의류(textiles & clothing), 전자기기(electric machinery), 비전자기기(non-electric machinery)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제조업별로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4%, 33.9% 및 29.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분

표 2-3. 한·중·일 세부 제조업별 세계 점유비중 변화

(단위: %)

구분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1995	2010	1995	2010	1995	2010	1995	2010
목재, 종이 및 가구	3.6	14.1	0.7	0.8	1.5	11.8	1.4	1.5
섬유 및 의류	21.4	38.4	5.9	2.3	12.4	34.5	3.1	1.6
가죽, 고무, 신발 등	18.2	25.6	4.2	2.5	8.7	18.7	5.3	4.3
금속	14.1	18.1	2.8	3.3	3.3	9.0	8.0	5.8
화학제품	11.4	14.2	1.9	3.0	2.3	6.1	7.2	5.1
운송장비	20.3	26.4	2.9	7.4	0.7	6.3	16.6	12.7
비전자기기	18.3	29.5	1.8	3.1	1.3	17.9	15.3	8.5
전자기기	26.0	33.9	6.1	6.0	2.9	20.7	17.1	7.2
광물제품	8.5	9.1	1.8	0.9	3.4	5.6	3.3	2.6
석유화학	3.9	4.2	1.7	2.1	2.2	1.3	0.0	0.8
기타 제조업	22.5	28.7	2.4	5.4	5.6	17.0	14.5	6.4

주: 전 세계 수출대상 국가의 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석에 포함된 총 국가수는 196개국임.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석대상 기간 동안 이들 제조업에서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WTO의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은 제조업을 크게 11개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제조업 중에서 한·중·일 3국의 대세계 수출 점유비중이 대략 25% 이상인 산업이 2010년 기준으로 무려 6개에 달하는 것이 주목되는 특징이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한·중·일 3국의 전 세계 제조업에서의 위상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전 세계 세부 품목별 수출(HS 6단위 분류)에서 한·중·일 3국의 비중을 구해보면, 각 품목의 수출액이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점유율이 50% 이상인 품목의 수가 무려 147개에 이른다(표 2-4 참고).²¹⁾ 이 중에서 점유율이 80% 이상을 보이는 품목의

표 2-4. 전 세계 수출에서 한·중·일 3국의 점유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의 HS 코드

847120	890190	901380	854140	890120	852530	640299
890590	842952	850780	852190	420212	611030	381800
860900	841510	900120	853224	640419	940490	900190
721070	871120	291736	540752	600293	853931	950691
600292	845710	620293	620193	600230	610432	610462
900211	840290	940179	700490	590320	853222	680293
540760	940171	720924	851650	70320	392073	691110
392640	851310	630140	640590	721913	611593	650590
741021	610342	621040	841451	722790	520852	845811
392620	590310	610433	851679	950510	850220	842619
850511	550320	840721	610463	630392	160590	610343
870290	600192	721060	160419	732399	851629	430310
640220	520842	420232	720821	700600	500720	845020
620432	630232	610332	940530	621133	840619	961700
71230	460210	290321	610423	851672	871500	851810
581092	722550	670420	660199	691310	540772	950631
610832	71290	420329	293627	630531	611710	821599
540754	551511	520811	940550	520839	621430	630622
830629	731511	850820	848041	701400	871491	910811
520812	691390	520939	847010	844630	620192	540220
851632	871110	620292	290723	630491	390610	490890

주: 각 품목의 세계 총 수출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품목으로 한정하였음.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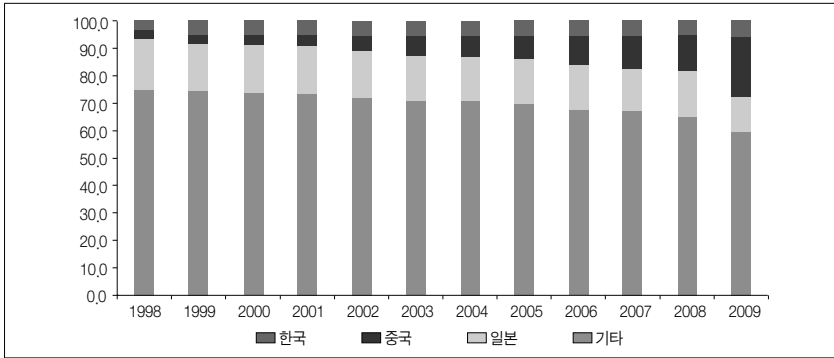
수는 20개로,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화물선(HS 8901.90), 액정 디스플레이(HS 9013.80), 탱크(HS 8901.20), 방직용 섬유재료제(HS 4202.12), 평광재료의 판(HS 9001.20) 등이다.²²⁾ 이들 품목의 각 국가별 점유비중을 구해보면, 화물선 및 액정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3국의 점유비중이 비교적 유사한 품목도 있으나, 3국 중 특정 국가가 대부분의 점유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세계경제에서 한·중·일 3국 제조업의 위상은 생산량 규모에서도 명

21) HS 6단위 분류를 사용한 이유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세분화된 품목분류 기준인 HS 6단위 품목분류이기 때문이다.

22) 한·중·일 3국의 점유율이 80% 이상인 품목 수는 2008년에 13개를 보인 바 있다.

그림 2-9. 한·중·일 3국 자동차 생산의 세계 점유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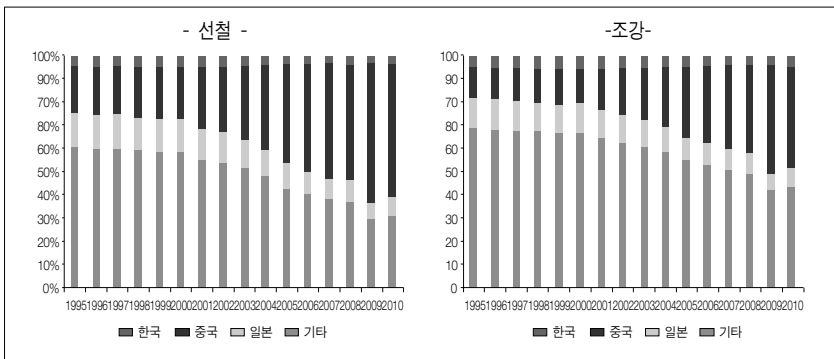


주: 승용차 및 상용차 포함.
자료: 통계청.

확히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주요 철강제품 및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비중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8] 및 [그림 2-9]이다.

이를 살펴보면, 3국의 선철 및 조강 생산량은 1995년에 38.6%(한: 4.3%, 중: 20.1%, 일: 14.3%) 및 31.1%(한: 4.9%, 중: 12.7%, 일: 13.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 68.8%(한: 3.4%, 중: 57.4%, 일: 8.0%) 및

그림 2-8. 한·중·일 3국 주요 철강제품의 세계 점유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56.3%(한: 4.2%, 중: 44.4%, 일 7.8%)로 크게 늘어나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한·중·일 3국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 자동차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25.0%(한 3.6%, 중: 3.0%, 일: 18.5%)에서 2009년에는 40.4%(한: 5.6%, 중: 22.1%, 일: 12.7%)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살펴봤으나, 세계 제조업에서 한·중·일 3국의 위상이 빠르게 제고되어 세계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3국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3국이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는 중국의 빠른 생산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세부 제조업별로 한·중·일 각국의 대외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보면, 한국 및 일본의 대중 의존도가 1992~2010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2-5 참고).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에서 27.3%(2010년)²³⁾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전자기기의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992년의 1.1%에서 2010년에 29.8%로 대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기계류로 분류되는 비전자기기 및 기타 제조업도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의 점유비중이 1992년의 2.4% 및 0.9%에서 2010년의 28.4% 및 5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대중국 제조업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비전자기기(23.7%)와 전자기기(22.4%)로 나타난다(표 2-6참고). 이들 각 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보면, 비전자기기의 경우 1992~2010년 동안 24.3%에서 23.7%로 비중 면에서

23) [표 2-6] 참고.

표 2-5. 한·중·일 각국의 제조업별 대외수출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중국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목재, 종이 및 가구 등	11.8	19.6	16.0	7.5	1.4	2.3	18.4	7.9	5.1	7.6	7.0	33.4
섬유 및 의류	3.2	20.7	17.5	5.3	1.4	2.7	14.1	10.7	8.4	5.9	13.3	36.9
가죽, 고무, 신발 등	2.3	17.0	14.6	5.6	0.7	1.8	5.0	5.4	5.1	3.2	2.9	12.0
금속	12.1	20.4	23.1	11.8	5.1	10.3	11.0	6.2	8.9	17.3	8.4	24.5
화학제품	11.2	41.7	13.0	7.4	2.8	5.6	10.3	9.2	12.3	18.3	5.3	23.6
운송장비	0.4	5.2	2.7	0.6	0.4	3.7	2.2	3.9	0.6	1.2	1.3	8.7
비전자기기	2.4	28.4	6.0	5.3	1.3	2.9	2.8	6.5	6.4	8.1	3.8	22.2
전자기기	1.1	29.8	9.3	5.5	0.6	5.3	4.8	6.7	6.0	6.1	2.8	24.9
광제품	1.3	24.4	29.8	16.0	8.8	6.2	16.3	6.8	10.5	14.0	3.7	13.9
석유화학	0.0	18.4	0.0	11.6	6.8	4.4	61.1	4.8	24.3	6.8	16.5	15.0
기타 제조업	0.9	51.4	14.1	4.8	0.6	3.1	5.4	7.2	3.9	8.8	2.7	21.7

감소한 반면, 전자기기는 14.8%에서 22.4%로 늘어났다.

이처럼 각 제조업별로 한국 및 일본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산업은 양국 모두 총 11개 산업 중 7개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동안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별 대세계 수출에서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 즉 한국 및 일본과 달리 중국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 한국 또는 일본의 비중이 10% 이상을 보이는 산업은 2010년 기준으로 각각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2-5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 및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중·일 3국간 상호의존도도 전자기기 및 비전자기기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한·중·일 3국의 제조업 역내수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對중국		對일본		對한국		對일본		對한국		對중국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목재, 종이 및 가구 등	3.9	0.7	1.4	1.1	1.7	2.0	3.8	4.0	1.0	0.9	1.9	1.7
섬유 및 의류	18.3	2.7	27.8	3.1	24.7	9.3	42.3	22.0	4.6	1.1	10.6	2.8
가죽, 고무, 신발 등	6.2	1.1	10.8	1.6	2.8	1.6	3.5	2.8	1.4	0.7	1.2	1.1
금속	33.6	7.1	17.8	18.0	15.2	17.1	5.7	6.1	11.0	20.4	15.3	12.2
화학제품	20.8	17.9	6.7	14.0	9.5	8.7	6.3	8.4	16.0	25.7	10.1	14.0
운송장비	1.4	4.6	2.5	2.5	0.5	5.0	0.5	3.1	3.1	3.4	9.8	10.8
비전자기기	6.2	13.2	4.2	10.8	2.8	13.9	1.1	18.7	28.0	20.4	24.3	23.7
전자기기	6.7	27.3	15.2	22.2	2.6	29.9	4.0	22.1	21.5	12.9	14.8	22.4
광물 제품	0.8	1.9	5.1	5.6	24.3	5.2	7.9	3.3	3.2	5.8	1.7	2.4
석유화학	-	4.8	-	13.3	12.4	1.3	19.4	0.8	1.6	1.3	1.6	1.2
기타 제조업	2.0	18.7	8.5	7.7	3.6	6.3	5.4	8.6	8.7	7.4	8.7	7.7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나. 농수산업

한·중·일 3국 농수산업의 전 세계 수출은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규모를 보여준다. 2010년 기준으로 한·중·일 3국 농수산업의 대세계 수출규모는 제조업 대비 2.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10년에 한·중·일 3국 농수산업 수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과 달리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1992~20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측면에서도 매년 8.7%씩 증가하여 제조업(10.1%) 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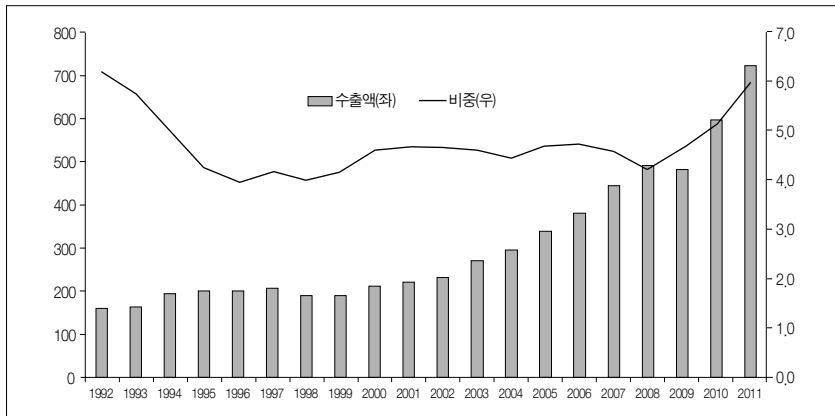
제조업과 달리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중·일 3국 농수산업의 점유비중이 낮은 특징은 주요 농산품의 생산량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그림 2-11 참고). [그림 2-11]은 쌀, 돼지고기, 감자 및 밀을 대상으로 한·중

· 일 3국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쌀 31.2%(한: 0.9%, 중: 28.7%, 일: 1.5%), 돼지고기 48.8%(한: 0.7%, 중: 46.9%, 일: 1.2%), 감자 23.1%(한: 0.2%, 중: 22.2%, 일: 0.7%) 및 밀 16.9%(한: 0.0%, 중: 16.8%, 일: 0.1%)로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3국 농업이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수산 품목의 특성상 3국 농업 및 수산업의 역내국 수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한·중·일 3국간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제조업과 비교해볼 때, 농수산업의 수출의존도의 경우 한국 및 일본의 대중국 의존도는 낮은 편이나, 한국 및 중국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즉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및 일본 농업의 대외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12.9% 및 8.1%를 보였는데, 이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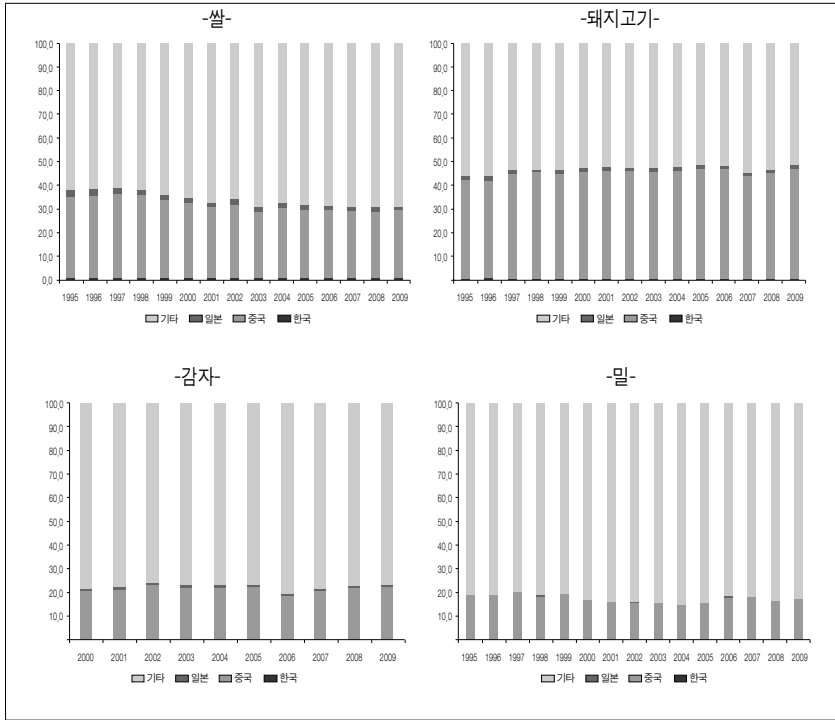
그림 2-10. 한·중·일 3국 농수산업의 전 세계 수출 및 비중 추이

(좌: 억 달러, 우: %)



주: 전 세계 수출대상 국가의 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분석에 포함된 총 국가수는 196개국임.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그림 2-11. 한·중·일 3국 주요 농산품의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국 및 일본 제조업의 총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인 25.2% 및 19.5%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 및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다. 에너지·환경

한·중·일 3국은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천연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수입국으로 분류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

표 2-7. 한·중·일 3국간 농수산업의 상호의존도 변화

(단위: %)

구분		A				B			
		농업		수산업		농업		수산업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1992	2010
한국	중국	0.3	0.4	0.0	0.2	0.7	12.9	0.0	13.4
	일본	5.9	3.9	9.2	2.7	54.1	27.8	74.1	47.6
중국	한국	32.9	3.2	1.4	1.9	7.9	6.2	2.1	10.0
	일본	17.1	5.0	7.3	2.6	20.3	16.8	53.5	23.6
일본	한국	0.8	0.5	0.2	0.3	9.0	9.6	3.4	10.0
	중국	0.3	0.2	0.1	0.2	2.3	8.1	1.0	16.8

주: A는 양자간 전체 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B는 각국 농업 및 수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 상대국 비중을 의미함.

자료: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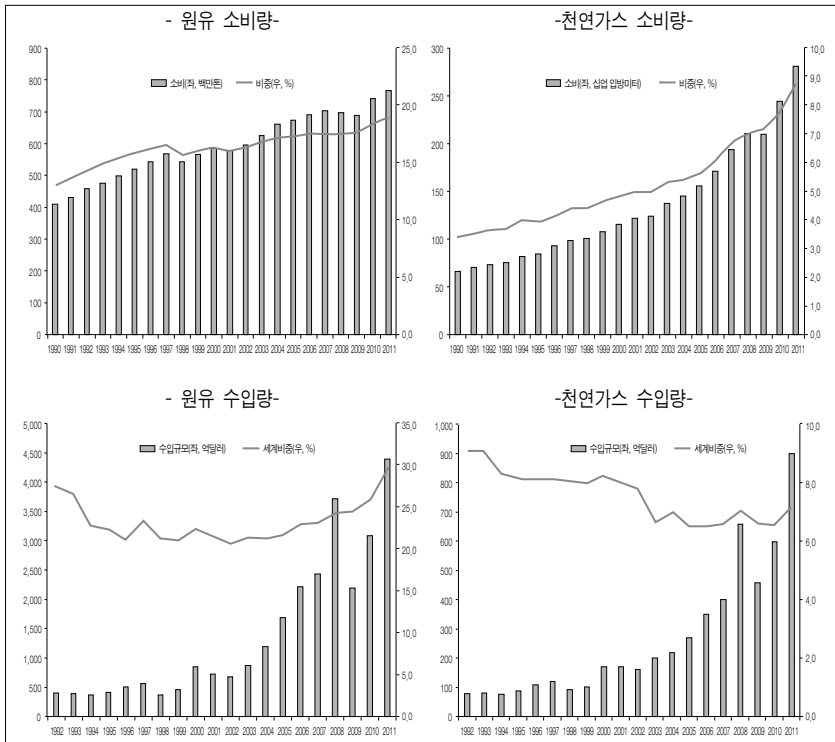
국의 2009년 에너지 소비량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상했다.²⁴⁾

[그림 2-12]는 한·중·일 3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소비량 및 수입규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의 원유 소비량은 1990~2011년 동안 연평균 3.0% 성장하였으나, 전 세계 점유비중은 13.0%에서 18.9%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한·중·일 3국의 원유 소비량 증가에 따라 1992~2011년 동안 원유 수입량도 연평균 13.3%의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한·중·일 3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10% 미만의 비중을 보이지만, 소비규모는 1990~2011년 동안 연평균 7.1%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준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전 세계 수입의 대부분이 한·중·

24) 원동아(201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61호, 국회 예산정책처.

그림 2-12. 한·중·일 3국의 주요 에너지 소비량 및 수입량



자료: BP(2012), UN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일 3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2 참고). 1990년대에는 일본이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천연가스 수입에서 한국도 약 20%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한·중·일 3국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주로 중국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5년에 1차 에너지 소비가 1,720.1백만 TOE에서 2030년에는 90.7% 증가한 3,280.8백만 TOE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표 2-8 참고).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05년의

표 2-8. 한·중·일 3국의 1차 에너지 수요 장기 전망

(단위: 백만 TOE, %)

구분	1990	2000	2005	2015	2030	연평균 증가율
한국	93.4	189.4	212.5	248.5	312.6	3.1
중국	863.2	1,105.9	1,720.1	2,440.4	3,280.8	3.4
일본	443.9	526.6	528.4	558.1	553.8	0.6
합계	1,400.5	1,821.9	2,461.0	3,247.0	4,147.2	2.8
APEC 비중	28.2	31.5	36.8	40.7	42.7	-

자료: APERC(2009),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4th Edition*.

표 2-9. 한·중·일 각국의 총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의 정책 목표

국명	2008/2009년 비중	목표치
한국	9.1%	- 2015년 4.3% - 2020년 6.1% - 2030년 11.0%
중국	6.0%	- 2020년 15%
일본	2.5%	- 2020년 10%

자료: REN21(2011), *Renewables 2011: Global Status Report*, Paris: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2,461.0백만 TOE에서 2030년에는 4,147.2백만 TOE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2030년 동안 한·중·일 3국의 1차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8%씩 증가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30년에 3국의 에너지 소비 규모는 APEC 전체에서 42.7%를 점유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한편 한·중·일 각국은 장기적으로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ies)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3국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총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고, 중국 및 일본은 2020년까지 각각 15% 및 10%로 늘리기로 하였다.

표 2-10. 한·중·일 각국의 역내 총수출에서 환경재의 점유비중 추이

연도	한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중국
1996	2.9	2.1	1.3	1.4	13.0	8.0
1997	3.0	2.0	1.3	1.6	11.6	6.8
1998	2.5	2.4	1.1	1.7	8.5	6.5
1999	2.4	1.9	1.1	1.6	10.2	7.6
2000	2.6	1.8	1.5	1.6	12.1	7.6
2001	3.2	2.4	1.7	1.8	9.9	8.1
2002	3.2	3.2	1.6	1.8	9.8	8.1
2003	3.1	3.0	1.8	1.9	10.3	8.4
2004	3.6	3.6	1.8	2.2	12.3	9.6
2005	3.2	5.5	2.0	2.5	10.9	8.7
2006	3.6	5.6	2.5	2.9	10.3	8.6
2007	3.1	3.4	2.9	3.0	10.5	8.0
2008	3.2	4.0	3.2	3.1	11.6	8.2
2009	3.5	4.5	3.5	3.3	9.7	8.0
2010	4.9	4.9	3.2	3.5	12.5	9.9
2011	6.0	4.1	3.2	3.6	12.8	11.0

주: APEC의 환경재 정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이처럼 3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주요 이유는, 경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국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3국 간 교역에 있어 환경재(environment goods)의 교류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10 참고). 1996~2011년 동안 한·중·일 각국의 역내 수출에 있어 환경재의 수출 증가율은 전체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해 왔다. 즉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수출에 있어 전체 품목의 증가율은 17.9% 및 6.3%인 반면, 환경재는 23.7%, 11.2%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한국 및 대일본 수출에서도 전체 품목의 증가율은 17.4% 및 11.0%를 보인 반면, 환경재는 24.6% 및 18.4%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국가간 가장 기본적이고 경제적 교류인 무역분야에서 환경재의 점유비중은 낮으나, 3국간 상호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금융

한·중·일 3국간 금융 부문의 상호의존 관계는 통화스왑²⁵⁾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데, 이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역내국간 통화스왑 체결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체화된 치앙마이 구상(MI: Chiang Mai Initiative)²⁶⁾을 통해 진행되었다(표 2-11 참고). 치앙마이 구상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는 기존의 아세안 통화스왑 협정을 확대하고 한·중·일 3국간 참여하는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역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다.

-
- 25) 국가간 통화스왑이란 양국간 계약 환율에 따라 자국 화폐와 상대국의 화폐를 교환하고 정해진 기간 후에 최종 계약 환율에 따라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26) 치앙마이 구상이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역내 자금지원 제도로서 초기에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양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제도이다.

표 2-11. 치앙마이 구상(CMI)에서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단위: 십억 달러)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		4	10	1	1.5	2		2
중국	4		3	2	1.5	4		2
일본	10	3		6	1	12	3	6
계	14	7	13	9	4	18	3	10

자료: SK(2011), *Bond Market Comment*, 2011-10-28.

치앙마이 구상을 통한 양자간 통화스왑과는 별개로 한·중·일 3국간에도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해 왔다.

한국 및 일본은 2011년 10월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CMI 통화스왑인 달러-원/엔 스왑 100억 달러와 원/엔 통화스왑계약인 30억 달러 규모를 1년의 계약기간으로 7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²⁷⁾ 2012년 10월에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 일본의 재무성 및 일본은행이 함께 모여 양국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확대 조치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²⁸⁾ 이에 2012년 11월 현재 한국 및 일본의 양자간 통화스왑 규모는 총 1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국 및 중국은 2011년 10월 26일에 기존에 체결하였던 원/위안 통화스왑 규모(1,800억 위안/32조 원)를 3,600억 위안/64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2009년 4월에 유효기간 3년으로 체결하였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을 조기 종료한 후 규모를 확대하여 새롭게 체결한 것이다. 이 통화스왑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양국 중앙은행간 합의에 따라 추가

27) 윤덕룡·오승환(2011)은 한·일 양자간 통화스왑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기화한 것이 양국간 협력이 중·장기적인 금융협력보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한 협력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한·일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확대조치 종료」, (10월 9일)

표 2-12. 세계 30대 항만의 물동량 순위

(단위: 만 TEU)

순위(전년)	항만명	2011년	2010년	성장률(%)
1(1)	상하이	3,150	2,908	8.3
2(2)	싱가포르	2,994	2,843	5.3
3(3)	홍콩	2,440	2,370	3.0
4(4)	선전	2,257	2,251	0.3
5(5)	부산	1,618	1,419	14.0
6(6)	닝보-저우신	1,467	1,314	11.7
7(7)	광저우	1,440	1,255	14.7
8(8)	칭다오	1,302	1,201	8.4
9(9)	두바이	1,300	1,160	12.1
10(10)	로테르담	1,190	1,115	6.8
11(11)	텐진	1,150	1,008	14.1
12(13)	포트클랑	976	887	10.0
13(12)	카오슝	964	918	5.0
14(15)	함부르크	902	790	14.2
15(14)	앤티워프	866	847	2.3
16(16)	LA	794	783	1.4
17(17)	탄중 펠레파스	750	653	14.9
18(19)	시아멘	646	582	11.0
19(21)	다롄	640	524	22.1
20(18)	LB	606	626	-3.2
21(23)	브레머하벤	482	489	21.0
22(24)	탄중 프리옥	580	471	23.0
23(22)	램 차방	573	519	10.4
24(20)	뉴욕/뉴저지	550	529	4.0
25(31)	렌윈강	485	387	25.3
26(29)	호치민	467	440	6.0
27(27)	도쿄	455	428	6.3
28(25)	자와하랄 네루	436	427	2.0
29(26)	발렌시아	433	420	2.9
30(28)	포트사이드	427	365	17.2

자료: 해양한국(2012), 『세계 30대 항만의 2011년 실적 분석』.

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²⁹⁾

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 『한중 통화스왑 확대 체결』. (10월 26일)

표 2-13. 한·중·일의 항만 물동량 처리 변화

(단위: 만 TEU, %)

구분	개수		비중	
	2000	2010	2000	2010
한국	903	1,854	4.0	3.4
중국	4,100	12,961	18.2	24.1
일본	1,310	1,806	5.8	3.4
전 세계	22,477	53,828	100.0	100.0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마. 교통·물류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따라 전 세계 항만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항만의 물동량 처리실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 세계 30대 항만에 중국의 항만이 10개나 포함된 바 있다. 특히 2011년 세계 30대 항만의 물동량 처리실적을 보면, 상하이가 3,150만 TEU를 기록하여 싱가포르(2위) 및 홍콩(3위)에 앞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위인 싱가포르와의 물동량 격차도 전년 대비 더욱 커졌다.³⁰⁾ 한편 전 세계 항만 물동량 순위에서 한국은 부산항이 5위, 일본은 도쿄항이 27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중·일 3국 항만의 총 물동량 처리규모를 보면, 한국 및 일본은 2000~10년 동안 연평균 7.5% 및 3.3%씩 증가한 반면, 중국은 12.2%로 세계평균(9.1%)보다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표 2-13 참고). 그 결과 세계 항만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4.0% 및

30) 2011년 전 세계 항만의 물동량은 5억 6,150만 TEU가 처리되었는데, 이 중에서 상위 30개 항만의 물동량이 전 세계의 58%인 3억 2,400만 TEU를 처리하였다(해양한국 2012 참고).

5.8%에서 3.4%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18.2%에서 24.1%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한·중·일 3국이 세계 항만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28.1%에서 30.9%로 늘어났다.

한편 [표 2-14]는 2000년 및 2010년을 대상으로 한·중·일의 항공화물 및 여객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항공화물의 처리실적을 보면, 한국 및 중국은 2000~11년 동안 연평균 5.3% 및 16.2%씩 증가하여 세계평균(4.8%)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0.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및 중국이 6.5% 및 3.3%에서 6.8% 및 9.2%로 늘어난 반면, 일본은 7.3%에서 4.4%로 줄어들었다. 결국 한·중·일 3국의 전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10년 동안 17.1%에서 20.1%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3국의 항공을 이용한 여객수도 한국 및 중국은 2000년에 3,400만 명 및 6,200만 명이었으나, 2010년에 들어서는 4,200만 명 및 2억 6,700만 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전 세계 항공이용 여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한국이 세계평균보다 낮은 증가세를 시현하여 분석대상 기간 동안 2.1%에서 1.6%로 감소하였고, 중국은 3.7%에서 10.3%로 늘어났다. 한편 일본은 1억 900만 명에서 9,400만 명으로 감소하여 세계항공 여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서 3.6%로 줄어들었다. 한·중·일 3국이 세계 항공이용 여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서 15.6%로 늘어났다.

표 2-14. 한·중·일의 항공이용 화물 및 여객수

구분	항공화물(백만 톤-킬로미터)		항공 여객수(천 명)	
	2000	2010	2000	2010
한국	7,651	12,802	34,331	42,763
중국	3,900	17,441	61,892	267,691
일본	8,672	8,380	109,123	94,212
전 세계	118,257	189,325	1,674,065	2,595,449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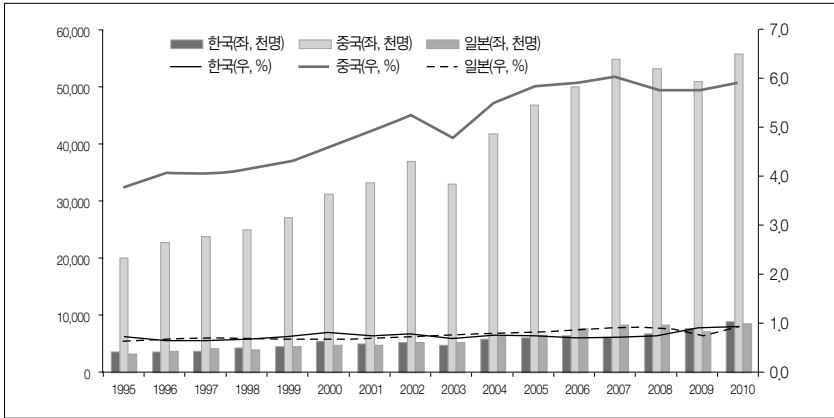
바. 문화·관광

World Bank에 따르면, 1995~2010년 동안 한·중·일 각국에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은 연평균 5.8%, 7.1% 및 6.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5년에 한·중·일 각국에 방문한 관광객은 375만 명, 2,003만 명 및 334만 명이었으나, 2010년에 879만 명, 5,566만 명 및 86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관광객 중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 수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3.78%에서 5.91%로 확대되었다. 한국 및 일본도 각각 0.71% 및 0.63%에서 0.93% 및 0.91%로 늘어났다.

한편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반영하듯 중국의 해외관광객 규모도 빠르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1995년 해외에 방문한 관광객은 452만 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 들어서서는 4,76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전 세계 해외방문객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서 5.2%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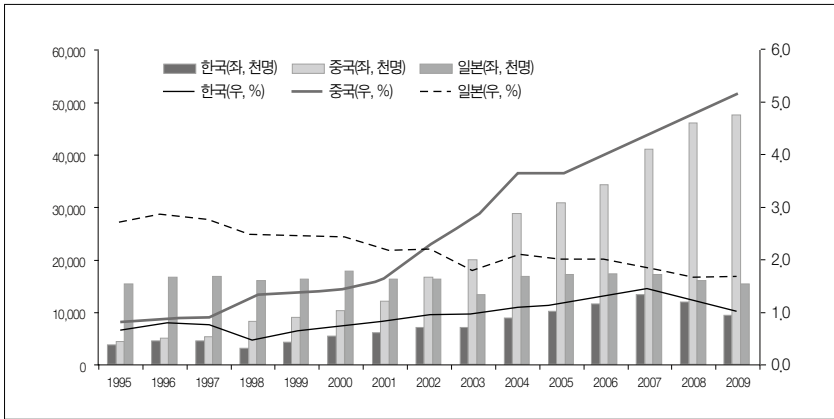
한국의 해외관광객도 1995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비교적 빠르게 늘어왔는데, 1995년의 382만 명 수준에서 2007년에 1,333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일본의 해외관광객 규모는 분석대상기

그림 2-13. 한·중·일 3국 방문 관광객 변화 및 세계 비중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2-14. 한·중·일 3국의 해외 관광객 변화 및 세계 비중 추이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한·중·일 3국간 관광교류의 경우 역내국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표 2-15 참고). 한국의 경우 총 관광객 중에서 중국 및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었다. 2006년에는 한국을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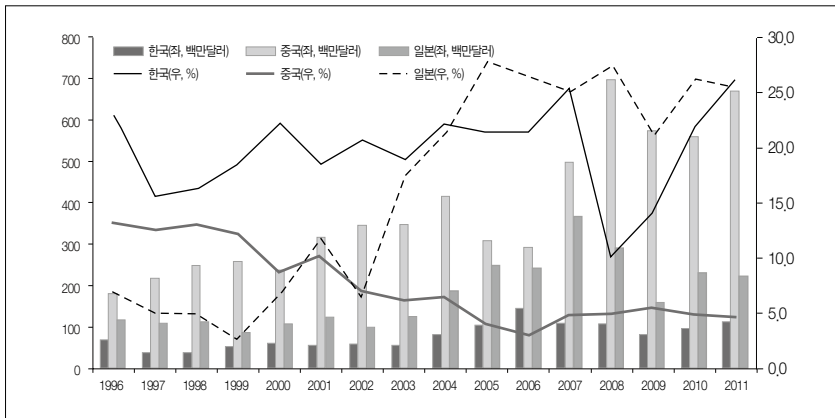
표 2-15.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규모

(단위: 천 명, %)

목적지 송출국	2006년			2011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	3,923	2,117	-	4,190	1,658
중국	897	-	812	2,220	-	1,043
일본	2,339	3,745	-	3,289	3,660	-
소계(A)	3,236	7,668	2,929	5,509	7,850	2,701
전체(B)	6,155	124,942	7,334	9,794	135,450	6,219
비중(A/B)	52.6	6.1	39.9	56.2	5.8	43.4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동향』.

그림 2-15. 한·중·일 각국의 역내 문화상품 수출비중 추이



주: UNESCO의 문화상품(cultural goods) 정의를 이용하였음.

자료: UNCTA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문하는 총 관광객 중에서 중국 및 일본의 비중이 52.6%를 보였는데, 이는 대부분 일본 관광객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도 증가하였지만, 중국 관광객의 빠른 증가에 따라 역내방문 비중도 2006년보다 늘어난 56.2%를 보였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및 중국의 관광객 비중도 2006~11년 동안 39.9%에서 43.4%로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및 일본의

관광객 비중은 2006~11년 동안 6.1%에서 5.8%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총 관광객 중 역내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특징은 역내 문화상품(cultural goods) 교류에서도 나타난다. 즉 UNESCO의 문화재 분류에 기초하여 한·중·일 각국의 역내수출 비중을 구해보면, 한국 및 일본은 2011년에 각각 26.3% 및 25.6%를 기록하였다. 다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이후는 역내수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 역내 문화상품의 수출비중이 2011년에 4.6%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그러나 역내수출 규모면에서는 한국 및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3장 한·중·일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1. 한·중·일 정상회의
2. 한·중·일 장관회의
3.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4. 한·중·일 협력 사무국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1.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은 1999년부터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아세안+3 정상회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현재 3국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은 정상회의와 독립적 정상회의, 이렇게 연간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가.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전개 및 성과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중국의 주룽지 총리,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수상은 조찬을 겸비한 비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3국은 각국 국책연구기관들로 하여금 3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제2차 정상회의(2000년)에서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으며,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한·중·일 공동연구 사업을 2001년 1월 정식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그 밖의 합의사항으로는 첫째, 2002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지정, 둘째, IT 분야 협력을 위한 국장급 전문가 그룹의 설치, 셋째,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1년에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3국간 외교장관회의의 신설과 함께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으며, 업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설립키로 하였다. 그 밖에 IT 협력사업 발굴, 환경협력 공동사업

및 국민문화 교류사업의 확대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2년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4차 정상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식화를 선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2002년 한·중·일은 5대 우선협력 분야로 무역·투자, 정보통신, 환경보호, 인적개발, 문화를 선정하였다.³¹⁾ 이 외에 3국 정상은 관광 및 관광 인프라 공동개발, 스포츠 교류 증진,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003년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협력에 관한 3국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 of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문에는 무역 및 투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보호, 방재,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관광, 수산, 인적교류, 국제이슈, 역내 경제협력(동아시아 연구그룹 건의사항 집행), 안보·군사인력 교류, 비전통안보(전염병 및 국제범죄 방지) 총 14개 부문에서의 협력 증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합의사항으로는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각 분야에서의 3국 협력 활동을 점검, 협의, 조정하는 등 3국간 정상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의 3자 위원회(Three-Party Committee) 설립이 있다.³²⁾

2004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는 2003년에 채택된 공동선언문 후속조치로 3자 위원회가 제출한 ‘3국 협력 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3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2012).

32) China-Japan-ROK Trilateral Summit(2003).

and the Republic of Korea: 2004년)’와 ‘3국 협력 행동전략(The Action Strategy for Promot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총 2개의 문건을 승인하였다. ‘3국 협력 행동전략’에는 2003년 채택된 공동선언문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향후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 밖에 3국 정상은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지역통화의 안정을 위해서는 3국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³³⁾

제7차 정상회의는 2007년 1월에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는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3자 위원회가 제출한 제2차 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 2005~06년)가 승인되었다. 공동언론발표문은 3국간 기존 5대 협력분야 외에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 청소년 교류 6개 우선협력 분야를 추가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3년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14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켰다.³⁴⁾

2007년 11월에 개최된 제8차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를 아세안+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한·중·일 3국 협력체계는 한 단계 진일보하였다. 그 밖에 3국 정상은 3자 위원회가 제출

33) 이창재·방호경(2011),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p. 60.

34) China-Japan-ROK Trilateral Summit(2007).

한 제3차 실적보고서(Progress Report: 2007년) 및 13개의 신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다. 신규 협력사업으로는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3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 설치,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 2008년 상반기 중 일본 개최,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3국 해상안전 부문간 교류 증진, 3국 FTA 공동연구 지속,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투자협정 협상 가속화, 물류협력 증진 등이 포함되었다.³⁵⁾

아세안+3 정상회의의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간 합의 아래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지속적으로(제8차 정상회의 이후 2009년, 2010년, 2011년에 개최) 개최되고 있다.³⁶⁾

나.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의 전개 및 성과

2007년에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합의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독립적으로 역사적인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진 시점에서 개최된 회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극복 관련 의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첫 단독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총 4개의 문건을 채택하였다. 먼저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or Tripartite Partnership)’에서는 개방성, 투명성, 상호신뢰, 공동이익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3국 협력의

35) 외교통상부(2012a), p. 22.

36) 2009년, 2010년, 2012년에 각각 개최된 바 있는 아세안+3 틀 내 3국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외교통상부(2012a), pp. 22~23 참고.

5대 기본원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3국 내 개최 정례화 등에 대한 합의내용이 명시되었다. 그 밖에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Economy)’에서는 금융위기 공조 방안이,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for Promoting Trilateral Cooperation)’에서는 아세안+3 계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문서에 근거하여 24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현황과 2~3년간의 중·단기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3국 정상은 3국간 FTA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력 체결 교섭 가속화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외교장관 및 차관보 회의의 정례 개최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Trilateral Joint Announcement on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에는 재난관리 협력 증진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 명시되어 있다.³⁷⁾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1999년 제1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담긴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rilateral Cooperation)’과 환경, 순환경제, 과학기술, 에너지, 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두 문건

37)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08) 참고.

이 채택되었다. 특히 무역·투자 분야에서 민간 차원에서 수행하던 한·중·일 FTA에 관한 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켜 추진시키는 데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그 밖에 성과로는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의 첫 연계 개최,³⁸⁾ 한·중·일 협력 사이버 사무국 개설에 대한 합의 등을 들 수 있다.³⁹⁾

2010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협력 비전 2020(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이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의 비전과 구체적 주요 실천과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 회의를 통해 제안된 신규 협력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치안 협의체 구축, CAMPUS Asia 시범사업 추진, 녹색경제 세미나, 순환경제 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 등이 있다.⁴⁰⁾ 또 다른 성과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Memorandum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를 체결함으로써 3국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상설 사무국인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 외에도 ‘표준협력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tandards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과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Strengthening Science and Innovation Cooperation

38) 제4장 2절 참고.

39)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09) 참고.

40) 외교통상부(2012a), p. 18.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승인하였다.⁴¹⁾

2011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제4차 정상회의에서는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협조체제와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응체제 구축이 주요 논의 의제 중 하나였다. 이를 반영하여 3국 정상은 정상선언문과 함께 '재난관리 협력 문서(Cooperation on Disaster Management)',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Cooperation on Nuclear Safety)',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Cooperation toward Sustainable Growth through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총 4개의 문서를 채택하였다. 정상선언문에 명시된 경제분야 관련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2011년 이내 완료 및 3국 투자보호협정 협상의 조속한 합의 도출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확인한 데에 있다. 그 외 신규 협력사업으로는 아시아 정책대화구축, 2015년까지 3국간 관광객 2,600만 명 목표설정, 3국 차세대 우정회의(Youth Friendship Meeting) 일환으로 미래 포럼(Future Forum) 개최 등이 있다.⁴²⁾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Joint Declaration on the Enhancement of Trilateral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과 함께 '농업협력 문서(Joint Statement on Agricultural Cooperation)'와 '지속가능한 산림경

41)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10) 참고.

42)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11) 참고.

영, 야생생물 보호, 사막화 방지 협력 문서(Joint Statement of Cooperation o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ombating Desertification and Wildlife Conservation)'의 2개 부속문서가 채택되었다. 3국 투자보호협정 체결과 한·중·일 FTA 연내 협상 개시 선언이 이 회의를 통한 주요 성과로 지적할 수 있다.⁴³⁾

다. 아세안+3 체제와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의 비교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는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3국 정상회의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의 주요 목적은 동아시아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의 기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독립적 3국 정상회의는 3국이 아세안+3 회의와는 별도로 3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채널로서 의미가 있다. 둘째, 아세안+3 계기 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에서 개최된 반면,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온전한 3국간 정상회의로서의 의미가 있다.⁴⁴⁾ 셋째, 아세안+3 체제하에서의 정상회의는 상설 사무국이 아닌 '3자 위원회'를 통해 의제 조율 과정이 이루어진 반면, 독립적 정상회의에서는 사이버 사무국(2008~09년 논의)에 이어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을 통해 한·중·일 협력체계의 틀을

43)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12) 참고.

44)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순서로 의장국을 맡았으나, 독립적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의장국 순서가 일본, 중국, 한국으로 바뀌었다(외교통상부 2012a). 따라서 외교통상부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한·중·일 3국을 지칭할 때 '일·중·한' 혹은 '한·일·중'으로 지칭하나, 이 보고서에서는 '한·중·일'로 통일시키고자 한다.

표 3-1.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독립적 3국 정상회의 비교

항목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	독립적 3국 정상회의
1.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최초 개최 ○ 총 11차례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2월 최초 개최 ○ 총 5차례 회의 개최
2. 개최지/의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회원국에서 개최 ○ 중국→한국→일본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국, 한국 순차적 개최 ○ 일본→중국→한국 순
3. 개최 형식/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3 정상회의의 참석기간 내 개최 ○ 하루에 걸쳐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회의, 3국 정상회의, 부대행사 ○ 2010년 이후 양일에 걸쳐 개최
4. 채택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협력에 관한 3국 공동선언문 ○ (2004) 3국 협력 행동전략 ○ (2007) 공동언론발표문 ○ 3건의 실적보고서 (2004, 2005~06, 2007) ○ 총 6건의 문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이상 '08년 채택) ○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 (이상 '09년 채택) ○ 3국 협력 비전 2020 ○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 표준협력 공동선언 ○ 과학혁신 강화 공동선언(이상 '10년 채택) ○ 정상선언문 ○ 재난관리 협력 문서 ○ 원자력 안전 협력 문서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협력 문서(이상 '11년 채택) ○ 공동선언문 ○ 농업협력 문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야생생물 보호, 사막화 방지 협력 문서 ○ 실적보고서(2008~11) 채택(이상 '12년 채택) ○ 총 17건의 문서 채택
5. 상설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사무국은 없음. ○ 3자 위원회가 동일 기능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사무국 시도(1~2차 회의) ○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창설(2011)

자료: 외교통상부(2012a) 참고하여 필자 작성.

구축하였다. 넷째, 아세안+3 계기 정상회의에서는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3건의 문서가 채택된 반면, 독립적 3국 정상회의에서는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15건의 정상선언문 및 부속서를 채택함으로써 각의 제별로 좀더 구체화된 협력과제의 도출에 합의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 다

섯째,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에 근거하면 아세안+3 정상회의는 주로 경제, 사회문화, 국제사회 부문 중심의 논의 및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다. 여섯째,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는 아세안+3 정상회의의 참석을 겸하여 하루에 걸쳐 수동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반면, 독립적 3개국 정상회의는 양일에 걸쳐 개최되고 있으며 3국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양자회의 및 부대행사(Oriental Images 전시회 2009;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서명식과 3국 합동 콘서트 2010; 3국 합동 공연 및 전통공예 전시회 2011)를 함께 개최하는 등 규모가 커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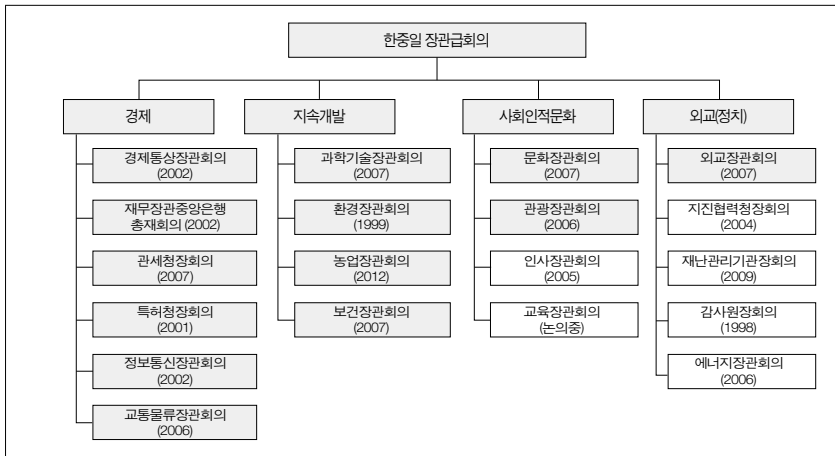
2. 한·중·일 장관회의

2012년 7월 현재 한·중·일 3국에서는 독립적 정상회의 아래 11개의 우선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18개의 최고 고위급회의(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그림 3-1 참고).⁴⁵⁾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18개 고위급회의 중 경제부처 주관,⁴⁶⁾ 경제부처와 관련된 회의의 이행 현황 및 개최 성과 등을 ① 경제, ② 지속개발, ③ 사회·인적·문화 ④ 외교(정치)의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5) 외교통상부(2012a), p. 11.

46)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협의체인 대외경제장관회의(2012년 10월 22일)에 참석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경제부처로 분류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3-1. 한·중·일 장관급회의의 주요 부문별 현황



주: 1) 제1차 회의 개최연도를 괄호 안에 표시함.
 2) 이 보고서에서 언급할 경제협의체 관련 한·중·일 장관급회의는 음영 처리함.
 자료: 외교통상부(2012a)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가. 경제부문 한·중·일 장관회의의 개최와 성과

경제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중·일 장관급회의는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관세청장회의, 특허청장회의, 정보통신장관회의 및 교통물류장관회의로 총 6개가 있다.

1)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제1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Trilateral Economic and Trade Ministers Meeting)는 2001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결과를 근거로 2002년 9월에 개최되었다. 한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중국 상무부장,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 회의는 2009년까지 아세안+3 계기에 9~11월 사이에 개최되어 왔으나, 2010년

부터는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와 개최시기를 연계시켜 4~5월 사이에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차례 개최된 경제통상장관회의 의제는 크게 ① 한·중·일 FTA(산·관·학 공동연구)와 한·중·일 투자보호협정, ② 지역, 글로벌 협력, ③ 기타 협력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9차 회의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와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이 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합의와 투자보장협정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 합의사항으로는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성과 환영,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시범사업 구축에 대한 합의 및 3국이 개최하는 국제행사 협조 요청 등이 있었다.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는 3국 경제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3국 간 협의채널 중 최고위급 협의체이나, 그동안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해 왔다. 첫째, 이 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소관부처의 불일치로 구체적인 합의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시범사업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관련 의제 논의에서 드러난다. 이 두 사업의 한국 측 소관부처는 지식경제부이나,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의견 조율, 합의 결정, 그리고 후속조치의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⁴⁷⁾ 둘째, 한·중·일 3국

47) 한·중·일 3국간 협력채널이 없는 지식경제부는 제1차 정상회의(2008년)와 제5차 정상회의(2012년)에서 중국의 공업신식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함께 별도의 산업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하지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아세안+3 통상장관회의와는 달리 사전회의의 준비 차원으로 의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제1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Trilateral Finance Ministers Meeting)는 2000년 9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개최되었다. 이후 3국간 경제·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한·중·일 정상회의(브루나이)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제2차 회의부터 정례화되었다.⁴⁸⁾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2012년부터)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3국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2012년 제12차 회의까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틀 내에서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개최지 또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또는 ADB 총회와 연계되어 열리고 있다. 주요 논의 의제는 ① 글로벌 및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② 역내 경제안정을 위한 3국 경제동향 및 주요 정책 이슈 논의 등이 있다.

이 회의는 아세안+3 틀 내에서 개최되고 있어 아세안+3 회의 관련 현안의 사전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성격이 강하다.⁴⁹⁾ 예를 들면, 제9차 회의에서 3국은 CMI 다자화 체제 관련 한·중·일 분담금(전체 1,200억 달러의 80%, 960억 달러)에 대한 분담 비율(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1:2:2

만 일본 경산성의 경우 이미 통상장관회의를 통한 3국간 협의체널이 있어 이 제안에 회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중·일 경제 통상장관회의 담당 사무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4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3).

4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7).

비율)에 합의하고 역내 경제감시기구(AMRO)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치앙마이 다자화 설립을 위한 실질적 합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2010년 3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 설립에 일조하였다. 제10차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감시기구(AMRO)의 소요비용을 CMIM과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CMIM에 위기에방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어 제11차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감시기구(AMRO)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2012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3국간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도출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거시경제상황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둘째, 외환보유액 투자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3국간 국채투자 증진, 정보교환 등 3국 국채투자 기본 틀에 합의하였으며, 상호 국채투자 관련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 및 절차를 실무진급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한·중·일 관세청장회의(Tripartite Customs Heads Meeting)는 2003년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 중 “3국은 관세당국간 무역축진을 위한 협력활동 강화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2007년 4월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한국 관세청장과 중국 해관총서장, 그리고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3국의 경제 활성화와 3국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보호, 조사단속 협력, 공인경제운영자(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⁵⁰⁾제도 상호인정, 인적자원 개

발,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등의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11월까지 총 4차례 개최된 관세청장회의는 2009년부터 격년
에 한 번 개최하게 되었으며, 일본, 한국, 중국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다.
제1차 회의(2007년)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⁵¹⁾, 제2차 회의(2008년)에서는 ‘친환경 관세행정 이니셔티브
(Green Customs Initiative)’⁵²⁾, 제3차 회의(2009년)에서는 3국 관세당
국간의 협력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한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이
채택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2011년 제4차 관세청장회의에서는 향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을 채택하
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행동계획에는 관세청장회의 및 실무자
회의의 제도화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조사실무 협력, AEO제도의
상호인정, 인적자원 개발, 세관절차에 관한 협력 등 3국 관세당국간 제반
협력사업의 비전과 추진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⁵³⁾

50) 공인경제운영자란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관세청 보도
자료(2008).

51) Fake Zero Project는 세관당국이 위조상품을 단속한 경우 관련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
는 정보교환 약정, 참여국의 지재권 보호제도 및 단속전략의 공유, 지재권 홍보협력, 지
재권자와의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 보도자료(2008).

52) 제2차 회의에서 제안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환경위해물품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 친환경 수출입 기업에 통관 편의
를 제공하는 세관 인증제 도입 등이 있다. 관세청 보도자료(2008).

53) 관세청 보도자료(2011).

4)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한·중·일 특허청장회의(Trilateral Policy Dialogue Meetings Among KIPO, SIPO and JPO)는 2000년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2001년 9월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의 특허청장(KIPO), 중국 지식산업국(SIPO), 일본 특허청장(JPO)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 회의는 2001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회의는 각국 특허청의 효율성 증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회의에서 3국간 공조체제 구축 및 국제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교환과 심사 결과의 상호인정 등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에 관한 논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11차 3국 특허청장회의(2011년 12월)에서는 최초의 ‘한·중·일 지재권 협력선언문’ 채택을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3국간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3국간 지재권 분야 협력을 가속화시키는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협력선언문에는 특허심사 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⁵⁴⁾ 그 밖에 3국간 실용신안⁵⁵⁾제도 공동연구 수행, 3국 특허협력 로드맵(2007년) 갱신, 한·중·일 디자인 포럼 정례화, 선진 5개 청간 심사관 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54)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issuefocus/pdf/PDF_111223/pdf_20111223_2.pdf) 참고.

55) 실용신안(utility model)이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한·중·일의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전 세계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개국간 제도운영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외국 진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성을 참작하여 3국간 공동연구에 합의한 바 있다.

5)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East Asia (CJK) ICT Summit)는 2000년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이 3국 IT 국장급회의를 제안함으로써 대화채널 구성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후 한·중·일 3국은 2002년 제16차 ITU 전권회의 기간 중에 제1차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를 모로코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3국은 2003년 제2차 장관회의를 계기로 이 회의를 ‘East Asia(CJK) ICT Summit’로 명명하고 상설 협의체로 격상시켰으며, 2004년 제3차 회의에서는 수시로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합의된 협력과제의 사후관리 등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국제협력 실무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설치하였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중국 공업정보화부(전 신식산업부) 장관, 일본 총무성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 장관급회의는 동북아의 IT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3국간 차세대 IT기술 및 표준분야 협력을 통한 첨단 IT기술과 서비스 관련 세계시장 선점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2002년 3국이 합의한 5대 우선협력 분야 중 하나로, 2004년 제3차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05년 예정이었던 회의는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당초 2008년 11월 예정이었던 제5차 회의의 지연 사유는 한국 측 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2008년 2월), 중국 측의 쓰촨 성 대지진(2008년 5월) 복구, 일본 측의 정권교체(2009년 8~9월) 등이 있었다.⁵⁶⁾ 제4차 회의

56)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0).

표 3-2.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

회차	의장국 (개최지)	개최 연월	주요 내용
1차	중국 (모로코)	2002년 10월	-통신규제정책 정보교류, 3G 이동통신 표준화 연구개발, IPv6,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협력,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지원, ICT업체 및 연구기관 공동 ICT 회의 개최 합의
2차	한국 (제주)	2003년 9월	-한·중·일 ICT 협력약정 체결 -6개 실무 협의체 구성
3차	일본 (삿포로)	2004년 7월	-한·중·일 ICT 협력약정 개정 -국제협력 실무협의체 신설 -RFID 및 센서 네트워크 관련 실무협의체 신설
4차	중국 (샤먼)	2006년 3월	-한·중·일 통신장관회의의 국제협력 실무협의체 구성과 기능 규정한 권한위임 규정 채택 -6개 협력프로그램 채택(중국주도)
5차	한국 (쿠알라룸푸르)	2011년 1월	-한·중·일 ICT 협력약정 개정 * 8개 실무협의체에서 국제협력 실무협의체 중심 협력체계 개편

주: 제5차 정보통신장관회의는 제5차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의 계기로 개최됨.
 자료: 외교통상부(2012a).

(2006년)까지 3국은 3G 및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TV 방송, 통신망 안전 및 정보보호, 공개 소프트웨어(SW), 통신서비스 정책 (이상 제2차 회의에서 합의), 무선인식(RFID) 및 센서 네트워크, 국제협력(이상 제3차 회의에서 합의) 총 8개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3국 협력 논의를 진행시켜 왔으며, 2011년 제5차 회의를 계기로 국제협력실무협의체로 협력체계를 개편하였다. 제4차 장관회의에서는 중국 주도로 ① 대아세안 인력양성 프로그램, ② 전자태그 기술관련 협력, ③ 4G 핵심기술 표준화 연구, ④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정보공유 메커니즘 강화, ⑤ 공개 소프트웨어 표준화 연구, ⑥ 국제 인터넷 접속요금 정산모델 연구의 6개 협력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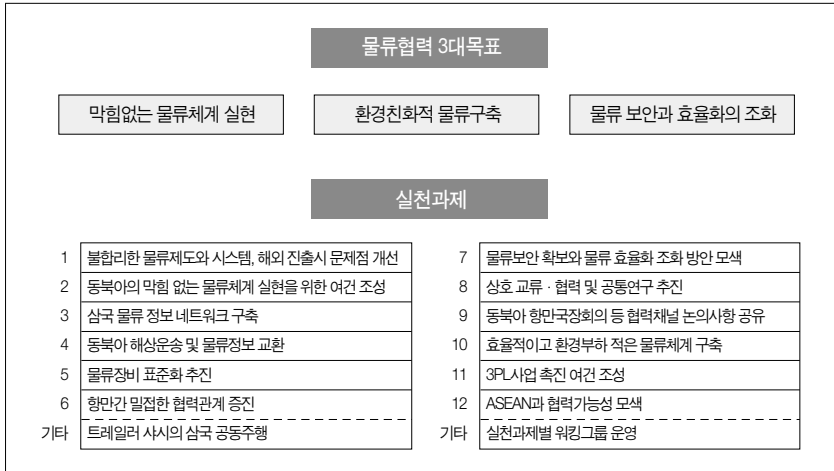
6)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Trilateral Ministerial Conference on Transport and Logistics)는 2005년 한·일, 한·중 장관회의에서 한국 측의 제안으로 2006년 9월에 처음 개최되었다. 한국 국토해양부 장관,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이 회의는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3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2006년 제1차 회의에서 동북아 물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12개의 실천과제를 채택했다면, 2008년 제2차 회의에서는 논의 의제를 해상운송 중심에서 도로, 철도, 항공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장관회의의 물류협력 3대 목표 선정에 합의하는 등 3국 물류협력체제의 기본을 다졌다. 이어 2010년 제3차 회의에서는 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NEAL-NET: 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를 구축하자는데 합의하였으며, 육상해상 복합운송 시범사업과 RFID를 활용한 화물위치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등 구체사업을 발굴, 실천하였다.⁵⁷⁾

2012년 7월에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물류협력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EAL-NET 물류정보 교환 및 적용 항만과 참여기업 확대, 재활용 팔레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와 시범사업 실시, 물류장비 표준화 등을 위한 공동노력, 물류기업 투자 가이드북 작성 등과

57) 3국 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NEAL-NET)는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물류 정보화의 수준 개선을 목표로 물류주체에 대해 다자간 접속 플랫폼과 단일 정보교환 표준을 생성하여 화물추적 정보, 수출입 화물 정보, 선사 및 터미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지칭한다. 회의 합의내용에 근거하여 3국은 2010년 12월 한·중·일 교통물류발전포럼을 계기로 구축 양해각서(MOU) 체결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0, 2012).

그림 3-2.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3대 목표 및 12개 실천과제



자료: 외교통상부(2012a), 『한·중·일 협력개황』.

함께 3국간 공동연구 체계화를 목적으로 공동연구 수행지침 마련에 합의 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⁵⁸⁾

나. 지속개발 부문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지속개발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중·일 장관급회의는 과학기술 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농업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총 4개가 있다.

1)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Trilateral Meetings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는 2002년에 개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한국

58)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2).

표 3-3.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개최내용

회차	개최지	개최 연월	주요 합의내용
제1차	한국 (서울)	2007년 1월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정례적 개최 및 공동연구 등 3국간 협력분야 확대 합의
제2차	일본 (동경)	2009년 5월	한·중·일 협력이슈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합의, 청년과학자 워크숍 매년 개최 합의
제3차	중국 (상해)	2012년 4월	한·중·일 공동연구 협력프로그램 지원강화 및 신규 협력분야 선정, 기초과학 분야 연구협력 등 신규 협력사업 제안 등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측의 주도로 2007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일본의 문부과학성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 회의는 3국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후 2009년 5월 제2차 회의를 거쳐 2012년 4월 회의까지 총 세 차례의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표 3-3 참고).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합의내용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Joint Research Collaboration Program)과 A3(아시아 3국) Foresight Program(이하 A3)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JRCP는 2009년 제2차 장관급회의 합의를 근거로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수자원 관리, 재난방지, 환경 등 3국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 대처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연구재단(NRF), 중국과학기술부(MOST),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3국의 JRCP 과제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과제당 연간 5천만 원 내외, 최대 3년 지원해 주는 규모이나, 3국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A3의 경우 한국연구재단(NRF),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일본학술진흥회(JSPS) 등을 중심으로 특정 연구분야에 대해 3국의 연구집

표 3-4. A3 Foresight Program 지원 예산 및 과제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과제수	1	3	5	7	8	9	33
예산	70	230	380	530	630	740	2,58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단간 공동세미나 등 긴밀한 기술적 협력과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선정된 지원 연구분야는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후변화, 재료분야(advanced materials), 암 유전학(cancer epigenetics),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네트워크 및 안보 등이었으며, 지원 과제수 및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표 3-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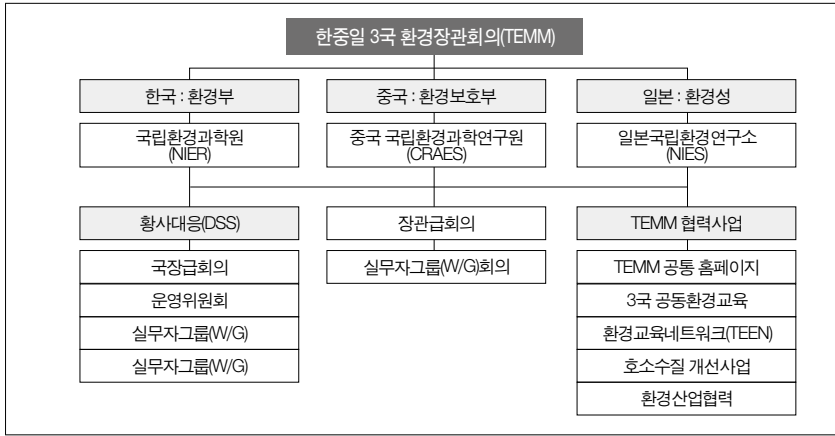
2012년 4월 개최한 제3차 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공동연구협력 프로그램(JRCP)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3국의 젊은 연구자간 교류기회 증진을 위해 2010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청년과학자 워크숍을 매년 순환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⁵⁹⁾ 이 장관급회의는 양자회담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한국 환경부 장관,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 일본 환경성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는 1999년 제1차 회의 개최 이래로 매년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까지 총 14차례 개최되었다. 2010년 제

59) 한·중·일 청년과학자 워크숍은 2010년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처음 개최된 바 있으며, 2차 워크숍은 2012년 제3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동정자료(2012).

그림 3-3.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요



자료: 환경장관회의 홈페이지(www.temm.org) 참고.

12차 환경장관회의(일본)에서 10대 우선협력 분야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로 이 분야에 대한 추진 경과를 매년 장관급회의에서 점검하고 있다. ① 환경교육, 환경인식 및 대중의 참여, ② 기후변화, ③ 생물다양성, ④ 황사, ⑤ 오염관리, ⑥ 환경친화적 사회·3R·건전한 자원순환사회, ⑦ 전자폐극물의 국가간 이동, ⑧ 화학물질 관리, ⑨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⑩ 환경산업 및 기술 등이 이에 포함된다. 3국 장관급 대화채널 아래 3국은 공동환경인력양성프로젝트(Joint environmental Training Project), 3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순환경제/3R/건전한 자원순환사회 세미나, 황사 관련 공동연구, 화학물질 관련 3국간 정책적 담화, TEMM 웹사이트 등의 구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⁶⁰⁾ 또한 연례적 3국 공동합의문 채택 등의 성과를 살펴보았을 때, 한·중·일 3국간 환경 협의채널은 이미 괄목할 만한 체계화가 이루어졌

60) 자세한 사항은 <http://temm.org> 또는 TEMM(2010) 참고.

다고 판단된다(그림 3-3 참고).

2012년 5월 개최한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국내·지역적·지구적 환경정책 공유, 10대 우선협력 분야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졌으며,⁶¹⁾ 환경라벨 이행협약 서명식 등의 성과가 있었다.

3)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한·중·일 농업장관회의(Trilateral Agricultural Ministers' Meeting)는 2009년 1월 한국 측에 의해 제안된 이후 아세안+3 차원에서 일련의 사전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여 2012년 4월 한국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중국 농업부장,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 회의는 국제적·지역적 이슈에 대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행사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 동식물 전염병 대응, 연구자 교류, 경제 파트너십, 글로벌 및 지역 협력, 자연재해 대응 등 6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장관급회의의 연례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차기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⁶²⁾

4)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는 2007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계기로 마련된 장관급 대화채널로 한국의 보

61)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China, Japan and Korea(2012); TEMM 홈페이지 참고.

62)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

표 3-5.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요약

회차	의장국 (개최지)	개최 연월	개최 성과
제1차	한국 서울	2007년 4월	- AIFI 대응 한·중·일 MOU 체결 - 보건장관회의의 연례화 - 한·중·일 보건부 고위공무원 회의 설치 - 주요 의제: 임상연구, 재난대비 및 전통의학 분야 - 한·중·일 PI 청정 삼각지대 구축 위한 기금 조성 * '08년부터 각국 매년 33만 달러 자체 확보, 공동프로그램 진행
제2차	중국 북경	2008년 10월	-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응을 위한 3국간 공동행동계획 채택 - 주요 의제: 식품안전 대책, 국가 암관리 및 치료, 임상연구, 고령친화 사업 육성 - 제3차 보건장관회의의 정식 의제로 식품안전 포함
제3차	일본 동경	2009년 11월	- 3국간 식품안전 의제에 대한 MOU 체결 - 주요 의제: 신종플루 역내 공동대응, 식품안전, 재난대비, 동북아 지역 보건의료분야 협력 - 향후 3국간 공동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제 마련 - 한·중·일 신종 인플루엔자 평가 세미나 개최 합의(2010.3.18.)
제4차	한국 제주	2010년 11월	- 개도국 모자보건 지원을 위한 3국 공동협력 합의 및 공동선언문 채택 - 주요 의제: 신종 전염병 공동대응 강화, 식품문제 발생 시 타방 신속 통보, 의약품 임상연구 및 재난대응 대비 협력 강화, 개도국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3국 협력방안 지속 모색
제5차	중국 칭다오	2011년 11월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가 제5차 보건장관회의의 정식 의제로 포함

자료: 외교통상부(2012a).

건복지부 장관, 중국의 위생부장, 일본의 후생노동성 대신이 참석한다. 2007년 제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한국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정례화되어 매년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순환 개최되고 있다.⁶³⁾ 2011년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의제는 재난 대응,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응, 의약품 임상연구(clinical research), 식품안전(2009년 신규),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 ODA 사업 공동협력(2010년 신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

6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리(2011년 신규) 등 동북아 지역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이다.

다. 사회·인적·문화 부문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사회·인적·문화 분야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는 문화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인사장관회의 총 3개가 있으며, 교육장관회의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장관급회의 중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회의를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3-6.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내용 요약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행동계획
개최	2007년 (중국 난퉁)	2008년 (한국 제주)	2011년 (일본 나라)	2012년 (중국 상하이)
협력 방향	문화다양성 원칙에 입각, 3국 문화전통 보호와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문화예술, 산업, 유산 분야의 교류 및 협력내용 구체화, 3국 문화 대외홍보를 위한 협력 강화	3국 문화협력에 대한 국민차원 상호이해 증진, 각국 국민문화 향유권 증대	제1~3차 회의 성과 구체화, 평화우호, 평등호혜, 협력강화, 공동발전 원칙
문화 예술	청소년 문화교류	문학,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에서 공동창작 및 인적교류	공동제작사업 강화, 민간주도 문화교류사업 지원, 3국 각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개최, 관광진흥	동아시아 문화예술도시 행사 개최,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예술제 개최, 문화예술교육 교류협력 강화, 청소년예술가 교류행사 지원
문화 산업	지적재산권 보호	저작권 교류, 협력 강화	저작권 보호, 정규 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한 협조	문화산업포럼 개최 지원, 문화기업간 상품개발, 마케팅, 사후관리 등 분야 교류협력 확대 지원, 애니메이션, 게임 등 신산업 교류협력 강화
문화 재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위한 문화 및 학술분야 협력	아·태무형문화유산 센터 설립 협조, 문화유산 보호기술 공동개발 및 공유	박물관 차원의 교류 확대, 무형문화유산 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센터 설치 위한 연계 긴밀화	자국 문화유산 보호, 개발 및 관련사항 공유, 박물관간 교류협력 강화, 무형문화유산 교류협력 강화

자료: 정정숙(2012)을 바탕으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0, 2012)를 참고하여 작성.

1)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국 문화부 부장,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9월 처음 개최되었다.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고 있는 이 장관급 협의채널은 2012년까지 총 네 차례 개최된 바 있다.

2011년 제3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까지 3국 장관은 3국간 문화교류 협력 확대의 필요성 및 협력 방향과 비전을 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3-6 참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3국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총 9개의 단기과제에 대한 합의내용이 담긴 ‘상하이 행동계획(2012~14년)’을 채택함으로써 3국간 문화협력 방안을 한층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행동계획에는 ① 동아시아 문화예술도시, ②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예술제, ③ 한·중·일 정상회담 연계, 문화행사 정례화, ④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호와 협력 추진, ⑤ 문화산업 교류협력 강화(특히 신흥 산업), ⑥ 문화예술교육 교류협력 강화, ⑦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협력 강화, ⑧ 청소년 교류 지원, ⑨ 국장급 실무회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한·중·일 관광장관회의(Trilateral Tourism Ministers' Meeting)는 200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관광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근거로 2006년 7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1년까지 매년 총 6차례 회의를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개최해 왔으며, 2011년

이후로는 격년에 한 번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국 국가여행국장,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정부뿐 아니라 관광업종별 협회 등 관광관련 기관에서도 함께 참석하고 있다. 이 장관급회의에서는 역내 관광확대 및 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당국 및 관광사업간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공조 강화, 관광교류 범위의 확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최된 2011년 5월 제6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는 ① 관광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② 관광비전 2020(Tourism Vision 2020) 세부내용 수립, ③ 공정관광 이니셔티브 체결, ④ 한·중·일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추진의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평창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현재까지의 이 장관급회의에서는 북경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신종 인플루엔자 등 시기별 중점과제와 청소년 교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면모를 볼 수 있다. 한·중·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한·중·일 관광루트 10선 공동추진’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제안된 바 있으나, 3국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저가항공 및 항공자유화 등 한·중·일 관광교통 연계망 확대, 공정관광 이니셔티브 구축을 통한 저가 덤핑상품 및 불공정거래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한·중·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관광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논의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⁶⁴⁾

64)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담당 사무관 면담 내용(2012. 2. 6).

3) 한·중·일 교육장관회의 구축 추진

교육분야에서는 3국간 장관급회의가 아직 개최되고 있지 않다. 2012년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교육장관회의 구축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장급에서 협의 중에 있다.

라. 외교부문 한·중·일 장관회의 개최와 성과

외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일 장관회의는 외교장관회의, 지진협력청장회의, 재난관리기관장회의, 감사원장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외교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3국 외교장관(한국의 외교장관, 일본의 외무대신, 중국의 외교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약 한 달 전에 개최되고 있다. 2001년 제2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03년 제5차 정상회의 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후속조치로 3국 외교장관이 주재하는 3자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7년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되면서 한국 측의 제안으로 2007년 6월 다시 제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⁶⁵⁾

3자 위원회와 3국 외교장관회의 모두 각국 외교장관이 수석대표로 참

65) 외교통상부(2012a), p. 24.

석하는 대화채널이다. 다만, 3자 위원회는 아세안+3 계기 3국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어 개최지도 아세안+3 국가였다. 또한 주요 외교문제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3국 공동선언상 협력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협력사무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적보고서 (Progress Report) 작성 또한 당시에는 3자 위원회에서 작성하였다.

반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독립적 정상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서 열린다. 이에 따라 개최 국가도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3국 정상회의 협력의제 확정 기능뿐 아니라 외교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3.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한·중·일 3국간에는 7개의 고위급 실무자회의와 19개의 국장급 회의가 운영되고 있다.⁶⁶⁾ 이 보고서에는 경제 관련 회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경제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경제분야에서는 경제국장급회의,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중 국장급 회의, 국제국장회의, 국장급 표준협의회, IT국장급회의, 동북아시아 항만

66) 외교통상부(2012a), p. 11.

표 3-7. 3국 경제국장급회의의 개최 내용

회차	개최연월 (개최장소)	논의 의제
제1차	2002년 1월 (일본)	- WTO/DDA, APEC 등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3국 협력강화를 위한 의견교환
제2차	2002년 11월 (항저우)	
제3차	2003년 11월 (서울)	- WTO/DDA, APEC 등 다자간 무역체제 의견교환 - APEC에서 3국 협력방안 - 각국 FTA 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제4차	2004년 10월 (도쿄)	- WTO/DDA, ASEM 등 다자간 무역체제 의견교환 - 2003년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방안
제5차	2005년 11월 (북경)	- WTO/DDA, ASEM 등 다자간 무역체제 의견교환 - 2004년 행동전략 이행 - 3국 FTA 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제6차	2006년 11월 (서울)	- WTO/DDA, ASEM 등 다자간 무역체제 의견교환 - 2004년 행동전략 이행 - 3국 투자협력 협의

자료: 한·중·일 협력 사무국 홈페이지(www.tcs-asia.org) 참고.

장회의, 교통물류국장급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다.⁶⁷⁾

1) 한·중·일 경제국장급회의

한·중·일 경제국장급회의(Trilateral Economic Director-General Meeting)는 2002년 1월 일본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 일본의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중국의 상무부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는 이 회의는 2006년 11월까지 총 6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WTO/DDA, APEC 등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3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기 시작한 이 회의는 회의가 진행되면서 3국간 주요 무역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된 바 있다.

67) 이 중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회의 특성상 제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2) 한·중·일 국제국장회의

한·중·일 국제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의 국제금융국장들이 주요 국제금융 이슈 및 역내 금융협력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상시 협력체제이다. 제1차 회의는 한국 주도로 1999년 8월 한국 제주도에서 한·중·일 금융협력 세미나 기간에 비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한·중·일 금융협력 세미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3국의 국제금융연구소⁶⁸⁾ 주관 아래 3국의 국제금융 당국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역내 금융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3국 국제국장회의는 2000년 2월 2차 회의(일본)와 2001년 2월 3차 회의(중국)를 거쳐 2002년 제4차 회의(한국)부터 정례화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⁶⁹⁾

매년 1~2회씩 20여 차례 개최되어 온 국제국장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순번제로 의장국을 담당하며, 3국 및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현황과 각국의 정책대응에 대한 논의, 역내 금융협력 과제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 논의와 함께,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뒷받침하는 회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68) 한국은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 재무성 산하 재무총합정책연구소가 주관하였으며, 중국은 중국 계량경제기술연구소 등 연도별 사안에 따라 주관 연구원이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6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2).

3) 세관실무자회의 및 5개 분야 실무자그룹

세관실무자회의는 장관급회의인 관세청장회의상 합의된 협력사업 현황 점검, 논의의제 사전조율 등 3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한 달 안팎으로 진행되는 사전 준비격 회의이다.

세관실무자회의 외에도 3국은 관세청장회의 합의 아래 5개 분야에 실무자그룹(working group)이 개최되고 있다. 각 실무자그룹은 각국 관세청 과장급들이 참석하는 회담이다. 2007년 제1차 관세청장회의 결과 조사, 인적자원개발, 지적재산권 3개 실무자그룹이 설치되었으며, 2008년에 개최된 제2차 회의 결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실무자그룹이, 2011년 제4차 회의 결과에 따라 세관절차 실무자그룹이 설치되어 매년 운영되고 있다.

4) 한·중·일 국장급 표준협의회

한·중·일 국장급 표준협의회는 2010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표준협력 공동선언문’의 후속조치로 2010년 12월 처음 설치되었다.⁷⁰⁾ 한국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중국 국가표준화관리국(SAC), 일본 경제산업성(METI) 간 이루어지는 이 회의의 주요 논의 의제는 3국간 무역촉진 및 기술장벽 해소 등을 위한 ① 국제표준의 공동개발 및 3국 표준의 조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② 민간 전문가 교류활성화, ③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 확대개편 등에 있다. 특히 국가표준 체계가 다른 한·중·일 3국은 3국 산·관·학 조화표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70) 이 회의는 제4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동북아 표준협력포럼과 함께 개최되고 있다.

특히 제2차 국장급 표준협의체(2011년)에서는 한국 측 제안에 의해 2012년 2월 한·중·일 표준협의체인 ‘한·중·일 공동표준화 추진을 위한 연구그룹’을 설립하여 ① 공통표준화를 위한 공동연구 활동 지원, ② ISO, 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 협력방안 마련, ③ 국장급 표준협의체에서 정한 사항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정책결정 단계부터 실무진까지의 한·중·일 표준협력체가 완성되었으나, 장관급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어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⁷¹⁾

5) 한·중·일 IT 국장급회의 및 국제협력실무협의체 회의

한·중·일 정보기술(IT)국장급회의는 제2차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 협력약정 후속조치로 2004년 4월 제1차 북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중국에서 2011년 10월 제10차 한·중·일 IT국장급회의가 개최되었다. 3국간 공개SW 관련 동북아 협력체를 형성하여 EU 협력체와 같이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글로벌 영향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 회의는 한국의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 정책국장,⁷²⁾ 일본의 경제산업성 통상정보정책국장,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SW정보서비스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부대행사로 민간중심의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⁷³⁾

7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협의체 담당 사무관 면담 내용(2012. 7. 24).

72) 제6차 회의(2007년)까지는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 단장(국장급)이 수석대표였다. 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07b).

표 3-8.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 추진체계

조직	국장급 회의	포럼 의장단 회의	워킹그룹				사무국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비즈니스	
기능	방향 수립	사업 기획	사업 진행				집행 지원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

가장 최근 개최된 제10차 한·중·일 IT국장급회의에서는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정부 등 공개SW 관련 최신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술동향 연구에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그간 동북아 공개SW 포럼과 함께 운영되어 온 3개의 실무그룹에서 발굴된 성과 및 각국 공개SW 개별 성과물을 기반으로 한 3국간 공개 SW 기반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워킹그룹(application promotion working group) 신설과 함께 동북아 공개SW 활성화 포럼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⁷⁴⁾

국제협력실무협의체 회의는 2006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차세대 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 정보보호, RFID, 공개SW, 디지털TV/방송, 통신서비스 정책의 7개 실무협의체에서 진행되어 온 그간의 협력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협력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장관급 회의에 보고될 의제를 사전에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관회의의 준비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장관급회의 합의사항 후속조치로 설치한 7개 실무협의체는 2007년까지 구체적 협력방안들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73) 민간차원의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은 한·중·일 IT 국장급 회의와 함께 200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포럼 내에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이상 2005년 출범), 비즈니스분과(2011년 출범)의 4개 실무그룹(working group)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개SW활성화포럼 홈페이지; www.oss.kr 참고.

74)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⁷⁵⁾ 2011년 제5차 장관급회의에서는 3국 정보통신분야 대화채널을 장관급회의 아래 국제협력실무협의체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개편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6) 한·중·일 교통물류국 (과)장급회의 및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

한·중·일 교통물류국 과장급회의는 장관급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장관급회의와 함께 2007년 처음 설립되었다. 먼저 과장급회의에서는 차기 장관회의의 일정 및 부대행사 협의, 장관급회의에서 합의된 12개의 실천과제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 토론을 진행하며 동 내용을 보고서로 초안을 작성한다. 국장급회의는 과장급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지막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의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는 한·중·일 3국 항만 분야의 최고실무자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이다. 지난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년 10월까지 총 13회 개최되었다. 3국간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과 효율적 항만 및 컨테이너 운영방안 모색에 관한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는 이 회의는 교통물류장관회의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나, 교통물류장관회의의 12개 실천과제 중 ‘항만간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과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등 협력채널 논의사항 공유’ 등 항만 관련 두 가지 과제와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장관급회의에 보고

75) 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07a), 「한·중·일 동북아 IT허브 연락 강화키로: 한·중·일 차세대 이동통신/차세대 인터넷/RFID-센서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성공리에 개최」(1월 11일); 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07b), 「한·중·일 디지털TV/방송분야 상호협력 강화: 제4차 한·중·일 디지털TV/방송 실무협의회 개최」(11월 29일).

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지난 3년간 3국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항만 녹색전략’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연안 재난방지대책’ 완료 등이 있다.

나. 지속개발 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의 개최와 성과

지속개발 부문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는 과학기술국장급회의, 환경국장급회의, 황사대응국장급회의가 있다.

1) 한·중·일 과학기술국장급회의

과학기술국장급회의는 한·중·일 3국 과학기술협력협약체 설립 준비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2007년 제1차 장관급회의가 성사된 이후에는 격년에 한 번 개최되는 장관급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되고 있으며,⁷⁶⁾ 장관급회의의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 논의 및 향후 3국간 과학기술 협력의제 제안 및 토론을 진행한다.

2) 한·중·일 환경국장급회의, 황사대응국장급회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사전준비회의의 격으로 한·중·일 환경국장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1차 3국 환경국장급회의는 2009년 4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최된 회의는 제14차 환경장관회의의 사전준비를 위해 2012년 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

76) 단, 2011년에는 장관급회의, 국장급회의 모두 개최되지 않았다.

표 3-9. 한·중·일 과학기술국장급회의 동향

회의 차수	개최연월 및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02년 8월 / 북경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정례화, 포럼 개최 등 3국간 협력 증진방안 논의
제2차	2004년 3월 / 동경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신설, 공동연구, 대형 연구시설 공동활용, 과학기술포럼 개최 등 과학기술 협력방안 논의
제3차	2006년 8월 / 서울	제1차 장관급회의의 일정 등 협의, 3국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실무 논의
제4차	2008년 7월 / 북경	제2차 장관급회의의 일본 개최, 3국간 공동R&D협력사업(JRCP) 채택 합의
제5차	2010년 11월 / 제주	청년과학자 교류담당 전문기관 지정 및 홈페이지 구축에 합의, 녹색기술포럼 공동개최 합의, 공동연구 협력분야 논의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

일 환경국장급회의이다.⁷⁷⁾

한·중·일 황사대응국장급회의(Tripartite Directors-General Meetings on Dust and Sand Storms)는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황사문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황사대응 지역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2006년 제8차 환경장관회의 설치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다. 이 황사대응국장급회의의 아래 3국은 2008년 이래로 매년 황사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모색을 목적으로 황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네트워크, 황사 방지 및 통제에 대한 3국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3월 제1차 한·중·일 황사대응국장급회의의 개최 이래로 2010년 3월 기준으로 제5차 회의까지 진행된 바 있으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황사운영연구단은 2008년 이후 매년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3-3 참고).⁷⁸⁾

77) 한·중·일 협력 사무국 홈페이지(www.tcs-asia.org) 참고.

78)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2012a), p. 17.

다. 사회·인적·문화 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 자회의 개최와 성과

사회·인적·문화 부문과 관련해서 개최되고 있는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는 문화부국장급회의와 문화콘텐츠산업포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인사국장회의 등이 있다.⁷⁹⁾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 관련 협의체에 주력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한·중·일 문화부국장급회 및 문화콘텐츠산업포럼

한·중·일 문화부국장급회의는 장관급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장관회의 의제, 내용, 발언순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 의제 관련 막판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장관급회의 하루 전날 진행된다.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문화부,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심포지엄으로, 2002년 12월 중국 상하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3국 콘텐츠 산업 관련 3국간 정보교환 및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회의는 3국 정부 및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체계 공고화, 3국 콘텐츠 업계간 상호교류 활성화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는 3국 국장급 공무원, 질 보증(Quality Assurance) 기관 대표, 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등 3국의 고등

79) 외교통상부(2012a).

교육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CAMPUS Asia 사업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중국의 교육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CAMPUS Asia 사업을 주관한다. 2009년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북경)에서 채택한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에서는 3국 대학간 교류 지속시행에 대한 3국 정상간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0년 4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3국 대학간 학점인정 및 공동학위제도 프로그램 명칭을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이하 CAMPUS Asia)라 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실무위원회와

표 3-10. CAMPUS Asia 사업단

사업단(3국 대학간 컨소시엄)			프로젝트명
한국	중국	일본	
고려대	복단대	고베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
동서대	광둥외국어외무대	리츠메이칸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
부산대	상해교통대	규슈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 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그램
서울대	북경대	동경대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BESETO DDMP)
서울대	북경대	히토쓰바시대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ABLPL)
성균관대	길림대	오카야마대	동아시아 현안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 -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 모색
성균관대/ 서울대	인민대/칭화대 /상해교통대	나고야대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동법) 형성을 향한 법적·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포항공대/ 서울대	난징대/ 상해교통대	나고야대/ 동북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협력의 시작: 화학/소재 과학기술 영역의 개척
KAIST	칭화대	동경공업대	TKT CAMPUS Asia Consortium (*Tsinghua U-KAIST-Tokyo Tech간 연구중심 공동교육 프로그램)
KDI국제 정책대학원	칭화대	국립정책 연구대학원	동북아시아 정책학 컨소시엄 (*복수 석사학위 과정)

자료: 과학교육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질 보증(Quality Assurance)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질 보증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⁸⁰⁾

이어 2010년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이 시범사업 프로그램이 신규 협력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2010년 12월, 2011년 5월 각각 제2차, 제3차 CAMPUS Asia 전문가위원회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품질 보증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와 함께 시범사업 추진원칙, 절차 및 일정에 합의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표 3-10]과 같이 2011년 11월 10개의 사업단이 선정되어 2012년부터 출범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라. 외교부문 한·중·일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개최와 성과

1) 한·중·일 3국 고위급(차관보)회의

한·중·일 3국 고위급회의는 3국 외교당국간 주요 협의채널 중 하나이다. 2007년 1월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후 3국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매년 개최되고 있다(표 3-11 참고).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3국 정상회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회의 의제, 공동문서, 성과산업, 신규 협력산업 등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3국간 외교협력 분야에 관한 논의와 함께 각국 정치상황과 동아시아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2012년 기준으로 제7차 회의를 맞이한 3국 고위급회의는 2010년부터 별도의 3

80) 교육과학기술부(2010).

표 3-11. 한·중·일 고위급회의 개최

개최 차수	일시	장소	비고
제1차	2007년 5월	중국 북경	제1차 외교장관회의 준비
제2차	2007년 10월	한국 서울	제8차 아세안+3계 기 정상회의 준비
제3차	2008년 12월	일본 동경	제1차 별도의 정상회의 준비 및 3국 협의체 운영방식 논의
제4차	2010년 2월	중국 북경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점검 제3차 정상회의 준비(협력 사무국 한국 설치 내용 논의 등)
제5차	2010년 4월	한국 제주	제3차 정상회의/제4차 외교장관회의 준비(의제, 일정, 공동문서 등)
제6차	2011년 2월	일본 도쿄	제4차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
제7차	2012년 3월	중국 베이징	제5차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

자료: 외교통상부(2012a).

국 정상회의 사전준비회의로서의 협의채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한국의 외교통상부 차관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4. 한·중·일 협력 사무국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개국은 협회가 필요한 현안에 따라 18개 장관급회의를 포함한 50여 개 정부간 대화협의체와 100여 개 이상의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⁸¹⁾ 각 분야에 분포되어 있고 또 증가하고 있는 3국간 대화협의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발전을 위한 상설 사무국의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었다.

2009년 제2차 3국 정상회의 시 한국 측이 처음 제안한 상설 사무국 설립 논의는 이후 2010년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정부가 서

81) 외교통상부(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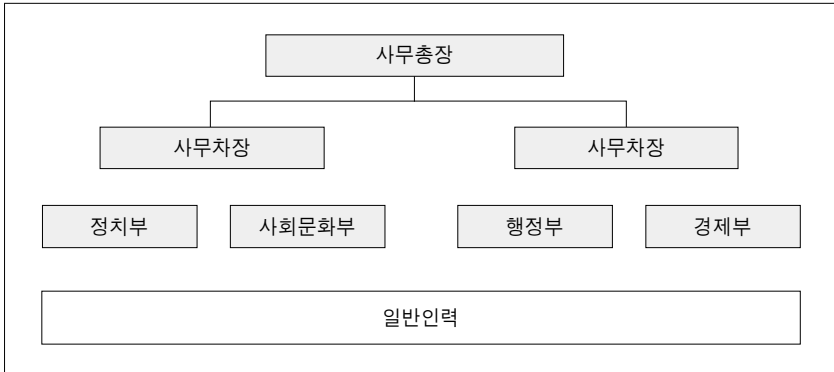
명한 ‘한·중·일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Memorandum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Governm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를 토대로 한·중·일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2011년 9월 대한민국에 설립되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3국 정상회의 및 기타 3국 대화채널 운영 및 관리,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 촉진을 통한 3국간 협력관계 심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구체적 기능으로는 ①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과 필요시 주요 대화채널 참석, ② 3국 및 필요에 따라 기타 국제기구와의 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③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이를 해당 대화채널에 보고, ④ 협력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간 실적보고서 결제 및 장관회의 시 제출, ⑤ 3국 협력 관련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활동 등이 있다. 종합해 보았을 때, 3국 협력사무국은 정부간 협력 및 통합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도적으로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출범한 지 약 2년이 지난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아직 초기 인프라 구축, 역할 정립의 단계에 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1명의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비롯하여 4명의 전문인력(참사관급 1명, 서기관급 3명)⁸²⁾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임직원이 정치부, 사회문화부, 행정부, 경제부의 4개의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3국 제반 협력 허브로서의 대내외 인지도 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등에

82) 외교통상부(2012a), p. 10.

그림 3-4. 한·중·일 협력사무국 조직도



자료: 한·중·일 협력 사무국.

참석 혹은 공동주최를 추진함으로써 사무국의 위상정립 및 3국간 주요 대화채널에 참석함으로써 3국 협력사업의 이행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권, 환경권과 같이 이미 체계화된 협의채널 및 표준화, 과학기술과 같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비교적 최근 구축된 농업, 물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⁸³⁾ 사무국이 지금까지 읊서버로서 참석한 바 있는 장관급회의로는 3국 외교장관회의, 재난관리기관장회의, 농업장관회의, 경제통상장관회의, 물류교통장관회의가 있다.⁸⁴⁾

한편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2012년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2008~12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또한 3국 정상회의 전에 열리는 외교장관회의에 읊서버로 참석하며, 이때 작성한 실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각종 3국 장관급회의에 참석함으로써 3국 협력에 원활로 역할이 기대된다.

83) 3국 협력 사무국 관련 분야 담당자와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작성(2012. 7. 26).

84)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2012b).

5. 평가: 성과와 보완과제

한·중·일 3국간 대화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전되어 왔다. 3국 정상회의의 경우 1999년 11월 제1차 정상회담 이후 2008년 12월에 독립적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장관급회의와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또한 1999년 환경 장관급회의 1개에서 2012년 현재 18개의 장관급회의⁸⁵⁾ 및 그 밖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3국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존재한다.

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와의 유기성

한·중·일 3국간 경제 관련 대화채널 13개는 정례화에 합의, 장관급회의 합의사항을 운영할 실무자그룹 설치 등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등 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하였으나,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간 유기적 연계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출범한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와 의장국(개최국), 개최시기 등이 연계되어 열리고 있는 회의는 외교통상부 소관인 외교장관회의⁸⁶⁾와 경제통상장관회의⁸⁷⁾ 두 장관급회의에 국한되어 있다. [표 3-12]

85) 외교통상부(2012a)에서는 18개의 장관급회의가 개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에너지 장관회의의 경우 참여국이 한·중·일만이 아닌 미국과 인도를 포함한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마저 2010년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86) 외교장관회의의 사전준비회의격인 고위급(차관보)회의 또한 개최장소와 의장국 및 시기 모두 독립적 3국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개최되고 있다.

87) 2009년 제6차 경제통상장관회의만이 독립적 3국 정상회의와 의장국, 개최시기, 개최장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회의 의장국(중국)과 경제통상장관회의 의장국(일본)이 일치하지 않았다.

표 3-12.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주요 장관급회의 개최시기 및 의장국 비교

연도	정상 회의	경제 통상	재무	관세 청장	특허 청장	교통 물류	정보 통신	과학 기술	환경	보건	농업	문화	관광	외교
1999	11월								1월 (한국)					
2000	11월 (한국)		9월 (중국)						2월 (중국)					
2001	11월 (일본)				9월 (일본)				4월 (일본)					
2002	11월 (중국)	9월 (중국)	5월 (한국)		11월 (한국)		10월 (중국)		4월 (한국)					
2003	10월 (한국)	9월 (한국)	7월 (일본)		11월 (중국)		9월 (한국)		12월 (중국)					
2004	11월 (일본)	9월 (일본)	5월 (중국)		11월 (일본)		7월 (일본)		12월 (일본)					
2005			5월 (한국)		12월 (한국)				10월 (한국)					
2006	07.1월 (중국)	12월 (중국)	5월 (일본)		12월 (중국)	9월 (한국)	3월 (중국)		12월 (중국)				7월 (중국)	
2007	11월 (한국)	11월 (한국)	5월 (중국)	4월 (일본)	12월 (일본)			1월 (한국)	12월 (일본)	4월 (한국)		9월 (중국)		6월 (한국)
2008	12월 (일본)		5월 (한국)	11월 (한국)	09.3월 (한국)	5월 (일본)			12월 (한국)	10월 (중국)		12월 (한국)	6월 (한국)	6월 (일본)
2009	10월 (중국)	10월 (일본)	5월 (일본)	9월 (중국)	12월 (중국)			5월 (일본)	6월 (중국)	11월 (일본)			10월 (일본)	9월 (중국)
2010	5월 (한국)	5월 (한국)	5월 (중국)		12월 (일본)	5월 (중국)			5월 (일본)	11월 (한국)			8월 (중국)	5월 (한국)
2011	5월 (일본)	4월 (일본)	5월 (한국)	11월 (일본)	11월 (한국)		1월 (한국)		4월 (한국)	11월 (중국)		1월 (일본)	5월 (한국)	3월 (일본)
2012	5월 (중국)	5월 (중국)	5월 (일본)			7월 (한국)		4월 (중국)	5월 (중국)		4월 (한국)	5월 (중국)		4월 (중국)
횟수		9회 (매년)	12회 (매년)	4회 (격년)	11회 (매년)	4회 (격년)	5회 (비정기)	3회 (격년)	14회 (매년)	5회 (매년)	1회 (매년)	4회 (매년)	5회 (격년)	6회 (매년)

주: 1) 2012년 7월 기준.

2) 의장국을 괄호 안에 표시함

3) 제1차 회의를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외교통상부(2012a);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 중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는 외교와 경제통상 분야 이외에도 재무, 특허, 환경, 보건, 농업 등의 분야가 있으나, 의장국(개최국)은 3국 독립적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운

영되고 있다. 이는 재무장관회의의 경우 여전히 아세안+3 회의 체제 아래 개최되며, 그 외 장관회의의 경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강한 것에 기인한다.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좀더 체계화·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가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개최국(의장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장관급회의의 개최시기를 독립적 정상회의의 시기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 3국간 정상회의와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의 유기적 운영은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의제를 발굴, 선정하고, 신규 및 기존 협력사업의 추진력을 확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장관급회의의 의장국(개최국) 및 개최시기 통일은 기존 장관급회의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나. 대화채널 구성 및 운영

3국간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관련 대화채널을 장관급회의와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로 나누어 그 진행현황 및 개최성과를 살펴본 결과, 이미 상당 부분 체계화 및 조직화가 진전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13개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 중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제외한 12개의 회의는 정례화에 합의하여 개최되고 있다. 이중 외교, 경제통상, 환경, 재무, 문화, 농업, 보건장관회의와 특허청장회의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교통물류, 관광장관회의와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표 3-12 참고).

표 3-13. 경제 관련 한·중·일 장관급회의와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

장관급회의	관련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전문가)회의
1. 외교장관회의	고위급(차관보)회의
2. 경제통상장관회의	-
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국제국장회의
4. 관세청장회의	세관실무자회의
5. 특허청장회의	실무회의, JEGA, JEGPA
6. 정보통신장관회의	국제협력실무협의회
7. 교통물류장관회의	교통물류국 (과)장급회의, 동북아시아 항만국장회의
8. 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국장급회의
9. 환경장관회의	환경국장급회의, 황사대응국장급회의
10. 농림수산업장관회의	고위급실무회의
11. 보건장관회의	보건국장급회의
12. 관광장관회의	관광실무자회의
13. 문화장관회의	문화부국장급회의

자료: 외교통상부(2012a)를 토대로 저자 작성.

뿐만 아니라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장관급회의는 사전준비 회의적인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장관급회의의 의제 선정, 협력사업 발굴, 이행 및 점검을 실행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상장관회의의 경우에는 사전의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실무자회의 부재로 합의된 협력사업의 지속성 결여 문제가 노정되었다.⁸⁸⁾ 장관급회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고위실무자 및 실무자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한·중·일 국장급 표준협의체의 경우 2012년까지 총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한·중·일 공동표준화 추진을 위한 연구그룹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업 추진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장

88)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작성(2012. 7. 26).

관급회의 부재로 예산부족 등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⁹⁾

다. 협력과제 이행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합의사항 이행 여부 측면에서는 대체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2]에 보는 바와 같이 3국은 11개 우선협력 분야⁹⁰⁾ 중 무역투자, 환경보호, 문화,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 8개 분야에서 장관급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장소 또한 금융 분야를 제외한 회의는 한·중·일 내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2003년 3국의 첫 공동선언문 이후 세관(무역투자)과 운송(물류) 부문은 양자차원 중심의 협력관계에서 3국 협력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세관, 교통·물류, 과학기술, 문화, 보건, 관광 분야는 장관급회의가 신설되면서 3국 협력관계가 격상되었다.

정보통신 분야는 11대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급회의가 제4차 회의(2006년)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제5차 회의는 2011년 아세안+3 정보통신장관회의와 연계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 이후 정보통신 사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부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행동계획에서 3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정보통

89)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90)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투자, 정보통신, 환경보호, 인적개발, 문화(이상 2002년 제2차 정상회의 합의), 금융, 과학기술, 물류, 보건, 관광, 청소년 교류(이상 2007년 제7차 정상회의 합의)의 11대 우선협력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신 기술분야 공동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장관급회의의 비정기적인 개최로 인해 3국간 정보통신 분야 협력 추진은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청소년 교류는 차세대 우호회의, 차세대 지도자포럼 등 교류협력 사업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행동계획과 2009년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한·중·일 청소년 유관부처간 협의체 구상’ 관련 합의사항은 시행되지 않았다.⁹¹⁾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선협력 분야뿐 아니라 산업, 에너지, 순환경제 모델 등과 같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상회의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협의채널이 신설되고 협력교류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합의사항 추진이 미진한 분야도 있다(표 3-14 참고). 가령 2010년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산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자원, ICT, 하이테크, 문화산업, 운송, 보건, 농업, 어업, 관광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정책 공조에 관한 협의를 지속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⁹²⁾ 그러나 [표 3-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국간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화채널과 지속적인 협력사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2004년 채택된 행동전략에서 “3국 외교당국간 에너지 전략대화(Strategic Energy Dialogue)” 추진에 합의한 바 있었으며, 2007년 공동언론발표문에서는 “3국간 에너지 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더욱 증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6월 제

91) 11개 우선협력 분야의 하나인 인적개발의 경우 특정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92)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10).

표 3-14. 한·중·일 3국간 경제 관련 주요 분야 교류협력 (2004~12년)

	분야	제1차 (2004년)	제2차 (2005-06년)	제3차 (2007년)	제4차 (2008~12년)
우 선 협 력 분 야	무역투자	3자위원회, 장관급회의, 국장급회의	3자위원회, 장관급회의, 국장급회의	장관급회의	장관급회의
	FTA	연구기관 공동연구	연구기관 공동연구	연구기관 공동연구	- 연구기관 공동연구 완료 - 산관학 FTA 공동연 구 완료
	투자	투자협정 공동연구	6차례 투자협정 협의 수행	투자협상 3회 진행 3국 각 투자협정 초안 제출	10차례 추가협상 진행 및 완료
	세관	양자차원	제1차 실무급협의의 한·일, 중·일 CMAA, 체결	제1차 관세청장회의의 -국경 지재권침해 단속 공동연구 수행	관세청장회의 - 행동계획 채택 - 4개 실무자그룹 설치
	지재권	특허청장회의	특허청장회의 JEGA 창설	특허청장회의	특허청장회의 - 공동연구 진행 지식재산연구원 원장 회담
	항공	양자차원	※별도 언급 없음.	김포-하네다-홍차오 셔틀 개통	※별도 언급 없음.
	정보통신	6개 분야 W/G, 장관급회의 이행 미흡: 업체, 연구소 참가	장관급회의 관련업체, 연구소 참가	7개 분야 국장급회의 개최	장관회의 - 국제협력위원회 설 치합의 이행 미흡: ICT기술분 야 공동협력
	환경	제5차 장관급회의	장관급회의	장관급회의	장관급회의 순환경제시범단지 구 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문화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제1차 문화포럼 개최	문화서를사업 추진 제1차 장관급회의	문화서를사업 추진 장관급회의
	금융	장관급회의(아세안+3 체제)	장관급회의(아세안+3 체제)	장관급회의(아세안+3 체제)	장관급회의(아세안+3 체제)
	과학기술	ITER 협의 시행 이행 미흡: 장관급회의 협의	제3차 국장급협의의 이행 미흡: 장관급회의 예정	제1차 장관급회의 환황해 경제,기술협력회의	장관급회의 -공동연구 진행

표 3-14. 계속

	분야	제1차 (2004년)	제2차 (2005-06년)	제3차 (2007년)	제4차 (2008-12년)
우 선 협 력	교통물류	양자차원(운송) ※물류언급은 별도로 없음.	제1차 장관급회의	장관급회의 국장급, 과장급회의	장관급회의 -행동계획, 실적보고서 채택 항만국장급회의 -2개 실무자그룹 설치
	보건	※보건언급은 별도로 없음.	유행성 독감에 대한 공동대처 의향서 체결	제1차 보건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국장급회의 개최
분 야	관광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1차 장관급회의	※관광언급은 별도로 없음.	장관급회의
	청소년교 류	차세대지도자포럼	차세대지도자포럼, 동북아시아 청소년포럼	차세대지도자포럼	청소년 우호 만남 차세대지도자포럼 미이행: 청소년 주무 부처 협의체 구축
	에너지	에너지 전략대화	3차례 과장급 실무자 회의 3차 위원회 계기 협의	외교장관회의 계기 협의 에너지안보대화 실무자회의 추진방안 모색	미이행: 정무간 협력 지속
	수산	제1차 고위급회의 이행 미흡: 수산연구 기관장회의, 민간협의 체 가능성 검토	민간 수산기관 교류추진 어업협력 관련 3국 포럼	※수산언급은 별도로 없음.	수산연구기관장회의
	교육	대학간 학점 상호인정, 교류 이행 미흡: 당국간 고위협의	제1차 교육부국장급회의	교육부국장급회의	미이행: 장관급회의
	산업	※산업언급은 별도로 없음.	※산업언급은 별도로 없음.	※산업언급은 별도로 없음.	미이행: 산업협력협의 체 설립 가능성
	농업	※별도의 언급 없음.	※별도의 언급 없음.	※별도의 언급 없음.	제1차 장관급회의
	표준협력	※별도의 언급 없음.	※별도의 언급 없음.	※별도의 언급 없음.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기타 경제분야				녹색경제세미나 미이행: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자료: Three-Party Committee(2004, 2007, 2007b);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2012); 외교통상부 (2012a);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2012)의 경제 관련 협력사업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5. 3국 경제 관련 주요 장관급회의의 각국 소관 정부기관

장관급회의	한국 주관정부	중국 주관정부	일본 주관정부
1. 경제통상	외교통상부	상업부	경제산업성
2. 관세청장	관세청(기재부외청)	해관총서	재무성 관세국장
3. 특허청장	특허청(KIPO)	지식산업국(SIPO)	특허청장(JPO)
4. 재무장관	기획재정부	재정부	재무성
5. 교통물류	국토해양부	교통운수부	국토교통성
6. 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총무성
7.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문부과학성
8. 환경	환경부	환경보호부	환경성
9. 농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부	농림수산성
10. 보건	보건복지부	위생부	후생노동성
11.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문부과학성
12.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여행국	국토교통성
13. 외교	외교통상부	외교부	외무성

주: 한·중·일 장관급회의를 2개 이상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음영 처리함.
 자료: 외교통상부(2012a).

1차 한·중·일 에너지 전략대화 개최 및 2004~05년 외교부 과장급 실무자회의 이래로 낮은 관심도와 의제발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관련 대화채널 및 교류협력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표 3-14 참고).⁹³⁾

산업 분야에 대한 대화채널 신설 논의는 2008년 한·중·일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에도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산업정책 총괄부처인 상무부와 경제산업성은 이미 외교통상부와 통상정책을 논하는 채널인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새로운 대화채널 신설에 대한 합의사항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 3-15 참고). 3국 정부조치도와 각 기관의 소관사무 차이가 3국간 협력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시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표 3-15 및 부록 그림 1, 2, 3 참고).

93) 외교통상부(2011), p. 38.

라.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 대한 평가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010년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에 기초하여 2011년 9월 한국 서울에서 정식 출범하였다.

최근까지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가장 큰 성과로는 2012년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제4차 실적보고서(2008~12년)를 제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연간 실적보고서 작성은 3국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평가·보고하는 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따라서 사무국은 독립적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3국간 대화채널을 보다 공고히 하고, 또한 3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하에서 이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국은 3국간 합의된 협력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좀더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 또한 이를 통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은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어 왔으나, 이행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 특히 산업과 고용·노동 분야 대화채널 설치에 다양한 특별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과 최근 정보통신(ICT) 분야 협력관계가 정체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각 대화채널 참석을 바탕으로 대화채널 운영 및 다양한 협력사업의 전반적 진행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사무국이 갖고 있는 이점 중 하나이다. 실제로 사무국은 지난 1년간 경제 관련 대화채널 중 농업, 경제통상, 물류장관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또한 지난 1년간 아세안(ASEAN), APEC, EU,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MRO (ASEAN+3 Macroeconomic and Research Office)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기구들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잠재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현재 인적구성을 고려할 때 사무국의 구체적 기능 중 하나인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이나 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무국은 현재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을 포함하여 경제, 정치, 사회문화, 행정 총 4개 부서에 약 2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여명의 인력 중 전문인력은 참서관급 1명, 서기관급 3명에 불과하다. 이는 각 담당 분야에서 제안될 수 있는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이나 협력과 관련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인력규모로, 장기적으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 방안으로 정형곤, 방호경(2011)이 제시한⁹⁴⁾ 바와 같이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주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설치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 한국의 역할

그동안 논의 혹은 진행되어 온 한·중·일 중앙정부 차원의 대화채널을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 한국이 중국 및 일본 사이에서 가교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13개의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에서 의

94) 정형곤, 방호경(2011), p. 81.

교, 경제통상, 재무장관회의를 제외한 10개의 장관급회의 중 특히, 교통물류, 과학기술, 농업, 보건 등 적어도 5개 장관급회의가 한국 주도로 신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관급회의가 설치되지 않은 국장급 표준협의회나 한·중·일 협력 사무국 또한 한국의 건의와 주도로 개최된 바 있다. 한국은 또한 그 밖에도 다수의 대화채널에서 의제 발굴이나 구체적 협력사업을 건의하는 등 3국간 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4장 한·중·일 지자체, 업계 및 여타 경제협력 대화채널

1. 지방자치단체
2. 업계
3. 기타(혼합형)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1. 지방자치단체

본 절에서는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역내 협력·대화 채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한·중·일 3국 내 지방정부간 협력체는 크게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교류협력체와 자매결연과 같은 지자체간 1 대 1 교류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다자간 협력체계에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1 대 1 교류협력의 경우 다자간 협력체계와 비교할 때 중요도 및 성과 부분에서 미흡하다기보다는 각각의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빠짐없이 조사 및 정리하는 것이 너무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⁹⁵⁾ 대신 1 대 1 교류협력 실태에 대한 부분은 각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 보다는 전반적인 추세 및 특징들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

한·중·일의 다자간 교류협력사업 또한 그 구성에 따라 3국 내 주요 도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간 연합체와 3국의 주요 지자체간 연합, 그리고 3국의 지자체 연합간 교류의 세 가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사례 중 가장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주요 추진 실태를 정리하였다.

95) 전국시도지사협의회(www.gaok.or.kr)의 국제교류현황 DB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한국 지자체의 중국 및 일본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사례가 각각 484건, 17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은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간,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공존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결성된 국제기구이다. 현재 한·중·일 3국의 지자체를 포함하여 동북아 6개국 66개 자치단체(한국 11, 중국 7, 일본 10, 러시아 14, 북한 2, 몽골 22)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경제통상, 환경, 문화, 방재,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며,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 간부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년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⁹⁶⁾

이동형(2006)의 NEAR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과위원회 중 경제통상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으나, 이 분과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촉진회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제적인 성과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타 분과위원회의 경우도 대체로 각 지방정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상호 격차로 인하여 단순한 정보교류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⁹⁷⁾

96) 동북아자치단체연합(2009),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백서』를 참고하여 작성.

97) 이동형(2006),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표 4-1.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회원 지역

한국 (13)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국 (6)	헤이룽장성, 허난 성, 산둥 성, 닝샤후이족 자치구, 후베이 성, 후난 성
일본 (10)	니가타 현, 도야마 현, 돗토리 현, 시마네 현, 효고 현, 교토 부, 아오모리 현, 이시카와 현, 후쿠이 현, 야마가타 현
러시아 (14)	하바로프스크 주, 사할린 주, 아무르 주, 캄차카 주, 이르쿠츠크 주, 사하 공화국, 브리야트 공화국, 연해 변경주, 톨스크 주, 띵바 공화국, 알타이 변경주, 마가단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자바이칼스크 변경주
북한 (2)	함경북도, 라진·선봉시
몽골 (22)	투브도, 셸레간도, 울란바토르시, 도르노드도, 수흐바타르도, 헨티도, 도르노고비도, 툄른고비도, 옴고비도, 불간도, 흙스골도, 우브르한가이도, 바얀호그도, 아르한가이도, 자브한도, 오르혼도, 고비-알타이도, 호브드도, UVS도, 바얀-울지도, 고비숨베르도, 다르한도

자료: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www.neargov.org).

2)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동아시아경제 교류추진기구(OEAED: 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는 도시의 연대, 경제교류,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하여 경제활동 및 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권 발전을 목적으로 기타큐슈 시 등 일본 측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본래는 동아시아 지역 한·중·일 주요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도모를 목적으로 1991년 11월 ‘동아시아 6도시 경제회의’로 출발하였으며, 1992년 11월 이 회의는 ‘동아시아 6도시 회의’로 개칭하면서 경제 및 환경문제를 다루는 회의체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1993년 11월에는 ‘동아시아(환황해) 도시 시장회의’와 ‘동아시아 도시 실무국장회의’를 개설하였다. 1994년 6월에는 중국의 톈진 시와 옌타이 시를 회원도시로 신규 참가시켰으며, 1996년 6월 및 11월에는 각각 실무국장회의 및 시장회의를 부산시에서 개최하였다. 이후 1997년 10월에는 한국의 울산시가,

표 4-2.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의 회원도시 및 단체

회원도시	부산시(한), 다롄시(중), 후쿠오카 시(일), 인천시(한), 기타큐슈 시(일), 청도 시(중), 시모노세키 시(일), 뎡진시(중), 울산시(한), 연대시(중)
회원단체	부산상공회의소, 중국국제상회 다롄상회, 후쿠오카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기타큐슈상공회의소, 중국국제상회 청도상회 시모노세키상공회의소, 중국국제상회 뎡진상회, 울산상공회의소 중국국제상회 연대상회

자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www.oaead.com/kr/outline).

2000년 11월에는 일본의 후쿠오카 시가 참가하였다. 또한 2004년 11월 16일에는 10개 도시 동아시아 시장회의와 동아시아경제인회의를 일체화 시킨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 회의의 회원도시 구성은 3개국 10개 도시로 이루어져 국경을 초월하는 광역경제권역으로 확대되었다.⁹⁸⁾ 정기적으로 총회, 도시협력 포럼 및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 제조업, 환경, 물류 총 4개 부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교류회는 상공회의소 등의 참여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각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체로서 상호 기업간 투자 등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단순한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이상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⁹⁹⁾ 환경부회와 관광부회에서 비교적 활발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물류 및 제조업 부회의 경우는 상호 시설건축 등을 제외하고는 상호교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수준에서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¹⁰⁰⁾

98)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www.oaead.com/kr).

99) 기타큐슈 시정부 및 기타큐슈 상공회의소 면담 결과에 근거(2012. 8. 9~10).

100) OEAED(2011), 『2011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뉴스 No. 15』 참고.

3)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한국), 인민대외우호협회(중국), 자치체국제화협회(일본)의 동북아 3개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및 관계자간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활성화를 위해 매년 3개국간 순회 개최하는 회의이다. 1999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구 국제화재단)와 중국 국제우호성시연합회,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3개 기관간 합의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매년 8~9월 초에 개최된다. 2011년까지 총 13차례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각 지방정부 주제발표 및 교류협력 우수사례 발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¹⁰¹⁾

표 4-3.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이력

연도	개최지	주제
'99(1회)	한국 서울시	한·중·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증진방안
'00(2회)	중국 베이징 시	새천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 전망
'01(3회)	일본 도쿄 도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새로운 존립방안
'02(4회)	한국 서울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통한 지방의 공동발전
'03(5회)	중국 우시시	지방정부 국제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
'04(6회)	일본 니가타 현	한·중·일 상호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정책
'05(7회)	한국 강원도	동북아 지역 공동발전과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
'06(8회)	중국 허얼빈 시	동북아시아의 화합 추진과 공동발전 실현
'07(9회)	일본 나라현	동북아시아의 교류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08(10회)	한국 전라남도	지역 활성화에 의한 발전방안
'09(11회)	중국 창춘 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 공동발전 추진
'10(12회)	일본 나가사키 현	지역간 협력 추진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
'11(13회)	한국 전라북도	지역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12(14회)	중국 윈난 성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

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2),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요』(내부자료).

10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2012),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요』(내부자료) 참고.

다만 본 사업은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현지 주요 기관 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단순교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지자체 연합기관이 주최를 하되, 참여하는 지자체의 경우 교류협력 우수사례 발표 등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실제 각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¹⁰²⁾는 강원도,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 현, 몽골 튜브도, 러시아 연해주 5개 지방정부가 참석하여, 동북아 지방정부간 공통 관심사항을 협의 의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각 지방정부 대표의 기조연설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1994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제1회 행사가 개최된 이래로 2012년까지 총 17차례의 회의가 각 회원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회원 지방정부는 해운항로 개설,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창설, 박람회 상호 참가, 상설 상품전시장 설치, 관광 전세기 운항, 무역·투자 촉진단 파견, 국제행사 지원 등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¹⁰³⁾

이 협의체는 이른바 환동해 지역을 포괄하는 주요 도시들간의 교류협력회의라는 점에서 다른 교류협력사업과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 교류협

102) 본래는 ‘환동해’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동해 지사·성장회의’로 시작했지만, 일본 등의 반대로 명칭이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로 바뀌었다.

103) 강원도 글로벌사업단(gico.gwd.go.kr).

력사업의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여타 다자 교류협력 프로그램과 큰 차별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5) 기타 사례: 특정산업 관련 협의회

대부분의 다자간 협력체들은 산하에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의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부 특정 분야(관광, 기계산업 등)에 대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도 존재하며, 그 주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PO: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n Pacific Citie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네트워크 형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국제기구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8개 회원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TPO 총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며, 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운영위원회가 1년에 2회 개최된다. TPO는 회원도시간 정보교환, 의견교환을 위한 사업,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 관광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회원도시간 정보지 발간사업, 관광동향, 관광통계 조사연구, 그 외 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⁰⁴⁾

관광분야는 실제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협력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TPO의 경우 실제 지방정

104)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www.aptpo.org).

표 4-4.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회원도시

러시아 (2)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말레이시아 (5)	이포, 조지타운,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코타바루
베트남 (4)	호치민, 하이퐁, 하노이, 다낭
인도네시아 (1)	자카르타
일본 (9)	후쿠오카, 가고시마, 기타큐슈, 구마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시모노세키, 오사카
중국 (15)	광저우, 청두, 다롄, 항저우, 칭다오, 쑤아, 상하이, 선양, 쑤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포산, 자오칭
태국 (1)	방콕
필리핀 (1)	마닐라
한국 (27)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안동, 전주, 경주, 김해, 강릉, 창원, 춘천, 익산, 인천, 제주, 남해, 속초, 영주, 거제, 동해, 통영, 포항, 하동, 성남, 부여, 부산중구, 군산
대만 (3)	까오슝, 타이중, 타이난

자료: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www.aptpo.org).

부간 상호 관광축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TPO 여행카드, 학생여행 교환사업, 해외 공동마케팅 등)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회원 지자체가 존재함에도 실질적인 협력사례는 한·중·일 3국간에 집중되어 있다.¹⁰⁵⁾

나) 동아시아관광포럼

동아시아관광포럼(EATOF: East Asia Inter-Regional Tourism Promotion Forum)은 동북아 5개국 지방정부 협의체인 ‘동북아 지사·성장회의(前 환동해 지사·성장회의)’에 동남아시아의 4개국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관광이라는 특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직된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문별 국제협의체이다.

105) Ibid.

표 4-5. 동아시아관광포럼의 회원정부

국가	지방정부
한국	강원도
일본	도토리
필리핀	세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미얀마	루앙프라방
태국	치앙마이
캄보디아	씨엠립
베트남	광린
말레이시아	사라와크
중국	지린성
몽골	중앙도
러시아	연해주

자료: 동아시아관광포럼 홈페이지(www.eatof.org).

동아시아관광포럼은 관광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 즉 관광자원, 시설, 사업체,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제적 조직화 과정으로서, 이 중에서도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간을 연결하는 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협력체이다. EATOF의 경우 역내 주요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TPO에 비해 이른바 환동해권으로 분류되는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다.¹⁰⁶⁾

기본적으로 관광과 관련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협력사업의 내용이 TPO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제한적이고, 특히 TPO에 비해 여타 산업에 비해 관광분야가 발달한 지방정부의 참여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광분야에 특화된 협력이 보다

106) 동아시아관광포럼 홈페이지(www.eatof.org); 황원규(2005)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2호 참고.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중·일 지자체 관광국장회의

한·중·일 지자체 관광국장회의는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2012. 5. 13)에서 합의된 ‘2015년까지 한·중·일 3국간 관광교류 2,600만 명 달성’을 위한 지방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12 여수 엑스포’ 관람 진작, ‘2012 전북 방문의 해’ 지원 등의 목적과 맞물려 2012년 7월 24~27일간 서울, 전주, 여수 등지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참가대상은 3국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한), 국가여유국(중), 국토교통성(일)) 담당국장과 주요 지자체 관광국(과)장급들로서, 특히 지자체는 한국 17개 시·도와 이들 각 지방정부의 중·일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지자체(총 9개 지자체) 관광국장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는 역내관광 확대와 관련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자체 관광교류 우수사례 발표, 상호 관광자원 홍보 및 여수 엑스포 관람 등이 있다.¹⁰⁷⁾

이 회의의 주요 참여주체는 3국의 지방정부 관계자이지만, 지방정부간에 자체적으로 시작된 교류회의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주최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순수한 지방정부간 교류채널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이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의 관광국장급이 주도하는 교류회의라는 점에서 중앙·지방 간 상호연계 측면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107) 문화체육관광부(2012), 「한·중·일 지자체 관광국장회의 결과보고」(내부자료).

라)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UMCA: Union of Machinery Industrial Cities in Northeast Asia)은 동북아 지역 주요 기계산업 도시간 기계산업 기술의 공동발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창원시가 주창하여 결성한 기계산업 동북아 네트워크이다. 2005년 9월 29일 한국의 창원시·안산시, 중국의 마안산 시(馬鞍山市)·웨이하이 시(威海市)·우시 시(无锡市), 일본의 오오가키 시·우베 시(宇部市), 러시아의 콤포몰스크나아무레 시 4개국 8개 도시가 참여하여 결성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날 4장 15조로 된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운영회칙’을 채택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중국의 웨이난 시(渭南市)가, 2007년에는 한국의 포항시가 새로 참여하였다.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의 주요 사업은 실무국장 및 시장정례회의, 지역간 기계기술·경제교류 심포지엄, 수출상담회나 기계박람회 개최 등의 경제교류 지원사업, 회원 도시 간 경축행사 등 각종 문화 교류 추진 등이다.¹⁰⁸⁾

이 연합체는 기계산업 중심도시간 연합이라는 회원 구성상의 특성을 제외하면, 주요 협력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협의체 차원에서도 형식적인 국제회의를 벗어나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적하에 2009년부터 부대행사로 무역상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108) 디지털창원문화대전(<http://changwon.grandculture.net>)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설명자료 참고.

표 4-6.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회원도시

한국 (3)	창원, 안산, 포항
중국 (4)	마안산, 웨이하이, 우시, 웨이난
일본 (2)	오오가키, 우베
러시아 (1)	콤소몰스크나야무레르

자료: 디지털창원문화대전(<http://changwon.grandculture.net>)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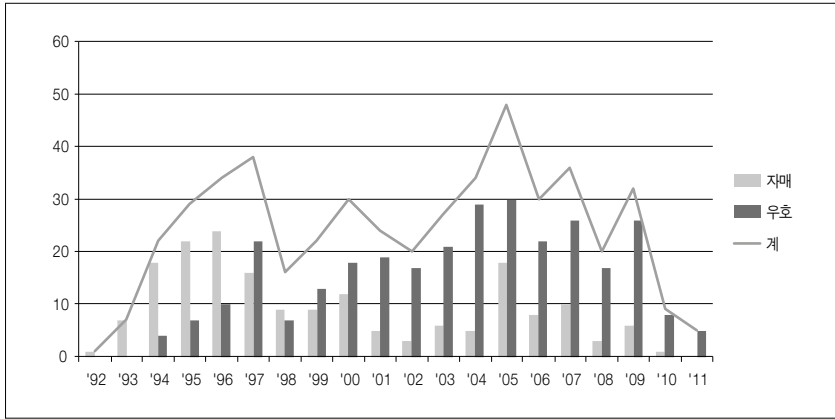
나. 양자간 교류협력

다자간 협력체제 외에 한·중·일 3국간에는 각 지방정부 차원의 1대 1 교류협력사업(자매결연, 우호교류 등)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교류협력사업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로 지방정부간 상호 국제행사 참여,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방문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중소기업간 경제무역상담회, 관광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관계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 11월 1일 전남 목포시와 장쑤성(江蘇省) 련윈강(連雲港) 시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진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사례는 급속히 확대되어 2011년 현재 한국 246개 단체 중 89%에 해당하는 219개 자치단체가 중국의 330개 지방정부와 484건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중국의 지방정부가 대만,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31개의 성급(省級)과 333개의 지급(地級), 2,856개의 현급(縣級) 정부 등 3,220개의 정부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전체 중 약 10%의 지방정부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아직 협력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실제

그림 4-1.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추이

(단위: 건)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1), 『한·중 지방정부교류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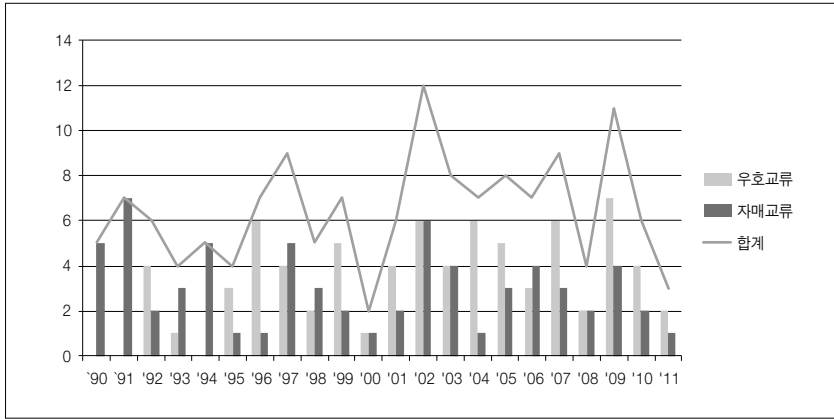
성급(省級)별로 보면 산둥 성(山東省)이 91건으로 가장 많고, 랴오닝 성(遼寧省: 73건), 장쑤 성(江蘇省: 46건), 지린 성(吉林省: 44건), 저장 성(浙江省: 37건), 베이징 시(北京市)·헤이룽장 성(黑龍江省)·상하이 시(上海市: 각각 20건) 순으로 한국과 교류지역이 전체적으로 동북3성 및 동부 연안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⁹⁾ 반면 중서부 및 남부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류가 미진한데, 구이저우 성(貴州省), 신장자치구(西藏自治區), 칭하이 성(青海省)은 지역 전체가 교류가 전혀 없으며, 신장웨이우얼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산둥 성(山西省)·간쑤 성(甘肅省: 각 1건), 윈난 성(雲南省)·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각 2건) 8개의 성(省)·자치구(自治區)가 2건 이하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관계는 중국보다 빠른 시점에서 시

109) 주중대한민국대사관(2011), 『한·중 지방정부교류백서』 참고.

그림 4-2.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추이

(단위: 건)



자료: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국제교류협력 DB(www.gaok.or.kr/h04_data).

작되었다. 최초의 사례는 1960년 1월 1일 경기도 안양시와 일본 아이치 현 고마키시 간에 체결된 우호교류이며, 2011년까지 총 174건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관계가 체결되었다. 한국의 지방정부 측에서는 강원도가 28건, 경기도 24건, 경상남도 20건 순으로 일본과 많은 교류협력 관계가 체결되었고, 일본 지방정부 측에서는 규슈 지방¹¹⁰⁾이 40건으로 가장 많은 교류협력 관계가 체결되었으며, 환동해권에 해당하는 야마구치 현, 시마네 현, 돗토리 현 또한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국 지방정부의 다자간 협의체 현황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또한 환동해권·환황해권 등에 인접한 지역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양자간 교류협력 현황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110)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구마모토 현, 오오이타 현,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 현이 이에 해당된다.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신중호(2011)는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국제교류협력의 성과에 대하여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부차적 사업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주로 자매결연에 치중하고 있다. 둘째, 국제교류협력의 장기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고, 이로 인하여 ‘top-down’ 방식의 교류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중·장기계획 수립, 기구설립, 기금조성 등의 측면에서 교류협력 추진체계가 아직 미비하다. 넷째, 일과성 사업이나 의전성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지속성이 부족하다. 다섯째, 국제교류협력 대상 범위가 경제통상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사회·문화·예술 측면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

2. 업계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으로 대표되는 3국 재계 지도자간의 교류협력 채널과 각 산업별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은 지방정부차원의 교류협력 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교류협력의 내용을 망라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태조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2장의 한·중·일 3국의 주요 산업별 위상 및 상

호의존도 분석 결과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대세계 수출비중이 높거나 상호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 섬유, 철강,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조업 외의 분야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관회의 및 실무자그룹 단위의 공식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수산업, 에너지·환경, 교통·물류,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산업별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였다. 물론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에는 실제 개별 기업간 교류 또한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 실태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 파급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역내 교역량이 증가하고 상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한·중·일 3국을 단위로 하는 민간경제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ASEAN+3 정상회의’ 중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이후 2002~07년간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 포럼에는 3국의 대표 경제단체의 공동주최¹¹¹⁾로 매년 약 400여 명의 3국 경제인들이 참가하여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미래 동북아 경제공동체

111)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의 각국 주최기관은 일본의 경우 경제단체연합회가 계속 주최기관으로 참여한 반면, 한국의 경우 1차 포럼은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이었고 2차 이후부터는 전경련이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1~5차까지는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담당하다가 6차 포럼에서는 기업연합회가 주최한 바 있다.

표 4-7.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개최 현황

회차	개최일시/장소	주요 논의 이슈
제1차	2002.11.21~22 /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중·일 공동체 구축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따른 일본 산업계의 대응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3국간 경험발전 방향
제2차	2003.11.17~18 /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무역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초 구축 일본 기업의 동아시아 비즈니스 전략 한·중·일 경제협력의 형식에 대한 선택
제3차	2004.10.21~22 /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경제자유권 구축을 향한 한·중·일 과제 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 3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각국 기업의 대응,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과제 3국 규격통일 표준화를 위한 대응방안 에너지 분야에의 3국 협력방안
제4차	2005.10.13~14 /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FTA 전망과 과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중·일 협력 한·중·일 에너지 협력과 비즈니스 원활화 제언 한·중·일 주요 산업간 협력 강화방안:5개 업종
제5차	2006. 10. 18~20 / 중국 지린성 창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일 FTA 관련 최근 성과 및 전망 중국 창춘시와 한·일 간 산업협력 현황 및 전망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한·중·일 협력 동북아 물류 및 관광분야 한·중·일 협력방안 자동차산업에서의 e-Business 한·중·일 철강교역 현황과 전망 등
제6차	2007. 10. 30 /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과 FTA 중국의 통상, 외자이용 정책의 전환과 중국시장 전망 환경, 에너지 절약과 기업의 환경경영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포럼활동, www.fki.or.kr/FkiAct/Forum/Biz

실현을 위한 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한 각종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3국은 참석자 규모를 축소¹¹²⁾하는 대신 참가자 대상 수준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협의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비즈니스 포럼을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2012년까지 총 4회 개최하였다.

112) 포럼 당시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여하던 것을 Business Summit에서는 업계 고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약 60여 명 수준으로 축소하였다.

표 4-8.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 현황

회차	개최일시/장소	주요 논의 이슈
제1차	2009.10.10 / 북경	- 한·중·일 경제협력을 통한 금융위기 공동대응 -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한·중·일 FTA 체결 - 에너지·환경 등 첨단기술 협력강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
제2차	2010.5.29-30 / 제주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체제 조기정착을 위한 협력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모델 조기도출 촉구 - 녹색에너지 및 표준화 협력 강화, 에너지 절감과 관광산업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제3차	2011.5.22 / 동경	- 한·중·일 FTA 체결 및 투자협정 체결 - 에너지·환경 분야 협력강화 - 일본 지진피해 복구방안 협력
제4차	2012.5.13 / 베이징	- 한·중·일 FTA 협상 개시 - 에너지·환경 분야와 첨단기술, 유통, 금융분야 협력강화 촉구

자료: 외교통상부(2012a), 『2012년 한·중·일 협력개황』.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연례회의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3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며, 각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일본 경단련(經團連)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CCPIT), 한국 전경련(全經聯)이 각국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대표 및 각 업종별 대표단(산업별 협회),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과 미래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기간 중 3국 경제단체가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한·중·일 3국의 정상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기본적으로 먼저 당해 주최기관에서 최근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중점 의제를 선정하고, 그 후 3국의 담당기관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자국 회원사의 의견수렴 및 자체 의견수립을 하고 있다. 다만, 업계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채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적인 업계 교류 등을 통해서 공유된 사안들에 대해 각국의 운영주체들이 회원사 등을 대표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의견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이를 한·중·일 정상회의에 전달함으로써,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 측에 제안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차원의 의견 및 권고사항을 정부 차원의 협의체에 전달하는 수준의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안전 공유 및 공동협약 등 상호 밀접한 교류협력의 채널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 있다. 비즈니스 서밋 출범 이전인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각국의 주요 협회들¹¹³⁾ 또한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3국 경제단체장과 재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재편된 바 있다.

즉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3국의 대표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중에서는 3국 정상회의에 비견될 수도 있으나, 실제 기타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과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3국 정상회의나 앞서 언급한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총회와 같이 총괄적인 협의기구로 보기는 어렵다.

113) 한국의 8개 협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물류협회, 한일경제협회), 일본의 9개 협회(日本機械工業聯合會, 電子情報技術産業協會, 石油化學工業協會, 日本鐵鋼聯盟, 日本維産業聯盟, 日本로지스틱시스템協會, 日本自動車工業會, 日韓經濟協會, 日中經濟協會), 중국의 6개 협회(中國機械工業聯合會, 中國紡織工業協會, 中國鋼鐵工業協會, 中國物流與採購聯合會, 中國汽車工業協會, 中國貿易促進會電子信息(情報)行業分會) 참여.

나. 제조업

1) 정보통신 산업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자기기 분야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세계수출 점유비중은 2010년 현재 33.9%에 이르며, 특히 중국 하나만으로도 20.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및 일본의 경우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등 역내 교역 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긴밀한 산업연계는 자연스레 업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촉진시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체로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들은 3국간 공동협력보다는 중국 및 일본 협회와의 양자간 교류협력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협력단체인 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일본 측의 일본전기공업회(JEMA: Japan Electronic Manufactures' Association),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와 중국 측의 중국전자상회(CECC: China Electronics Chamber of Commerce), 중국정보통신시험분석원(CTTL: China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Labs), 품질인증중국(CQC: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과 각각 연 1회 양자간 정기교류회를 개최하며,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의 중국전자제품공사(CEAC: China Electronic Appliance Corporation),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선전중소기업발전촉진회(SZSME) 등과 교류관계에 있다. 진흥회의 교류사업 분야 및 안전은 대체로 각 해마다 회원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최근의 주요 관심 이슈는 상호국별 IT/가전산업 동향, Green IT

표 4-9. KEA-JEMA 교류협력 추진현황

회차	개최연도	장소	내용
1회	2008	한국	MOU 체결
2회	2009	일본	일본의 에코포인트 제도, 가전 리사이클링법,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
3회	2010	한국	양국 가전산업 동향, 그린IT 프로젝트, PL 관련제도 등
4회	2011 (2012.02 진행)	일본	양국 가전·IT산업 동향, 제품 안전점검 제도, 에너지 효율정책 등
5회	2012	한국	-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 『한·중·일 교류협력현황』(내부자료).

(환경) 중심의 에너지 절약, 제조물 책임(PL: Product Liability) 및 소비자 안전제도 등에 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중 간에는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표준, 환경 관련 이슈와 기술장벽 및 인증제도의 상호인정 등에 대한 부분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¹¹⁴⁾

이러한 양자간 교류협력사업들은 진흥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기관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별 업체 혹은 정부부처와도 공식적인 안건공유 및 협력관계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¹⁵⁾ 이는 현재 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 특정 의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적 성격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조사·보유하고 있는 정보 등에 대한 단순한 교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빠른 기술적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별도의 3자간 표준화 협의체인 한·중·일 국제표준화 협력체(CJK-SITE)가 설립된 바 있다. CJK-SITE는 한·중·일 3국의 민

114)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2), 『한·중·일 교류협력현황』(내부자료).

115)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 면담 결과에 근거.

간단체와 기업 등이 정보전자 분야의 국제 표준화 협력을 위해 2011년 결성된 민간중심의 표준화 협력체로서 일본 측의 제안에 따라 설립되었다. 현재 우리 측은 한국표준협회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삼성전자·LG전자 등이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전자정보산업협회와 소니·도시바 등이, 중국에서는 전자표준화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기술표준원과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표준원 등 정부기관이 어드바이저로 지정되어 있다. 여타 표준협력 전반에 대한 사안이 논의되는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과는 별도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3국 표준협력의 효율 증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과 병행하여 개최되고 있다.¹¹⁶⁾

표준화 부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3자간 민간협력 사례로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이 있다. 이는 한·중·일 민간중심의 공개SW 활성화 포럼으로, 2003년 9월 제주 ‘한·중·일 IT장관 회의’에서 공개SW 분야에 대한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2004년 4월 ‘한·중·일 공개SW 활성화 포럼’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포럼은 정부 차원의 국장급회의와 민간차원의 활성화 포럼으로 운영되며, 정부 측에서는 한국 지식경제부(MKE),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포럼 내 Working Group 운영(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을 통해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¹¹⁷⁾

이와 같이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3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

11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12), 『한·중·일 표준협력 활동 현황』.

117)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1. 10. 18), 『한·중·일 IT국장들, IT협력 위해 머리 맞댄다』.

나라 향후 성장가능성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별도 협의체가 필요할 만큼, 3국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협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의 경우는 단순히 기관 대 기관의 교류협력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으나, 정부 주도로 마련된 협력채널에서의 민간교류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섬유산업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섬유산업은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의 요인으로 인하여 여전히 한·중·일 3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2010년 현재 38.4%)을 차지한다. 또한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역내교역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3국 업계 차원의 교류 또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전부터 한·중, 한·일 등 양자간 교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2010년부터는 3자 협력으로 한국섬유산업연맹, 중국방직공업협회, 일본 섬유산업연맹 3국 섬유단체 대표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한·중·일 섬유산업협력회의’를 시작하였다. 2010년 요코하마, 2011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2012년에는 11월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주요 논의 주제는 ① 한·중·일 FTA, ② 섬유산업 환경안전 문제, ③ 패션 관련 3국 협력 등에 대한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FTA 관련 협의 분야의 경우 관세철폐 스케줄, 원산지

규칙, 비관세장벽 등이 주요한 논의 이슈이며, 환경 부문에서는 CO₂ 삭감, 저에너지, 안전 부문에서는 염색 시 피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유럽의 규제 대응전략에 대해 협의한다. 다만, 이 협력회의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아니라 향후 협력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이다.¹¹⁸⁾

또한 3국간 협의체는 아니지만 ‘아시아 화학섬유산업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의는 1996년 시작하여 총 8회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3국을 포함하여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내 9개국이 참여한다. 주로 FTA와 관련한 협의와 통계·정보교류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¹¹⁹⁾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이 섬유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및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은 부족하다. 각 협회 차원의 정보교환 등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이며, 상대적으로 여타 산업 분야에 비해 기술·인력교류 수준의 깊이 있는 협력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은 섬유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현황과악과 지적재산권 문제 등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 가능성 때문에 3국간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8)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섬유산업연맹 관계자 면담(2012. 8. 6~10) 내용 및 내부자료.

119) 중국화학섬유협회,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섬유산업연맹 관계자 면담(2012. 8. 6~10) 결과에 근거.

3) 철강산업

제2장의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일본, 한국은 철강생산량 면에서 세계 1, 2, 6위를 차지하며, 3국의 생산량을 합치면 세계 총생산량의 56.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3국 철강산업의 위상이 높고, 역내교역 비중도 높은 편이나, 철강분야의 3국간 교류협력은 여타 제조업 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3국간 공동 협력채널은 없으며,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일본 측(The Japan Iron and Steel Federation, 日本鉄鋼連盟)과 중국 측(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 中国钢铁工业协会) 간의 협력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 간 교류협력은 크게 일·중 환경보전 저에너지 선진기술교류회와 통계교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중 환경보전 저에너지 선진기술교류회의 경우 2005년 7월에 시작되어 2011년까지 총 6회의 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주로 정부관계자, 업계관계자가 환경부문에 대해 최근의 추진현황을 서로 보고하는 형태였으며, 양국의 제철소 견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교류의 성과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중국이 인식하고 이를 실제 산업분야에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었다. 철강통계의 경우 2004년부터 중국이 철강통계를 바꾸었던 것이 계기로서, 중국 통계시스템의 변화 조사 및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2003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총 6회 교류회를 개최하였다.¹²⁰⁾

또한 일본·중국, 일본·한국 간에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철강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일 철강대화는 2001년 4월부터 시작되

120) 일본철강연맹 담당자 면담(2012. 8. 6) 내용에 근거.

었는데, 2012년 4월에 13회째 개최(동경)되었고, 일본·중국 간은 2011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6월까지 총 18회 개최되었다. 관계부처의 과장급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¹²¹⁾

이와 같이 협회 등의 차원에서 3국간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나, 기업간 제휴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포스코-NSC, 현대-JFE, 동국-JFE 등이 자본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간에는 포스코-사강 STS 합작투자, UnionSteel 냉연공장 설립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 간에는 NSC-보강(BNA), Bohai-NKK 강관, JFE-광저우 등이 합작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¹²²⁾

다만, 한국 업계 차원에서는 이러한 기업간 협력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으로 발전되고, 선언적 내용보다 실질적이면서 체계적인 논의가 한·중·일 3국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¹²³⁾

4) 자동차 산업

제2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은 한·중·일의 세계수출 점유비중이 26.4%에 이르는 등 역내 주요 핵심산업 중 하나이다. 다만, 생산 및 수출규모에 비해 역내교역 비중은 일본의 대중국 수출(2010년 현재 10.8%)을 제외하면 여타 제조업 분야에 비해 비교적 낮다. 이러한 특성과 유사하게 업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실태 또한 한·중·일 3자

121) 위의 자료.

122) 세계철강협회 정철호 소장(포스코)의 면담(2012. 8. 9) 내용에 근거.

123) 위의 자료.

간 교류협력 사례는 없으며, 양자간 교류협력 또한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경우 일본과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한·일 자동차산업국제심포지엄, KAMA-JAMA 교류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와는 1998년부터 양 단체간 교류회를 연 1회 개최하며, 이 교류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FTA 추진동향 등 자동차업계의 통상현안은 물론 자동차 재활용 등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현안과 국제기술기준 조화 및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등 기술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1969년부터 한·일 자동차부품공업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교류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¹²⁴⁾

중국과의 협력은 일본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중국 시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부터 중국과의 자동차산업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한·중 분과위원회와 함께 민간 차원의 한·중 자동차공업협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각 회원사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접촉 및 사절단 방문, 모터쇼, 세미나 개최 등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는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¹²⁵⁾

지금까지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

124) 한국자동차산업협회(www.kama.or.kr).

125) 한국자동차산업협회(www.kama.or.kr).

나 향후 자동차 분야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국 및 일본의 중국과의 양자교류, 그리고 더 나아가 3자간 교류협력 또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농수산업

제2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수산업의 경우 3국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2010년에 한·중·일 3국 농수산업 수출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과 달리 6.0%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한·중·일 3국간 총수출에서 농업 및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식량위기, 기후변화, 가축질병 대응 등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3국간 농업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농수산업 부문에서 한·중·일 3국의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수산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인 협력이지만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라는 민간 협의채널이 존재한다. 이는 한·중·일 3국 수산고위급회담(2004년 10월)에서 민간분야 어업협력도 병행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05년 제1회 한·중·일 민간어업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2012년까지 총 7회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한국수산회, 대일본수산회, 중국어업협회의 한·중·일 민간어업대표단체, 수협, 어업대표단체가 참여하여 진행되며, 주요 의제는 한·중·일 3국 공동의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 3국 공동의 자원관리조치, 어장청소 방안 및 수산기술교류 협력강화 등에

대한 부분이다.¹²⁶⁾

라. 에너지 · 환경

에너지 · 환경 분야 중 특히 환경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의 협의도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각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제조업 각 분야에서도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논의되는 공통된 주제가 환경문제이다. 다만, 사막화 방지, 해양환경 등 역내 환경보호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 지자체 협의체와 달리, 민간 분야에서는 환경기술과 관련한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산업별 주요 협회 등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환경부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교류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 중 · 일 국제환경산업 라운드 테이블’을 들 수 있다. 이는 2000년 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차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협력사업으로 합의된 이후 2001년부터 한 · 중 · 일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 환경 라운드에는 한 · 중 · 일 3국의 정부, 연구기관, 환경 관련 협회 및 환경산업 관계자는 물론 국제기구, 기타 국가의 환경산업 · 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¹²⁷⁾ 그러나 전반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를 배제한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환경관련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이른바 신성장산업 중 대표적인

126) 한국수산회(www.korfish.or.kr/).

127)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www.temm.org).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의 경우 3국 모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의 규모나 교역, 투자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크지 않으며, 최근까지도 한·중·일 3국의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협력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최근 협회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5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와 중국의약품협회(회장 쉬 라이후이), 일본바이오협회(회장 나가야마 오사무)는 각국 바이오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아시아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한국바이오협회가 지식경제부 지원하에 수행하고 있는 ‘KOREA바이오허브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년간 중국과 일본의 바이오협회를 방문해 국가별 산업계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내용은 ① 바이오 비즈니스관련 기술, 경영정보, 관련 데이터 및 자료의 교환, ② 한·중·일 제약 및 바이오헬스 기업의 파트너링(partnering)과 매치메이킹(match-making) 촉진, ③ 한·중·일 바이오벤처 기업의 자본확보 추진 등이다. 더불어 ④ 각국의 바이오 회사가 그들의 R&D, 생산기술, 제조기술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⑤ 세미나, 워크숍 등 주요 바이오 국제행사의 트레이닝 과정 참여, ⑥ 동북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TF 구성을 통한 ‘아시아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¹²⁸⁾

128) Korea바이오허브구축사업(koreabio.org/biohub).

마. 금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간의 금융부문의 교류협력으로는 통화스왑 체결,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협의에 비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례는 거의 개별 기업 단위의 업무제휴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개별 은행 차원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3자간 업무제휴 사례로는 2003년 외환은행, 중국은행,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이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각 은행이 전략적 제휴(이른바 BESETO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그 밖에 한·중 혹은 한·일 금융회사간의 양자간 전략적 제휴는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2012년만 해도 우리은행-중국은행, 신한은행-중국은행, KDB대우증권-중국은행 국제공고유한공사(BOCI: Bank of China International)간 업무제휴 등이 체결된 바 있다.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은 대부분 상호 마케팅 협력, 자금제공 및 인력교류, 특히 현지법인의 영업력 강화와 현지화를 위한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타 산업 분야와 달리 은행협회 등 각 금융업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단체간 교류 협력채널은 한·중·일 3자간뿐 아니라 양자간 차원에서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교통·물류

한·중·일 3국간의 교역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 분야

의 상호 의존성도 강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교통·물류 협력사업은 물류장관회의 및 차관급회의 등 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협력은 정부 회의체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이 대부분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체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중·일 물류교류회’를 들 수 있다. 이 교류회는 한·중·일 물류교류를 통해 물류산업을 발전시켜 동북아 3국이 국제적 물류허브 지역으로 발전한다는 공통가치를 창출하고자 2002년 중국에서 출범되었다.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일본물류시스템협회가 3국의 주최기관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시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다만, 이 교류회는 중국의 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 정부 후원의 국제교류회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3국간 균형적인 교류협력보다는 세계 최대 물류시장인 중국으로의 진출방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성격이 대체로 강하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타 교류협력사업과 달리 한·중·일 물류교류회는 3국이 순환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주요 물류중심 도시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되고 있다.

사. 문화·관광

1) 문화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른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상호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2007년부터는 문화장관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3국간 문화교류 협력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 차원의 교류 또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 공연예술단체의 중국 및 일본 활동사례는 각각 52건, 30건으로 단일 국가로서는 미국(55건) 다음으로 많은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반대로 중국 및 일본 공연예술단체의 한국 활동사례 또한 각각 39건, 98건으로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119건) 다음으로 많은 횟수를 기록하였다.¹²⁹⁾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내 문화재 교류(수출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공연, 문화재 수출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교류 정책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정책평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 또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먼저 한·중·일 간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는 ‘한·중·일 문화교류 포럼’을 들 수 있다. 이는 한일문화교류회, 중국대외인민우호협회, 일본국제교류기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3국의 지식인, 문화인들이 매년 한·중·일 3국을 상호 방문하며, 한·중·일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제1회 한·중·일 문화교류 포럼 개최 후 총 7회의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문화교류 포럼을 주축으로 ‘한·중·일 대표자 토론회’, ‘한·중·일 예술가 강연회와 심포지엄’, ‘한·중·일 예술공예품 전시회’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기타 관련 사업으로는 ‘Soccer-U21 올림픽 대표 리그

12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1), 「2011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현황」.

전’, ‘한·일 대학생 대화의 광장’, ‘한·중·일 문화재 보존 국제회의’ 등을 들 수 있다.¹³⁰⁾

또한 양자간 협력회의로서 한일문화교류회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한일문화교류회의 경우 1998년 10월 한·일 정상외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과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문화교류 전반에 대하여 양국이 논의하기 위해 일한문화교류회의와 동시에 설립되었다. 교류회의는 한·일 양국의 문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정책 과제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문화단체들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 교류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한문화교류회와 양국간 전체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안건을 수렴하기 위한 양국 운영위원회의, 우리 측 전체회의, 양국 운영위원회의가 별도로 개최되고 있다.¹³¹⁾

그 밖에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 중심이 되어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증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¹³²⁾

2) 관광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관광 분야는 최근 시

130) 한일문화교류회(www.kjcec.or.kr).

131) 한일문화교류회(www.kjcec.or.kr).

132) 아시아문화교류재단(www.acef.kr).

장규모 측면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역내 관광교류에 의존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할 만큼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만큼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 또한 활발히 전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정부 차원에서는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양자간 관광진흥협의회 등의 협력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한·중·일 지자체 교류대회, 한·중·일 친선도시대회, 기타 자매도시 교류사업 등 매우 다양한 협력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에 민간업계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 또한 상당부분 이러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채널에서 논의되는 관광협력 사업으로는 한·중·일 연계 크루즈에 대한 논의 및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를 연계한 관광상품) 실크로드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발전된 협력사업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베세토 관광 실크로드는 북경·서울·도쿄 세 도시가 철도, 도로, 배 등 기간망을 이용해 3국 소속 관광식당이나 여행업 등 각 업종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북아 관광이 하나 되는 민간주도의 관광교류 사업으로, 서울시 관광협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이다.¹³³⁾

그 외의 협력사업으로는 ‘한·중·일 관광포럼’을 들 수 있는데, 이 포럼에는 3국 정부 관계자 및 관광정책 연구기관 전문가, 민간 관광분야 전문가가 참여¹³⁴⁾하며, 2006년 제주 포럼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6회 개최되었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기간 동안 개최되나, 장관회의

133) 이강욱, 이효선(2008),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4) 위의 책.

와는 별도로 3국 민간 관광교류 협력기반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¹³⁵⁾

관광 분야의 민간교류 사업은 대체로 정부주도 사업과의 연계 사업, 포럼이나 세미나 형태의 학술적 교류, 시·도별 국제교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류행사, 관광 관련 사업체간 공동 프로모션, 행사 및 프로젝트, 자매도시간 민간교류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개별 사업체간 협력 외에는 대체로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3. 기타(혼합형)

앞서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한·중·일 3국간 교류협력 실태를, 본 장에서는 먼저 지방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분야별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3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교류협력 사례들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경제교류회의 등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35)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가. 한·중·일 FTA 공동연구(연구기관+중앙정부+업계)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이 공동연구 사업은 199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 시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연구’가 출범된 데서부터 시작된다. 최초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발전연구중심(DRC),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가 각국의 대표기관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일북 측 연구기관으로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IDE)가 지정되었다. 2000~01년 동안은 ‘한·중·일 3국간 무역활성화 방안’ 및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3년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Long-term Economic Vision and Medium-term Policy Directions”라는 제2단계 공동연구를 시작하였고, 첫 번째 주제로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를 선정하여 2008년까지 FTA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9년에는 한·중·일 FTA의 중요성과 3국 정부의 건의에 의해 3국 연구기관은 제2기(Phase II)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¹³⁶⁾

한·중·일 FTA 공동연구는 최초 3국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각국의 업계대표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참여폭이 확대되었다.¹³⁷⁾

136) 한·중·일 FTA 공동연구 각 연도별 보고서 참고.

137) 2006년부터는 전경련(한국), 국제무역촉진위(중국), 경단련(일본) 등 각국의 업계대표가 참여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3국 정부관계자가 옵서버로 참여하였다.

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정부+업계)

동북아 표준협력포럼(NEAS Forum: North East Asia Standardization Forum)은 동북아 3국(한·중·일)이 추진하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개발 등 표준 분야에서 3국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민간·정부간 표준협력체제를 발전시켜 동북아 표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표준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한·중·일 국장급 협의체가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협이가 진행되었다.

현재 3국 표준전문가가 참여하는 표준협력포럼과 더불어 정부간 표준협력회의(3국의 국장급 참석)도 동시에 개최되는 등 정부·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이 매년 5월경 로테이션으로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별 주최기관은 기술표준원(한국), 중국표준화협회(중국), 일본경제산업성(일본), 주관기관은 한국표준협회(KSA), 일본표준협회(JSA), 중국표준협회(CSA)이다. 해당 포럼에는 3국 정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의제는 한·중·일 공통협력 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 보고, 3국 공동의 지속협력과제 및 신규 협력과제 제안 논의,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강화방안 등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매년 포럼 개최에 앞서 기업, 단체, 연구소 등으로부터 동북아 표준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공모하는 절차를 통해 공식의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3국이 제안한 각각의 협력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

표 4-10. 한·중·일 공동표준화 과제 현황

No	과제명
1	동북아시아 표준협력포럼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절차 연구
2	각국의 ISO/IEC TCSC에 대한 국내 전문위원회 정보교환 강화
3	ISO와 IEC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공동대응
4	CJK-SITE, 정보통신 및 전자공학분야에 관한 표준화 프로젝트 정보교환
5	접근 가능한 디자인
6	2-바이트 폰트 평가 및 디자인
7	석유활성탄의 시험방법
8	ISO/TC 164(금속의 기계적인 시험)와 관련된 활동 정보공유
9	세라믹 용사층의 열전도도 측정방법 표준화
10	고령친화용품 국제표준화 협력
11	친환경 표면처리 표준화 협력
12	공동관심분야의 IEC 신규제안을 포함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13	하수 시스템 유지에 관한 정보교환 및 표준화 협력
14	도시지역의 폐수 재처리에 관한 정보교환 및 표준화 협력
15	화물 컨테이너
16	원자력 에너지와 장비에 관한 정보교환 및 표준화 협력
17	공공안내표지에 대한 정보교환 및 표준화
18	인쇄회로기판에 관한 표준화 협력
19	스마트시티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표준화 협력
20	ISO/TC130/WG12(인쇄후공정)에 관한 표준화 협력
21	ISO 7799 및 ISO 10275에 관한 협력
22	이산화탄소 용적형 냉매 압축기 성능시험방법과 공칭 작동조건
23	상품 일관수송용 일반평 팔레트(flat pallet)와 그 적용을 위한 아시아 표준 시스템 구축
24	발전소 연료가스 오염 통제 장비 표준
25	고속 쌀 이앙기 표준에 관한 연구
26	무역금융정보 서비스에 관한 한·중·일 협력
27	스마트홈 네트워크 표준에 관한 협력
28	열차폐코팅의 열전도성 평가
29	스마트 녹색교통서비스

자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2. 4. 30), 「한·중·일 표준협력으로 동북아 지역 무역활성화 도모」.

고 있으며, 2012년 4월 개최된 11차 포럼을 기준으로 현재 총 29개 공동 표준화 과제가 도입 및 추진되고 있다.

이 협의회는 3자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격차뿐만 아니라 서로의 표준화 부문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달라 범용

적 기술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한·일 등 양자간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표준화 협력에 대한 부분은 대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도 관심은 있으나 당장의 경제성 측면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는 표준화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표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IT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의 표준을 같이 만들자는 취지에서 본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³⁸⁾

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지방정부+업계+학계)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2001년 한·중·일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3국 지역협력체제로 한·중·일 환황해 지역 내 무역·투자·기술 등의 교류 및 협력 강화, 환황해 경제권 형성, 공동발전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총 12회의 교류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를 비롯하여 정부 대표자회의(국장회의), 환황해 포럼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상무부, 한국은 지경부 등 중앙정부 소관인 반면,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규슈) 지방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이슈는 다루어지기 어려운 협의구조를 가지고 있다.

138) 기술표준원 담당자 면담 내용에 근거(2012. 7. 24).

또한 교류회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교류회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먼저 본 교류회의의 한국 측 주관기관인 한일 경제협회는 기본적으로 한일경제협력 사업비에서 교류회의 운영예산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사업은 구체화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안된 다양한 의제 및 협력사업에 비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례가 많지 않고, 무엇보다 3국간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데 대한 어려움도 있다.¹³⁹⁾

라. 한일경제교류회의(정부+지자체+업계)

한일경제 교류회의는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경제교류 협력체는 아니지만 산업계,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비교적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역내 교류협력회의 중 하나이다. 양국 지역간의 교류강화를 위해 한국·일본의 기업간, 자치단체간, 경제단체간 파트너십 강화 및 산학기술협력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3년부터 일본 규슈 지역과 2000년부터는 호쿠리쿠 지역과 별도의 경제교류회의를 시작하였다.

한일(규슈)경제교류회의의 경우 1992년 일본 규슈 지역 기타큐슈의 ‘코리아 페스타(한국우량제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계기로 규슈 지역과 1993년 1회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본 규슈 지역¹⁴⁰⁾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간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지식경제부, 광주광역시,

139)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담당자 면담 내용에 근거(2012. 7. 31).

140) 규슈의 7개 현과 2개 정령시: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구마모토 현, 오이타 현,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 현, 후쿠오카 시, 기타큐슈 시.

표 4-11. 한일(규슈)경제교류회의 추진 성과: 요약

회차	개최일시	개최도시	주요 내용
제1회	1993. 11. 29	기타큐슈	수출촉진단 파견, 기술자 파견연수 등
제2회	1995. 2. 27	서울	중소기업 산업협력기업 수요조사, 기술교류전 공동개최, KITA 기술자 연수 등
제3회	1996.2. 13	나가사키	규슈 산업기술협력단 방한, KITA 기술자 파견연수, 환경산업기술협력단 파견 등
제4회	1997. 6. 9~11	전주	산업협력 희망 수요조사 상호 실시, 중소기업 기술 자연수 및 전문가 초청지도 등
제5회	1998. 7. 22-24	벵푸	수출입 관련 정보 상호 교환, 對日수출촉진단 파견, 기술자 연수 및 전문기술자 초청지도 등
제6회	1999. 5. 31 ~ 6. 2	광주	국내행사, 전시회 등에 대한 양국 홍보협력 등
제7회	2000. 9. 4 ~ 6	미야자키	양 지역간 Local to Local 산업기술협력 추진 등
제8회	2001. 6. 11~13	창원	양 지역 벤처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확대, 한국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등
제9회	2002. 8. 28 ~ 31	가고시마	양국 중소기업 비즈니스 매칭사업, 중소기업 기술자 연수 및 전문기술자 파견사업 실시 등
제10회	2003. 7. 14 ~ 17	제주	이공계 인턴 연수사업 확대 실시, 반도체 구매상담회 등
제11회	2004. 7. 13~16	구마모토	IT 전시·상담 사이트 구축, 대학·기업 간 ON-LINE 기술협력체제 구축, e테크노 트레이드 협력 등
제12회	2005. 10. 11~14	제천	한·일(규슈) IT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구축, 기술자 연수 등
제13회	2006. 7. 11~7. 14	사가현	중소기업간 협력 촉진, 경제사절단 파견, 각종 전시회 참가, 인재육성 및 인제교류 등
제14회	2007. 7. 11 ~ 12	부산	한·일(규슈) 중소기업간 경제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단 파견 등
제15회	2008. 6. 26 ~ 27	기타큐슈	한·일 환경기술교류 협력, 광주·규슈 간 금형산업 교류협력관계 구축 등
제16회	2009. 10. 7~10	광주	일본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초광역 경제제휴 모델 책정 조사 실시 등
제17회	2010. 10. 12~15	기타큐슈	환경산업교류의 촉진 강화, R&D 네트워크 구축 연구회 발족, 규슈의 한국관광객 유치 촉진 등
제18회	2011. 11. 15-18	대전	한일산업기술통합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전기차 및 지능형고통시스템 관련 교류 등

자료: 한일경제협회소식 각호.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지자체,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KOTRA 등 경제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며, 일본(규슈) 측에서는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장, 각 시정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표 4-12.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추진 성과: 요약

회차	개최일시	개최도시	주요 내용
제1회	2000. 7.5 ~ 7	도야마	기업 및 자치단체간 교류촉진사업
제2회	2001. 2. 19-23	서울	기술인력교류 확대, 대구 테크노파크와 도야마 테크노폴리스 간 협력협정체결 추진 등
제3회	2002. 4. 24	가나자와	무역·투자·기술 양국기업 협력 수요조사, 기타 산업기술협력사업 추진
제4회	2003. 5 28-30	대구	양양 국제공항과 도야마 공항 간 정기항로 개설 추진, 한국 이공계 대학생 일본기업 현지연수 확대 등
제5회	2004. 5. 26-29	도야마	참여 자치단체의 투자환경 홍보, 산업전시회 상호참가 지원, 한국 이공계 인턴 대일 연수사업 등
제6회	2005. 7. 19-22	경주	산업기술협력사업 및 조사연구 추진
제7회	2006. 10. 18-21	후쿠이 현	IT 인재교류 확대, 바이오 분야 교류협력, 산업단지간 기술교류 등
제8회	2007. 11. 7 ~ 10	울산	기업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산업 공동 연구 등
제9회	2008. 5. 21 ~ 25	가나자와	IT·기계분야 교류촉진, 부산항과 호쿠리쿠 지역항만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제10회	2009. 9. 10-11	원주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일본기업 투자협력, 초루구항 정기 컨테이너항로 이용촉진 등
제11회	2010. 8. 3-6	도야마	한일산업교류 세미나, 의약업 관련 교류촉진 등
제12회	2011. 9. 5 ~ 7	경주	신약개발 관련 MOU 체결, 울산시와 도야마 시 업무협약 체결

자료: 한일경제협회소식 각호.

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원칙적으로 연 1회 한·일간 순환 개최되며, 2011년까지 총 18회의 교류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양국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정비(교류창구 설치, 기술중개, 정보교환), 연수생 지원 및 기술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투자환경 관련 정보공유 및 홍보지원, 기타 지역간 산업교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1999년 12월 ‘제2회 한일민관합동투자촉진협회의’에서 합의된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는 한국에서는 강원도, 대구, 울산, 경북 등의 지

자체,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무역협회, 항만공사 등의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중부경제산업국을 포함하여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3개 지자체와 호쿠리쿠경제연합회, 상공회의소, JETRO 등 6개 경제단체가 참가하였다. 참가 지자체 구성만 다를 뿐 기본적인 협력사업 내용은 한일(규슈)경제교류회의와 거의 유사하다.

한일경제교류회의는 지식경제부, 일본의 경제산업성 등 정부 참여자도 있지만, 주로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해 왔다. 실제 두 회의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¹⁴¹⁾에 따르면,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형성뿐 아니라,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참여, 인적교류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사후평가나 피드백 등, 실제 협력사업 추진이 안정적인 경제협력관계로 이어지는 효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평가: 성과 및 보완과제

가. 지자체간 교류협력

한·중·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좀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교류협의체로는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한·중·일

141) 이부형, 노정휘(200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연구센터.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협의체들은 현재 경제통상, 환경, 문화관광, 방재, 과학기술 등에 걸쳐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는 총회 외에 별도 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류협력 사례 외에도 지방정부간 1 대 1 교류협력(자매결연, 우호교류) 또한 한·중 간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한·중 간에는 484건, 한·일간에는 174건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관계가 체결되었다. 각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은 상호 국제행사 참여, 고위인사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방문,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교류, 중소기업 무역상담회, 관광설명회 등으로 다자간 교류협력 사례와 유사하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3국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3국의 관계개선 및 상호 연계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되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의 경우 환황해권 등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비교적 인적이동에 유리한 지역들간의 협력에 집중되어 있다. 한·중 간의 교류협력은 중국의 경우 동북 3성 및 동부 연안지역, 한국의 경우 수도권 및 서해권 도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일 간의 교류협력 또한 주로 양국의 환동해권역 주요 도시¹⁴²⁾들서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 교류사업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단순히 교류 자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이 나

142) 일본의 규슈, 아마구치 현, 시마네 현, 돗토리 현, 한국의 강원도, 경상도, 부산 등.

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들이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교류협력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류협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교류협력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성과보다는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 중국 측의 경우 상호투자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의 성과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⁴³⁾ 이러한 입장 차이로 결국 상호교류협력은 구체적인 성과도출보다는 상호 네트워크 형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 담당자와 해당 지역의 업계 대표간의 입장도 조금씩 달랐다. 실제 동아시아경제교류연합회의 경우 각국의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시정부 관계자와 상공회의소 관계자 간에 협력의 성과 부문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다. 상공회의소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자체간 투자 등 구체적인 성과에 목적을 두고 있는 데 반해, 교류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각 지방정부가 핵심 주체인 현재의 교류협력 체계하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¹⁴⁴⁾ 특히 이러한 문제는 의견 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교류협력사업일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른 원인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지속성 있

143) 일본(기타큐슈), 중국(다롄) 지자체 교류협력 담당자 면담 결과에 근거(2012. 8. 9~10).

144) 기타큐슈 상공회의소(Hotta Yasuharu) 면담 내용에 근거(2012. 8. 10).

는 교류협력이 어려우며, 비슷한 교류협력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¹⁴⁵⁾ 다만, 이는 주로 중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일본의 경우 오히려 담당자의 교체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완전히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 협력이슈는 원천적으로 논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적인 협력체계로 인하여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상대적으로 국가 차원의 외교적 갈등 등의 문제에 영향을 덜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각 지자체별 교류활성화 및 협력관계를 통해 정서적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교류협력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현재의 추진성과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도출된 의제라 할지라도 정부 혹은 업계 등 다른 협력채널에서 논의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해당 협력채널에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교류협력체간 상호 연계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의 성과 및 주요 합의사항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보고 및 제안 등을 통해 중앙정부나 업계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나, 여러 협력채널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려되는 사업의 중복 등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45) 다렌시 정부 관계자 면담내용에 근거(2012. 8. 9).

나. 업계간 교류협력

한·중·일 업계간 교류협력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3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과 각 산업별로 대표적인 협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류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업계간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의 경우 2002년부터 비즈니스 포럼으로 추진되던 것을 2009년부터 비즈니스 서밋으로 전환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연계 추진하는 한편,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3국 정상회의에 전달함으로써 업계의 대표입장을 3국 정상들에게 제안하는 대표적인 채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주로 논의되는 이슈는 3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 구상 등으로, 구체적인 업계간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 정부간 협력을 촉구하는 일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은 그 추진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사업의 경우보다는 주로 3국의 주요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사 대상은 제2장·제3장과 일치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농수산업, 에너지·환경, 교통·물류, 문화·관광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한·중·일 3국의 전 세계에서 수출비중이나 3국간 상호의존도를 고려하여 정보통신 산업, 섬유산업, 철강산업,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세부 산업별 실태를 조사하였다. 산업별 주요 추진성과를 요약해 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정보통신 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최근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은 대체로 각 국가별 시장정보 공유, 상호투자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각종 전시회 등), 해당 산업과 연계된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 기타 인적교류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업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 또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상당부분 그 성과가 인정되나, 교류협력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째, 업계간 교류협력의 경우 3자간보다는 한·일, 한·중 간의 양자간 협력이 활발하다. 이는 다자간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 경제의 발전수준 및 특성의 차이로 인한 부분 또한 크다. 한국과 일본의 양자간 교류협력의 경우 한국 측의 일본기술 도입 필요성과 일본 측의 협력업체 다변화 필요성 등이 맞물려서 일찍부터 비교적 활발한 교류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3자간 협력의 경우 일본·한국 공히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경쟁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업계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¹⁴⁶⁾ 이처럼 중국시장에 대한 전 세계 기업간의 경쟁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 측에서는 제3시장 진출과 관련한 업계간 교류협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¹⁴⁷⁾ 다만, 이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업계 차원에서의 각 교류협력사업은 대부분 상호 연계성이 없이

146) 제2장의 ‘한·중·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도’ 참고

147)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관계자 면담 결과에 근거(2012. 8. 8).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비즈니스 서밋의 경우 전경련 등 3국의 주관기관의 하위기관으로 볼 수 있는 각 산업별 협회 등으로부터 별도 의견수렴 등의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타 산업별 협회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업계 차원의 협력채널과 교류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업계 차원의 교류협력의 경우 태생적으로 비즈니스적인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기업 등 하위 협력채널과의 교류가 적은 것은 담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업체간 밀접한 교류에 대하여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 양자간 교류협력의 사례 등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일부 교류협력 파트너간의 인적·조직적 특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례로 일한·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의 경우 동일한 목적에 따라 양국에 설립된 기관이나, 일본 측의 경우 실제 업계 종사자 위주의 인력을 활용(회원기업의 중간관리자급 파견)하는 한편, 한국은 이와는 달리 산업지원활동과 관련하여 특화된 별도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 담당자간 견해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상호 교류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¹⁴⁸⁾

이와 같은 한계점과 관련하여 [표 4-13]에서는 각 분야별로 주요한 교류협력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민간 교류협력은 결국 해당 업계의 비즈니스적인 필요에 의해 추진될 수밖에 없으므로 업계 차원에서 앞에서 제기된 한계점을 직접 보완해 나

148)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관계자 면담 결과에 근거(2012. 8. 8).

표 4-13. 한·중·일 업계간 교류협력체계 비교

구분	양자협의		다자 협의	정부 연계	주요 교류 내용	
	한·중	한·일				
제조 업	정보통신	○	○	○	△	표준협력, S/W 포럼
	섬유	○	○	○	X	한·중·일 FTA, 환경
	철강	△	△	X	△	환경, 철강통계
	자동차	△	○	X	X	환경/안전, 기술표준
농수산업	△	△	△	△	안전조업, 공동자원관리	
에너지/환경	X	X	△	△	바이오 산업 교류	
금융	△	△	△	X	개별 기업간 업무제휴	
교통/물류	X	X	△	X	물류시스템 선진화	
문화/관광	○	○	○	△	문화단체 지원, 세미나 등	

주: “△”에 대한 설명(근거)

- 1) 정보통신: 정보통신 분야 표준협력사업에 정부 측 담당자가 어드바이저로 참여
- 2) 철강: 양자 간 순수 민간협의체는 없으나, 철강대화(부처과장급 협의체)에 민간이 참여
- 3) 자동차: 한·중 간 자동차산업협회는 2012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4) 농수산업: 수산업 관련 교류협력만 존재하며, 3국 수산고위급 회담과 병행하여 추진
- 5) 에너지/환경: 바이오산업 관련 민간교류사업 추진 예정, 정부주관 환경 라운드 테이블에 민간이 공동참여
- 6) 금융: 개별 기업간 업무제휴 사례만 존재하며, 협회간 교류사례는 없음.
- 7) 교통/물류: 3국이 모두 참여하나, 중국 중심으로 운영
- 8) 문화/관광: 한·중·일 관광포럼은 관광장관회의 기간에 동시에 개최되며, 정부관계자 참석

가도록 독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앞서 지자체 사례와 관련하여 제시한 개선방안과 마찬가지로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들이 좀더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업계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각 분야별 협의체간 상호교류를 위한 채널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다. 혼합형 교류협력

한·중·일 3국간 교류협력의 채널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크게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업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는 다양한 성격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세 가지 사례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교류협력사업들도 존재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혼합형 교류협력 사례로 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혼합형 교류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중·일 FTA 공동연구,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을 선정하여 그 추진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혼합형 교류협력 사례들은 각각의 특성 및 운영체제도 서로 달라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체로 정부간 합의에 따라 시작되고 이에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의채널이 확대 및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앞서 지방정부 혹은 업계간 단독 협의체에 비해 다양한 의견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일 간 교류협력사업인 한일경제교류회의의 경우 중앙(지식경제부)·지방정부 및 경제단체, 기업 등의 참여에 따라 투자유치 및 홍보뿐 아니라 인력교류 등에서도 활발한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이어지는 부분은 다소 미흡하나, 업계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여타 협력사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의 경우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나, 단순히 민간 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주도에 따라 협력채널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정부·업계 간 협력의 긍정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즉 앞서 지방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각 협의체

간 상호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혼합형 협력채널의 활성화가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간 교류협력과 마찬가지로 양자간 교류 협력에 비해 3자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동북아 표준협력포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3자간 협력사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교류는 상대적으로 한·일 간에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3국간 기술격차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른 부분이 크나, 중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여건이 아직 미흡한 부분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일례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경우는 한국 측 주관기관이 한일경제협회로서 한일경제협력 사업비에서 예산을 조달함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은 구체화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혼합형 교류협력의 경우 3자간 균형 있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업계 차원의 기반여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아직 한국과 중국은 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다. 또한 순수히 업계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기반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 정부 측이 민간과 같이 참여하는 3자간 교류협력 채널 하에서의 교류협력 예산편성 혹은 정부주도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3국간 균형적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특성 및 추진방안

1.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비교사례
2.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3.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과제



제3장과 제4장에서 다룬 한·중·일 3국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 차원에서의 대화채널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경제 통합 차원에서의 장기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서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과 추진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아·태 지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지역경제협의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비교사례

본 절에서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 협력체인 APEC, 아세안+3 협력체제 및 통합 면에서 가장 앞서 2015년을 목표로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ASEAN)을 사례로 검토하고자 한다.¹⁴⁹⁾

149) 단, 아세안+3 협력체제가 아세안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APEC, 아세안 및 아세안+3 협력체제 순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1) 개요 및 특성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1989년 아·태지역의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미국 12개국이 창설 회원으로 출범하였다. 그 후 1991년 중국, 홍콩 및 대만, 1993년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그리고 1998년에는 페루, 러시아 및 베트남이 참여함으로써, APEC의 회원은 현재 총 21개국(지역)에 달한다.¹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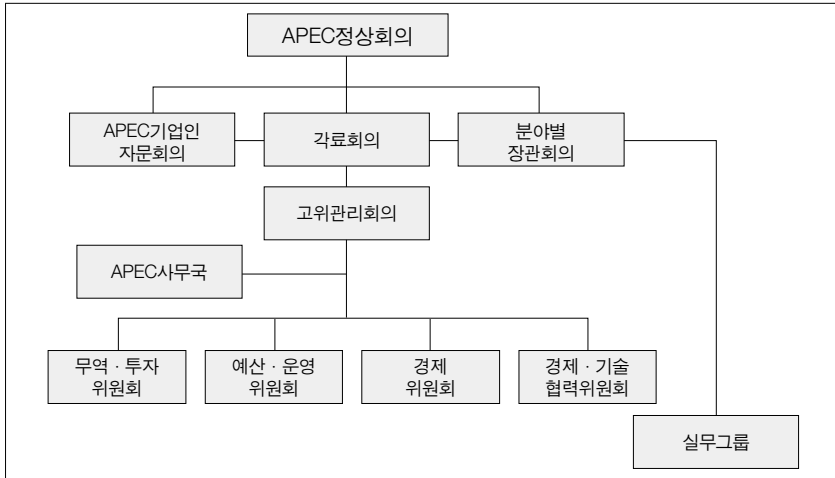
1989년부터 1992년까지 APEC은 비공식적인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급 회의로 진행되었으나, 1993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연례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APEC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비즈니스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 등을 중시한다.

APEC의 특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에 의존하지 않고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기 위한 회원국 정부간 경제·무역 포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150) <http://www.apec.org/About-Us/About-APEC/History.aspx>.

그림 5-1. APEC 조직도



자료: http://www.apec.org/About-Us/How-APEC-Operates/~/_media/Files/AboutUs/Structure/APEC%20Structure_Sep2012,ashx

2) 체계 및 기능

가) APEC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매년 회원국 중 하나가 APEC 회의들을 주최하며 의장국이 된다. 주최국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의장 역할을 담당하는 외에도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APEC 기업인자문회의 및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관련 사항을 정한다.¹⁵¹⁾

APEC 정상들은 APEC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APEC 각료회의 및 APEC 기업인자문회의로부터의 건의를 고려하여 작성된 APEC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APEC의 정책의제가 수립된다.

151) 러시아가 2012년 APEC 회의의 주최국이었으며, 이에 따라 제20차 APEC 정상회의는 9월 8~9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다.

나) APEC 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외교 및 경제·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각료회의는 매년 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된다. 장관들은 해당연도 사업을 검토하고 정상회의에서 고려될 사항을 건의한다.

다) 분야별 장관회의(Sectoral Ministerial Meetings)

분야별 장관회의는 통상, 재무, 중소기업, 정보통신, 교통, 인력개발, 에너지, 관광, 보건, 과학기술, 교육, 여성, 해양, 환경, 광업, 구조개혁, 식량안보, 산림 및 여성·경제 분야에서 개최된다.

표 5-1. APEC 분야별 장관회의(1992~2012년)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연도
통상장관회의	1994, 1996 이래 매년
재무장관회의	1994 이래 매년
중소기업장관회의	1994 이래 매년
정보통신장관회의	1995, 1996, 1998, 2000, 2002, 2005, 2008, 2010, 2012
교통장관회의	1995, 1997, 2002, 2004, 2007, 2009, 2011, 2012
인력개발장관회의	1995, 1997, 1999, 2001, 2010
에너지장관회의	1996, 1997, 1998, 2000, 2002, 2004, 2005, 2007, 2010, 2012
관광장관회의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보건장관회의	2003, 2006, 2007
과학기술장관회의	1995, 1996, 1998, 2004
교육장관회의	1992, 2000, 2004, 2008, 2012
여성장관회의	1998, 2002
해양장관회의	2002, 2005, 2010
환경장관회의	1994, 1996, 1997, 2012
광업장관회의	2004, 2005, 2007, 2012
구조개혁장관회의	2008
식량안보장관회의	2010, 2012
산림장관회의	2011
여성·경제장관회의	2011, 2012

자료: http://www.apec.org/About-Us/How-APEC-Operates/~/_media/Files/AboutUs/Structure/APEC%20Structure_Sep2012.ashx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에 통상, 재무, 중소기업 및 환경 장관회의가 열린 이래 점차 분야별 장관회의가 확대되어 왔다. 재무, 중소기업 및 통상장관회의만 매년 개최되고 있고, 관광장관회의는 2000년 이래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데 반해, 대다수 분야별 장관회의는 다소 불규칙하게 개최되고 있다.

이들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나온 정책건의도 정상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정상들에게 보고된다.

라) APEC 기업인자문회의(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은 연례회의 및 공식 보고서를 통해 기업인 시각에서 APEC 이슈에 대한 정책건의를 APEC 정상들에게 제공한다. 연례보고서에는 APEC 역내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가 포함되어 있다. ABAC 회의는 매년 4회 개최되며, 대표가 APEC 각료회의에 참석한다.¹⁵²⁾

마)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SOM은 APEC 각료회의의 지시하에서 활동하며, 고위관리는 APEC 실무 차원의 활동 및 사업을 지휘한다. 이들 활동과 사업은 4개의 고위위원회(Committees)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 위원회는 소위원회(Sub-committees),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실무그룹(Working Groups), 특별업무그룹(Special Task Groups)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고위관리는 APEC 각료 및 APEC 정상들을 위한 정책건의를 작성한다. SOM은 연 3~4회 열

152) <http://www.apec.org/About-Us/How-APEC-Operates/Policy-Level.aspx>.

리며, 주최국이 의장을 맡는다.

바) 위원회 및 하부구조

APEC에는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경제·기술협력위원회(SOM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 및 예산·운영위원회(BMC: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등 고위 위원회가 있다.¹⁵³⁾

CTI는 APEC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관련 사업을 관할하며, 소위원회와 전문가그룹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감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SOM은 APEC 고위관리가 APEC 경제·기술협력 의제를 조정하고 운영하며 아울러 회원국이 제안하는 협력사업을 판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EC는 정책분석과 집행될 수 있는 사업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진흥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EC는 APEC 내 있는 다른 관련 조직들과 협력한다.

BMC는 SOM에 예산, 행정 및 운영 문제 등에 관해 자문한다. BMC는 각종 위원회 및 실무그룹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SOM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방안을 건의토록 되어 있다.

한편 실무그룹은 APEC 정상, 각료, 분야별 장관 및 고위관리의 지시에 의해 APEC의 특정 분야 사업을 수행한다. 2012년 9월 현재 APEC

153) <http://www.apec.org/About-Us/How-APEC-Operates/Working-Level.aspx>

내 실무그룹은 농업기술협력, 반부패·투명성, 비상사태대비, 에너지, 불법벌목 및 거래 관련 전문가그룹, 보건, 인적자원개발, 해양·어업, 중소기업, 정보통신, 관광 및 교통 12개이다.

CTI 산하에는 표준과 적합(Standards and Conformance) 및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2개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시장접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 6개의 전문가그룹이 존재한다. 그리고 EC 산하에는 1개의 전문가그룹(경쟁정책 및 법률)이 있다.

또한 반테러(Counter Terrorism)와 지뢰(Mining) 관련 2개의 특별업무 그룹이 있다.

이 외에도 APEC에는 산업대화(Industry Dialogues)와 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s)이 존재한다. 산업대화는 자동차대화, 화학대화, 생명과학혁신포럼 및 농생명공학 고위정책대화 4개가 있다.¹⁵⁴⁾ 그리고 정책파트너십은 여성과 경제, 과학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3개가 존재한다.¹⁵⁵⁾

사) APEC 사무국

APEC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소재하며, 조정, 기술지원 및 자문업무 외에도 정보관리 및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무국은 APEC이 지원하는 250여 개의 사업을 감독하며, APEC 회원국 및 APEC 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중심적 역할은 담당한다. APEC의 연간 예산도 사무

154) 그중 자동차, 화학 및 생명과학 관련 대화는 CTI, 농생명공학 대화는 SOM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155) 그중 여성과 경제 및 과학기술혁신은 경제·기술협력위원회, 식량안보는 SOM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에 의해 관리된다.

사무국의 사무총장직은 2009년까지는 매년 주최국의 대사급 인사가 교대로 맡아왔으나, 2010년부터는 3년 임기의 개방직으로 바뀌어 회원국 전문가에 문호가 개방되었다.

사무국의 핵심 인력은 사업지원부(group support)에 소속된 회원국에서 파견된 팀장(program directors) 및 정책지원부(policy support unit)에 속해 있는 전문인력이며, 그 외 관리 및 홍보 부문 인력과 여타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⁶⁾

나. 아세안(ASEAN)

1) 개요 및 특성

아세안(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 5개국이 참여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순차적으로 회원국이 되었다.

APEC과 달리 아세안은 초기부터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발전과 평화 및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남아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아세안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구상인 ‘아세안 비전 2020’을

156) 2012년 9월 현재 APEC 사무국에는 사업지원부 소속 팀장과 정책지원부 전문인력이 각각 17명과 11명이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리직과 홍보직에 11명, 그리고 전체 11명의 지원인력이 근무하고 있다(<http://www.apec.org/ContactUs.aspx?t=Secretariat>).

채택하였고, 2003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안보협력,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협력을 세 기둥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2007년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건설 목표를 2015년까지로 앞당겼다. 그리고 아세안 설립 40주년인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한편 2008년에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이 발효함에 따라 아세안 및 아세안 공동체의 법적 기반 및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조성되었다.¹⁵⁷⁾

2) 체계 및 기능

가) 아세안 정상회의(ASEAN Summit)

1967년 동남아 5개국 외교장관간 합의로 아세안이 출범하였으나, 첫 번째 아세안 정상회의는 1976년에 비로소 개최되었다. 1977년 제2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으나, 그 후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이며, 공식 아세안 정상회의가 연례적으로 개최된 것은 2001년 이후부터이다(표 5-2 참고).

이와 같이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상회의 개최의 정례화가 늦어진 것에서 아세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의장국은 회원국 명칭의 알파벳 순으로 매년 순번제로 맡기로 되어 있다. 의장국은 아세안 정상회의뿐 아니라 아세안+3 정상회의나 동

157) 아세안의 전개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이창재, 방호경(2011), pp. 95~99 및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http://www.aseansec.org>) 참고.

표 5-2. 아세안 정상회의

회차	개최시기	개최장소
1차	1976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리)
2차	1977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차	1987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4차	1992년 1월	싱가포르
5차	1995년 12월	태국 (방콕)
비공식 1차	1996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비공식 2차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6차	1998년 12월	베트남 (하노이)
비공식 3차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비공식 4차	2000년 11월	싱가포르
7차	2001년 11월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8차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9차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10차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
11차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2차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
13차	2007년 11월	싱가포르
14차	2009년 3월	태국 (차앙)
15차	2009년 10월	태국 (차앙 후아힌)
16차	2010년 4월	베트남 (하노이)
17차	2010년 10월	베트남 (하노이)
18차	2011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차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20차	2012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
21차	2012년 11월 (예정)	캄보디아 (프놈펜)

자료: <http://www.asean.org/asean/asean-summit>

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 관련 정상회의도 주최하며, 그 외에도 아세안 각료회의, 아세안 공동체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관리 회의 및 상주대표위원회 등도 주최한다.

나) 아세안 조정협의회(ACC: ASEAN Coordinating Council)

2008년 설립된 아세안 조정협의회는 아세안 각국의 외교장관들로 구성되어, 연 2회 이상 개최된다. 아세안 공동체 건설 관련 주요 이슈, 아세안 사무국의 기능 및 활동,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업무,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실행계획 집행, 아세안 연계(ASEAN Connectivity)의 진전 등 특정 아세안 공동체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전반적 업무를 주관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CP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가 지원토록 되어 있다.¹⁵⁸⁾

다) 아세안 공동체협의회(ASEAN Community Councils)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 협의회,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협의회 및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협의회가 존재한다.

APSC협의회는 2009년 설립된 후 연 2회 이상 개최되며, 실무 차원에서는 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지원한다.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동남아원자력무기금지구역위원회,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아세안 법무장관회의, 아세안 초국적범죄 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아세안 인권 정부간위원회가 포함된다(표 5-3 참고).

158) ASEAN Annual Report 2011-2012(2012), pp. 20-21. 2011년 설립된 아세안 연계 조정위원회(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도 관할한다.

표 5-3.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협의회의 산하 회의

회의명	설립연도 및 회의 수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AMM)	1967년 이래 매년, 중간에 비공식회의 및 휴양지 회동(retreats)
동남아원자력무기금지구역위원회 Commission on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SEANWFZ Commission	1999년 이래 매년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	2006년 이래 매년
아세안 법무장관회의 ASEAN Law Ministers Meeting (ALAWMM)	1986년 이래 3년마다
아세안 초국적범죄 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AMMTC)	1997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1994년 이래 매년
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CPR)	2009년 이래 매달
아세안 인권 정부간위원회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2009년 설립, 2012에는 매달 개최

자료: ASEAN Annual Report 2011-2012(2012), pp. 28-34.

AEC협의회의는 2009년 설립된 이래 매년 2회 이상 개최되며 실무차원에서는 경제고위관리회의(SEOM: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가 지원한다.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AEC협의회의에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아세안 자유무역지역협의회의, 아세안 투자지역협의회의, 아세안 재무장관회의, 아세안 농림장관회의, 아세안 에너지장관회의, 아세안 광업장관회의, 아세안 과학기술장관회의,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아세안 관광장관회의 및 아세안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이 속해 있다.

그중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서비스교역, 경쟁정책과 법률, 소비자보호,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민관부문협력(Public-Private Sector Engagement)

표 5-4. 아세안 경제공동체협회의 산하 회의

회의명	설립연도 및 회의 수	실무차원 지원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AEM)	1975년 이래 매년	SEOM
아세안 자유무역지역협의회 ASEAN Free Trade Area (AFTA) Council	1992년 이래 매년	SEOM
아세안 투자지역협의회 ASEAN Investment Area (AIA) Council	1998년 이래 매년	SEOM
아세안 재무장관회의 ASEAN Finance Ministers Meeting (AFMM)	1997년 이래 매년	AFDM ¹⁾
아세안 농림장관회의 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 (AMAF)	1979년 이래 매년	SOM-AMAF
아세안 에너지장관회의 ASEAN Ministers on Energy Meeting (AMEM)	1980년 이래 매년	SOME
아세안 광업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Minerals (AMMin)	2005년 이래 연 2회	ASOMM
아세안 과학기술장관회의	1980년 이래 매년 (비공식회의 포함)	COST ²⁾
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ASEAN Telecommunication and IT Ministers Meeting (TELMIN)	2001년 이래 매년	TELSOM/ ATRC ³⁾
아세안 교통장관회의 ASEAN Transport Ministers Meeting (ATM)	1996년 이래 매년	STOM
아세안 관광장관회의 Meeting of the ASEAN Tourism Ministers (M-ATM)	1996년 이래 매년	NTOS ⁴⁾
아세안 메콩강유역개발협력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AMBDC)	1996년 이래 매년	AMBCD 집행위원회 회의

주: 1) 아세안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ASEAN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2) 과학기술위원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3) 아세안 정보통신 고위관리회의 및 통신조종자협의회(ASEAN Telecommunication and IT Senior Officials Meeting and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4) 아세안 국립관광공사회의(Meeting of the ASE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s)

자료: ASEAN Annual Report 2011-2012(2012), pp. 38-56.

외에도 아세안과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 아세안+1 FTAs,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대외경제관계 및 통계협력 등을 관할한다.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협의회는 아세안 상

표 5-5.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협회의 산하 회의

회의명	설립연도 및 회의 수
아세안 공보장관회의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Information (AMRI)	1989년 이래 18개월마다
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AMCA)	2003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교육장관회의 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 (ASED)	2006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 (AMMDM)	2004년 이래 필요시
아세안 환경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he Environment (AMME)	1981년 이래 3년마다 중간에 연례 공식 회의
아세안 월경성연기안개공해협약 당사국회의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2003년 이래 최소한 연 1회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ASEAN Health Ministers Meeting (AHMM)	1980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노동장관회의 ASEAN Labour Ministers Meeting (ALMM)	1975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농촌개발·빈곤퇴치장관회의 ASEAN Ministers on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1997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MMSWD)	1979년 이래 3년마다
아세안 청소년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Youth (AMMY)	1992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행정사무회의 ASEAN Conference on Civil Service Matters (ACCSM)	1980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여성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Women (AMMW)	2011년 이래 3년마다
아세안 체육장관회의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ports (AMMS)	2011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 여성·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위원회 ASEAN Commiss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ACWC)	2010년 이래 연 2회 이상

주: *이전 명칭: ASEAN Conference on Reform in the Civil Service (ACRCS)

자료: ASEAN Annual Report 2011-2012(2012), pp. 60-72.

품무역협정(ATIGA), 아세안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 등을 다룬다.

ASCC협의회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고위관리위원회(SOCA)로부터 실무 차원의 지원을 받는다. ASCC협의회에는 아세안 공보장관회의, 아세안 문화·예술장관회의, 아세안 교육장관회의, 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아세안 환경장관회의, 아세안 월경성연기안개공해협약 당사국회의,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아세안 노동장관회의, 아세안 농촌개발·빈곤퇴치장관회의, 아세안 사회복지·개발장관회의, 아세안 청소년장관회의, 아세안 행정사무회의, 아세안 여성장관회의, 아세안 여성·아동권리보호 및 증진위원회, 아세안 체육장관회의가 포함되어 있다(표 5-5 참고).

라) 상주대표위원회(CP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아세안 회원국은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대사급 인사를 아세안 상주대표로 지명해야 하며, 이들로 상주대표위원회가 구성된다. CPR은 아세안 공동체협의회 및 분야별 장관급회의를 지원하고, 아세안 국별 사무국과 여타 분야별 장관급회의를 조정한다. 또한 아세안 사무총장 및 아세안 사무국과 연락하고, 아세안 역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도우며, 아세안 조정협의회로부터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¹⁵⁹⁾

마)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사무국은 1976년 아세안 장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81년부터 현 소재지에 위치해 있다. 사무국의 기본 기능은 아세안 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아세안 사업과 활동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부록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세안 사무국의 조직은 아세안 공

159) <http://www.asean.org/asean/asean-structure/committee-of-permanent-representatives>.

동체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아세안 경제공동체 및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아세안+3 협력체제

1) 개요 및 특성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한·중·일 정상이 함께 참여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이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세안+3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장관급회의 및 고위관리회의가 점차 확충되면서 아세안+3 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아세안+3 협력체제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세안 중심으로 운영되어 모든 회의가 아세안 회의처럼 일반적으로 아세안 의장국에서 아세안 회의에 이어 열리며, 아세안 의장국이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분야별 장관회의나 고위관리 회의들도 아세안 회의와 같이 크게 정치·사회,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으로 분류된다.

2) 체계 및 기능

가) 아세안+3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는 1997년 개최된 이래 매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고 있다.¹⁶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 정치, 경제 이슈

가 논의되며, 정상들은 아세안+3 협력 상황을 검토하고 아세안+3 협력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한다.

나) 장관급회의¹⁶¹⁾

아세안과 비교해 아세안+3 차원의 장관급회의 수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치·안보부문의 경우 아세안+3 체제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외에는 아세안+3 초국적범죄 장관회의만이 존재한다.

경제부문의 경우에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외에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 및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들 장관회의 중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른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표 5-6. 아세안+3 정치·안보 부문 장관급회의

회의명	설립연도 및 회의 수	실무차원 지원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AMM+3)	2000년 이래 매년	SOM+3
아세안 초국적범죄 장관회의 (AMMTC+3)	2004년 이래 격년제	SOMTC+3

자료: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2005-2010(2011);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Database (<http://www.asean.org/images/archive/22206.pdf>)

160) 2008년 10월에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7차 ASEM 정상회의 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식 실무 조찬회의 형식으로 특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바 있다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 <http://www.aseansec.org> 참고).

161)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2005-2010(2011) 및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 <http://www.aseansec.org> 참고.

표 5-7. 아세안+3 경제부문 장관급회의

회의명	설립연도 및 회의 수	실무차원 지원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AEM+3)	2000년 이래 매년	SEOM+3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AFMM+3)	1999년 이래 매년	AFDM+3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AMAF+3)	2000년 이래 매년	SOM-AMAF+3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 (AMEM+3)	2004년 이래 매년	SOME+3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M-ATM+3)	2002년 이래 매년	NTOS+3

자료: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2005-2010(2011);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Database (<http://www.asean.org/images/archive/22206.pdf>).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신용보증 투자기구(CGIM: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소 (AMRO: ASEAN Plus Three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등의 출범에 기여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04년에 통신장관회의가 열렸고, 2006년에는 비공식 과학 기술장관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세안+3 장관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개최될 계획이었던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조차도 매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아세안+3 문화·예술장관회의, 아세안+3 청소년장관회의 및 아세안+3 공보장관회의가 격년제로, 그리고 아세안+3 사회복지장관회의는 3년마다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사회·문화 부문의 아세안+3 장관회의들이 경제부문의 아세안+3 장관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8. 아세안+3 사회·문화 부문 장관급회의

회의명	설립연도 및 회의 수	실무차원 지원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ASEAN+3 EMM)	2002년 이래 매년	ASEAN+3 SOME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ALMM+3)	2001년 이래 격년제	SLOM+3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ASEAN+3 HMM)	2004년 이래 격년제	ASEAN+3 SOMH
아세안+3 문화·예술장관회의 (AMCA+3)	2003년 이래 격년제	
아세안+3 사회복지장관회의 (AMMSWD+3)	2003년 이래 3년마다	SOMSWD+3
아세안+3 청소년장관회의 (AMMY+3)	2007년 이래 격년제	ASEAN+3 SOMY
아세안+3 공보장관회의 (AMRI+3)	2009년 이래 격년제	

자료: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2005-2010(2011);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Database (<http://www.asean.org/images/archive/22206.pdf>).

2.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 및 기대효과

가. 특성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경제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APEC과 가장 가깝고, 경제 외에도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 및 아세안+3 협력체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그 체계 및 기능 면에서 APEC에서 많은 점을 참조할 수 있을 할 것이다.

또한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의 경우, 이미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왜 이들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한·중·일 경제협

의체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요구된다.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해 온 APEC은 아·태지역 21개 국가(지역)가 참여하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체이다. 비록 최근에는 APEC 차원의 FTA라고 할 수 있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형성이 모색되고 있으나, APEC은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반 경제통합과는 다르다. APEC의 주된 목표는 회원국간 무역·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관련 분야에서의 협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리고 아세안+3 협력체제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기존에 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대되어 시작되었고, 아세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 3국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 특히 금융협력을 논의하는 장이다. 이 체제 내에서 역내 FTA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체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동북아 3국간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협의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3국 경제의 지속된 성장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APEC이나 아세안+3 협력체제와 아세안에서의 경제분야 협력체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여러 면에서 이들 경제협력체와 구별될 수 있다.

첫째, 지리적으로 아·태지역이나 동아시아가 아닌 동북아에 국한되

어 있으며, 회원국 수도 이들 협력체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이다.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이나 동남아 아세안 10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3 협력체제에 비해, 동북아 3국간의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협력분야 및 과제의 선정이나 협력과제의 이행이 월등히 용이하고 효과적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 면에서는 한·중·일 3국간 격차가 존재하나 그 차이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며, 3국 모두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분야의 강국이다. 동시에 3국 모두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약하고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3국은 한자문화를 비롯해 문화적으로도 공유하는 부문이 많다. 따라서 기존 지역협력체들에 비해 3국이 관심을 갖고 협력을 모색할 분야가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제2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TA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미 3국 경제간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IT 부품을 포함하는 전자기기, 비전자기기, 철강을 포함하는 금속산업 및 화학제품에서 3국간 상호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주로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가 기존 지역협력체와는 달리, 한·중·일 3국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부문 및 산업 차원에서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중·일 3국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그 영향이 3국 외에도 동아시아나 아·태지역 나아가 세계경제 차원에서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 보듯이, 3국 경제

는 세계경제에서 1/5을 차지하며, 제조업의 경우 철강(선철 및 조강), 자동차, 조선(화물선), 전자제품(액정 디바이스와 같은 IT 품목), 섬유(방직용 섬유재료제) 등에서는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혹은 전 세계 수출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역협력체는 정상회의 혹은 장관회의 차원에서 협력체 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양한 대화채널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즉 정치적 의지에 의해 협력체가 출범한 후 협력체 체계가 조성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상당수의 장관급회의와 고위관리 및 실무급회의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이들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의체를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협의체가 여타 지역협력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체계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체계는 APEC과 대체로 유사할 것이다.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각료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 그 하부구조인 고위관리회의 및 주요 부문(혹은 이슈) 관련 위원회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장관급회의나 위원회의 산하에 다양한 형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s)이나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9]는 정례화된 경제부문 장관급회의 현황을 보여준 것이다. 지역 경제협의체 중 APEC에서 가장 소수의 장관급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

표 5-9. 지역경제협의체 및 한·중·일 3국간 정례화된 경제부문 장관회의

경제협력체	장관회의	정례화 및 빈도
APEC	재무장관회의 중소기업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매년
	관광장관회의	격년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AFTA 협의회 AIA 협의회 재무장관회의 농림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광업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통신장관회의 교통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아세안-메콩강유역개발협력	매년
	문화·예술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노동장관회의*	격년
	환경장관회의*	3년마다(중간에는 연례 비공식회의)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농림장관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매년
	노동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문화·예술장관회의*	격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경제통상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특허청장회의 환경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농업장관회의 문화장관회의	매년
	관세청장회의 교통물류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격년

주: *아세안과 아세안+3 협력체제 내에서는 사회·문화 부문으로 간주.
자료: 제5장 1절 및 제3장.

고 있고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장관급회의가 정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간 대화채널 면에서 아세안이 가장 긴밀한 경제협력체이고, APEC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제협력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 진행되고 있는 장관급 회의 수는 아세안보다는 적으나 APEC이나 아세안+3 협력체제에 비해서는 많아, 한·중·일 3국간 공식적인 경제협의체나 협력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적으로는 APEC이나 아세안+3 협력체제에 못지않은 정책 대화채널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¹⁶²⁾

한·중·일 경제협의체 구성 시 장관급회의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회의들에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APEC에도 있는 경제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운영위원회 외에도 상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협의를 위한 주요 산업별 회의(Industry Dialogues)나 전문가그룹(Expert Groups)을 하부구조로 하는 산업(제조업)위원회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다룰 서비스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5-2 참고).

경제장관회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던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3국의 경제운영을 총괄하는 장관간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정책협약이 요구되며, 또한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각료회의도 경제총괄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¹⁶³⁾

162) 앞 절에서 보았듯이 아세안의 경우 환경, 보건 및 문화부 장관은 사회·문화 부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3국간 에너지장관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으나, 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3국 모두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재의 교류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간 에너지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공동 대처할 대화채널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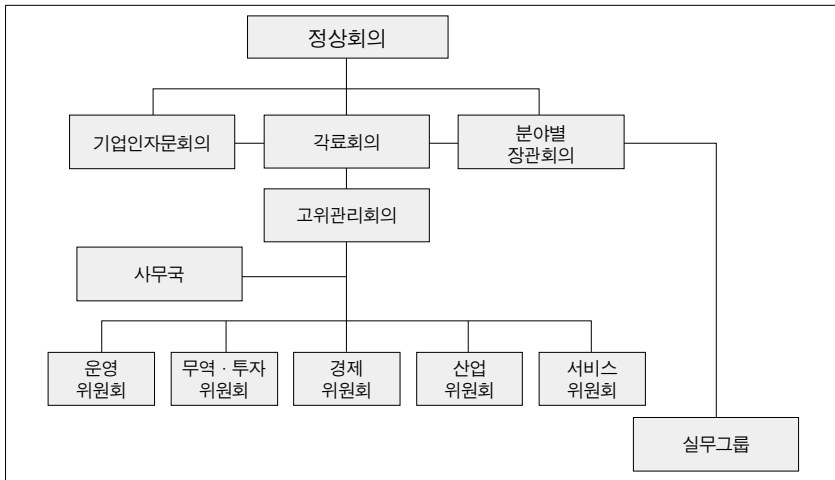
기업인자문회의는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시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을 보완하여 업종별 협회와 연계되어 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정상회의 시에만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APEC의 기업인자문회의(ABAC: APEC Advisory Council)와 같이 보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각종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에도 참석해야 할 것이다.¹⁶⁴⁾

사무국의 경우 현 3국 협력 사무국을 보강하여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고 각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한·중·일 경제협약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무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국 정부로부터의 파견된 인력 외에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사무총장도 3국이 순번제로 맡는 방식보다는 임기제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3) [부록 그림 1]~[부록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국의 정부 조직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2013년 3국 모두에서 신정부가 출범하고 정부 직제 개편 가능성이 있어 각 국별 구체적 부서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164) ABAC의 경우 연 4회 개최되며, 연례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에도 참석한다.

그림 5-2.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구성



다. 기대효과

1)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의 기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1년 동아시아비전그룹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동아시아 통합의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에서는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설립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중·일 경제협력 10주년을 기념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는 장기목표로 언급되었다.¹⁶⁵⁾

아세안 10개국을 2015년을 목표로 아세안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3국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¹⁶⁶⁾

165) Joint Statement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2009).

동북아 통합과 관련해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내 국가간 양자간 FTA조차 없는 상태이고,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영토분쟁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등이 상존하며, 때로는 정치·안보적 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체는 고사하고 동북아 경제공동체도 상당기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즉 동아시아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하는 공동체보다 낮은 단계인 경제협약체 정도가 상당기간 동안 실현가능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규모 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고 상호 경제교류가 활발하며 정부와 업계 차원에서 다양한 대화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한·중·일 경제협약체는 가까운 장래에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환경에 개선되는 대로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홍콩, 대만 등 여타 국가 및 지역이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차원의 ‘동북아 경제협약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경제협약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서 추구해야 할 중기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적 편익

한·중·일 경제협약체는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던 3국 정부부처간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채널을 보강하며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166)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의 추진이 중국과 일본의 이견 때문에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결국 아세안 주도의 RCEP가 2013년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써, 3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그 수준 또한 제고될 것이다.

3국 경제간 이미 상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3국 정부부처 및 업계간 정기적 대화채널이 활성화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교류 증진의 목표로 일컬어지는 무역 및 투자의 확대 외에도, 3국 정부간 세계적 경제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 금융위기에 대비한 협력방안 마련, 신흥산업 부문에서의 표준의 공동설정,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에서의 협력, 역내 물류체계의 협력을 통한 물류경쟁력 제고, 철강과 같이 세계경제에서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산업에서의 과잉생산 예방, 역내 문화교류와 관광 확대 및 각종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차원과 분야에서 경제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3국간 경제교류 및 협력의 증대는 결국 3국 모두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경제 외적 파급효과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는 경제부문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다. 첫째,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정부 관리를 비롯한 3국간 인적유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보다 자주 접촉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아세안에 비해 한·중·일 3국의 정부 관리간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출범하고 한·중·일 3국 정부 관리간 협의채널이 강화되고 정례화된다면, 그만큼 인적유대가 두터워질 것이고, 그 결과 업무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중·일 경제협약체는 3국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구축을 가져와 3국간 포괄적 관계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협약체와 함께 한·중·일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유럽에서와 같이 경제통합을 통한 정치·안보적 위협 및 갈등관계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일 경제협약체는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차원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간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경제 포럼에서 3국의 발언권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통해 지역이나 세계경제 차원의 이슈나 특정 의제에 대해 3국간 사전협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3국은 국제무대에서 3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종합적으로 볼 때, 한·중·일 경제협약이 출범할 경우 일차적으로 3국간 정상회의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한·중·일 정상회의의 위상 제고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지역 차원에서 정치적 리더십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강화된 정치적 리더십은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중요한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과거사 문제 및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역내 갈등 및 긴장관계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 과제

앞에서 지적한 한·중·일 경제협약체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중·일 3국간 갈등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3국 정상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한·중·일 경제협약체 설립을 이룩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그 실현을 위해 지금부터 착수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단계적 추진방안

1) 제1단계: 한·중·일 정상회의 체계 공고화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 정상간 회동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 이래 3국간 정상회의는 아세안+3 협력체제에서 벗어나 3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그리고 3국간에는 1999년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된 이래 장관급회의가 확대되어 현재 13개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를 포함, 18개 장관급회의가 운영된 바 있다.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 중 외교장관회의, 경제통상장관회

의, 재무장관회의, 환경장관회의, 보건장관회의, 농업장관회의, 문화장관회의 및 특허청장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교통물류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관광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는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표 5-6, 표 5-7, 표 5-8 참고).

그러나 제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경제 관련 장관급회의 중 2008년 출범한 독립적 한·중·일 정상회의와 개최장소 및 의장국이 연계되어 있는 회의는 현재 외교장관회의 및 경제통상장관회의에 불과하다. 이는 독립적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한 상당수의 장관회의가 여전히 아세안+3 협력체제하에서 개최되거나 2012년 처음 개최된 농업장관회의처럼 독자적으로 창설 및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우선 매년 개최되는 장관회의를 새로 출범한 정상회의와 개최장소, 의장국 및 개최시기 면에서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장관회의가 효과적으로 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정상회의의 지침이 장관회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력과제가 이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력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3국 협력 사무국으로 하여금 매년 합의된 협력과제의 수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상회의 및 장관회의 시 새로운 협력사업의 제안에 못지않게 이전에 합의된 협력과제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업계의 의견이 보다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현 비즈니스 서밋에서 각국의 업계 대표가 업종별 협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야별 장관회의나 고위관리회의에서도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보통신을 비롯한 주요 산업별 장관급회의가 3국 중 일국의 정부조직 개편이나 3국 정부조직의 비대칭성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지적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제2단계: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성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현재 한·중·일 3국간 운영되고 있는 대화채널을 보완하고 정상회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한·중·일 정상회의의 효과성 및 위상이 제고되면, 이를 토대로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결성하는 것은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즉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축은 결국 체계화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나. 추진과제

제2단계에서 한·중·일 경제협약체에 대한 3국 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경제적 경쟁관계 및 일부 경제 외적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3국 정치인 및 일반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어야 하며, 지금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아세안이 2015년을 목표로 아세안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협력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3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한·중·일 3국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3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한·중·일 경제협약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

또한 한·중·일 3국은 동북아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에도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3국간 경제협약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홍보해야 할 것이다. 3국은 지역경제의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지 못한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및 대만, 홍콩까지 동북아 경제통합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동북아 지역이 지닌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당면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중·일 경제협약체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한·중·일 경제협약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 관련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한·중·일 경제협약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1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3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¹⁶⁷⁾를 재정비해 추진하는 한편, 3국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특화된 연구기관의 설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¹⁶⁸⁾ 한

167) 1999년 3국 정상들의 합의해 의해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2009년 한·중·일 FTA 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으나,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편 민간 차원에서 동북아재단과 같은 조직을 통해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¹⁶⁹⁾

마지막으로 여타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체와 달리,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이미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및 여타 회의들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이들 회의를 정상회의와 연계해 체계화하면 그 다음에는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앞에서 지적한 다수의 편익을 3국이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3국의 정치인, 관료, 기업인 및 국민들이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한·중·일 경제협의체는 여타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체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결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3국의 정치인, 관료, 기업인 및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및 여타 회의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회의를 정상회의와 연계해 체계화할 경우 나머지는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그 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68) 현재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일본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인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연구기관은 특정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9) Lee(2003)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관련 논의를 심화·확산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동북아경제협력재단(FNAEC: Foundation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제6장 결 론



2012년은 한·중·일 3국 관계에 있어 상반된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 및 영토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특히 중·일 및 한·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바 있다. 반면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시작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11월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한편 중국과 일본 간의 이견 때문에 지연되어 왔던 동아시아 차원의 FTA 논의는 2011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주도로 지역 차원의 FTA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는 후, 2012년 11월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6개국(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정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세안 10개국은 수년 전부터 2015년을 목표로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이 주도한 제2기 동아시아비전그룹은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목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3국 모두에서 2012년 말 정권교체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3국의 새로운 정부가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 과제인 RCEP과 3국간 경제통합 과제인 한·중·일 FTA라는 2개의 당면과제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3국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라는 중·장기적 지역통합 과제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3국이 동아시아와 동북아 차원에서 각각 지역통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조망한 후 단기적 당면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같이 공식적 차원에서 거론되지는 않지만 학계 차원에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후자의 경우 그 실현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3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목표로 ‘한·중·일 경제협의회체’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이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시 한·중·일 3국이 공동대처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가까운 미래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상당기간 동안 동북아 차원에서의 유일한 지역협력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은 이미 APEC과 아세안+3 협력체제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회원국 수가 적은 한·중·일 경제협의회체는 협의 의체의 선정과 과제의 이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중·일 경제협의회체의 특성은 3국이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상호의존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는 데서도 나온다.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서비스와 농업 부문의 취약성, 에너지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한자문화의 공유 등 많은 공통점으로 인해 3국간 협력가능 분야가 여타 지역협력체에 비해 넓을 것이며, 상호의존도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보다 구체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면에서 한·중·일 경제협의회체는 APEC과 유사할 것이다. 이미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되었고 다수의 경제 관련 장관급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장관회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운

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특성상 거시경제 정책을 협의할 경제장관회의 및 에너지장관회의 등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파급효과로는 앞서 지적한 지역통합에의 기여 외에도 3국간 경제협력 증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등과 같은 경제적 편익, 3국간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구축 및 이에 따른 전반적 관계개선, 국제경제무대에서의 3국의 발언권 신장 및 지역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동북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토분쟁 및 과거사 문제로 3국간 첨예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일 경제협의체가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중·일 경제협의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제1단계에서는 한·중·일 경제협의체의 기반이 될 현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를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장관급회의 중 상당수가 정상회의와 연계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장관급회의가 정상회의와 장소, 의장국 및 시기 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장관급회의는 정상회의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정상회의의 효과성과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고, 제고된 정상회의의 위상은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제1단계에서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및 여타 회의들 사이에 체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2단계에서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한·중·일 정상회의 체제를 한·중·일 경제협약체로 격상시키기 위한 3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만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경제협력의 당위성이 3국간 갈등요인으로 인한 먹구름에 가려져 있는 현 시점에서 3국이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라는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중·일 경제협약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이 협약체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즉 한·중·일 경제협약체가 머지않아 추진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및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홍콩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3국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3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북아재단의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앞서 지적한 한·중·일 경제협약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

다.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한·중·일 경제협약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한·중·일 과학기술협력협의체」(내부자료).
- _____. 2010. 「한·중·일 대학생 교육프로그램 명칭 ‘캠퍼스 아시아’로 결정」.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2009.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2. 「한·중·일 지자체 관광국장회의 결과보고」(내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2011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현황』.
- 신종호. 2011. 「경기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강화방안」. 기본연구 2011-17. 경기 개발연구원.
- 오영석·조운애·하병기·이문형·사공목·이상호. 2010. 『한·중·일 국제
부업구조 분석과 협력증진 방향』. 연구보고서 2010-583. 산업연구원.
- 와다 하루키. 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 외교통상부. 2011. 『일·한·중 협력개황』.
- _____. 2012a. 『일·한·중 협력개황』.
- _____. 2012b. 『중국개황』.
- _____. 2012c. 『일본개황』.
- 원동아. 2011. 「한·중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와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 61호. 국회예산정책처.
- 윤덕룡·오승환. 2011. 「한·일, 한·중 통화스왑 확대와 그 시사점」. KIEP 오
늘의 세계경제 제11-3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종설. 2005.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1-07. 통일연구원.
- 이강욱·이효선. 2008.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 연구」. 정책과제 2008-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동형. 2006.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방
안」. 2006 연구보고서 환동해권분야. 대구경북연구원.

- 이부형 · 노정휘. 200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일본연구 2006-0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연구센터.
- 이창재 · 박상수 · 홍익표. 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총괄편」.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 김성철 · 백훈 · 한택환 · 이재영 · 방호경.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연구보고서 05-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 방호경. 2011.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연구보고서 1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2.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요」(내부자료)
- 정정숙. 2012. 「한·중·일 문화 교류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형곤 · 방호경. 2011.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연구자료 1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중한국대사관. 2011. 『한·중 지방정부교류백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12. 『한·중·일 표준협력 활동 현황』.
- 해양한국. 2012. 『세계 30대 항만의 2011년 실적 분석』. 월간해양한국.
-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동향』.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한·중·일 교류협력 현황』(내부자료).
- 한·일 경제협회소식 각호.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010. 「제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나라선언문」(내부자료).
- _____. 2012. 「상하이액션플랜(2012년~2014년)」(내부자료).
- 황원규. 2005.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Lu, Jianren.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고찰(번역본); Several Thoughts about the North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환동해리뷰』, 제1권 1호, pp. 49~73.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영문자료]

- Anderson, Kym and Hege Norheim. 1993. "From Imperial to Regional Trade Preferences: Its Effect on Europe's Intra- and Extra-Regional Trade." *Weltwirtschaftliches Archive*, 129(1), pp. 78-102.
- APERC. 2009.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4th Edition*.
- ASEAN Secretariat. 2012. "Evolving Towards ASEAN 2015." ASEAN Annual Report 2011-2012.
- ASEAN. 2011. ASEAN Plus Three Document Series 2005-2010.
- BP. 2012.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 China-Japan-ROK Trilateral Summit. 2003. *Joint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7 October)
- _____. 2007. *Joint Press Statement of the Seventh Summit Meet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14 January)
- Daduhs, Uri and Bennett Stancil. 2010. "The World Order in 2050." *International Economic Bulletin*. CARNEGIE.
- EAVG.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 EAVG II. 2012. "Report of the East Asia Vision Group II."
- Foure, J., A. Benassy-Quere, and L. Fontagne. 2012. *The Great Shift: Macroeconomic Projections for the World Economy at the 2050 Horizon*. CEPII.
- Hatoyama, Yukio. 2009. "Japan's New Commitment to Asia: Toward the Realiza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Singapore. (15 November) (http://www.kantei.go.jp/foreign/hatoyama/statement/200911/15singapore_e.html)
- HSBC. 2011. *The World in 2050: Quantifying the Shift in the Global Economy*. HSBC.

- IMF. 2012.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 2008. *Japan-China-ROK Trilateral Summit; Joint Statement for Tripartite Partnership*. Fukuoka, Japan. (13 December)
- _____. 2009. *Joint Statement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Beijing, China. (10 October).
- Hamanaka, Shintaro. 2012. "Is Trade in Asia Really Integrating?"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ng, Asian Development Bank.
- _____. 2010. *Trilateral Cooperation VISION 2020*. Jeju, Korea. (29 May)
- _____. 2011. *Summit Declaration*. Tokyo, Japan. (22 May).
- _____. 2012. *Joint Declaration on the Enhancement of Trilateral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Beijing, China. (13 May)
- Lee, Chang Jae. 2000.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NIRA Review*. Vol. 7. No. 4. pp. 5-10. (Autumn)
- _____. 2003. "Towards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 Korean Perspective." in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KIEP.
- _____. 2004. "Rationale for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IEP.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China. 2012. "China-Japan-ROK Cooperation(1999-2012)." White Paper. (May)
- Min, Shi. 1994. "The Basis, Features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Jang-Hee Yoo and Chang-Jae Lee eds.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KIEP.
- REN21. 2011. *Renewables 2011: Global Status Report*. Paris: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Sanae, Suzuki. 2004. "East Asian Cooperation through Conference Diplomacy: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ASEAN Plus Three(APT) Framework." Tokyo: IDE-JETRO.

Shintaro, Hamanaka. 2012. "Is Trade in Asia Really Integrating?"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SK. 2011. SK Bond Market Comment. 2011-10-28.

TEMM. 2010. "Footprints of TEMM: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rom 1999 to 2010."

Three-Party Committee. 2004. "The 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Vientiane, the Lao PDR.

_____. 2007a. "2005-2006 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ebu, the Philippines. (12 January)

_____. 2007b. "2007 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ingapore, Singapore. (20 November)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2012a. "2008-2012 Progress Report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rilateral Foreign Ministers' Meeting. (April 8)

_____. 2012b. "Annual Report FY2011: 2011.9-2012.8."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12. Joint Communique: The 14th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China, Japan and Korea. (3-4 May). Beijing, China.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기초과학, 생명정보분야 한·중·일 협력 강화한다». (4월 30일)

관세청 보도자료. 2008. 「부정 무역거래 단속 및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제2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12월 4일)

_____. 2011. 「제4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3국간 관세행정 발전협력에 관한 행동계획 체결». (11월 16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 「한중일 삼국간 물류정보 공유체제 구축 합의: 2010년 12월 2일 양해각서 체결 및 물류포럼 개최». (12월 1일)

_____. 2012.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성황리에 마쳐». (7월 16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2. 「제4차 한·중·일 금융협력회의 개최». (3월 15일)

_____. 2003. 「김진표 부총리, 제5차 ASEM 재무장관회의 및 제3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참석». (7월 4일)

_____. 2007. 「제7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 (5월 4일)

_____. 2011. 「한·중 통화스왑 확대 체결». (10월 26일).

_____. 2012. 「한·일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확대조치 종료». (10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2. 「한·중·일 농업장관, 식량위기, 가축전염병, 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응기로 합의». (4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한·일 양국 한중일 통신장관회의 재개 등 협력을 강화기로». (3월 22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임채민 장관, 제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참석». (11월 14일)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7a. 「한·중·일 동북아 IT허브 연락 강화기로: 한중일 차세대이동통신/차세대인터넷/RFID-센서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성공리에 개최». (1월 11일)

- _____. 2007b. 「한·중·일 디지털TV/방송분야 상호협력 상회: 제4차 한·중·일 디지털 TV/방송 실무협의회 개최». (11월 29일)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 「한·중·일 IT국장들, IT협력 위해 머리 맞댄다: 제10차 한·중·일 IT국장급회의 및 동북아 공개SW활성화 포럼 참석». (10월 18일)
- _____. 2012. 「한·중·일 표준협력으로 동북아 지역 무역활성화 도모». (4월 30일)

[웹사이트]

-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http://gico.gwd.go.kr>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http://www.neargov.org>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http://www.oaed.com>
- 디지털창원문화대전. 동북아기계산업도시연합 설명자료. <http://changwon.grandculture.net>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아시아문화교류재단. <http://www.acef.kr>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http://aptpo.org>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교류현황DB. <http://www.gaok.or.kr>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http://www.mke.go.kr/mke/index.jsp#>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abroad/abroad_04List.jsp
- 한국공개SW활성화포럼. <http://www.oss.kr>
- 한국수산회. 정보자료실. <http://korfish.or.kr>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keri.koreaexim.go.kr>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http://www.kama.or.kr>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 _____. http://www.kiip.re.kr/issuefocus/pdf/PDF_111223/pdf_20111223_22.pdf
- 한일문화교류회의. <http://www.kjcec.or.kr>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http://www.temm.org>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http://www.tcs-asia.org>

APEC. <http://www.apec.org>

_____. http://www.apec.org/About-Us/How-APEC-Operates/~//media/Files/AboutUs/Structure/APEC%20Structure_Sep2012.ashx

_____. <http://www.apec.org/About-Us/About-APEC/History.aspx>

_____. <http://www.apec.org/About-Us/How-APEC-Operates/Policy-Level.aspx>

_____. <http://www.apec.org/About-Us/How-APEC-Operates/Working-Level.aspx>

_____. <http://www.apec.org/ContactUs.aspx?t=Secretariat>

ASEAN. <http://www.aseansec.org>

_____. <http://www.asean.org/asean/asean-summit>

_____. <http://www.asean.org/asean/asean-structure/committee-of-permanent-representatives>

_____. <http://www.asean.org/asean/asean-secretariat/organisational-structure>

ASEAN Plus Three Cooperation Database.

<http://www.asean.org/images/archive/22206.pdf>

CEIC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www.ceicdata.com>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1/weodata/index.aspx>

JETRO. Japanese Trade and Investment Statistics.

<http://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

Oxford Global Economic Databank.

http://www.oxfordeconomics.com/oef_win/ReportPage.aspx

UNCTAD Statistics. <http://unctad.org/en/Pages/Statistics.aspx/FDI>

WTO Statistics Database. <http://stat.wto.org/Statistical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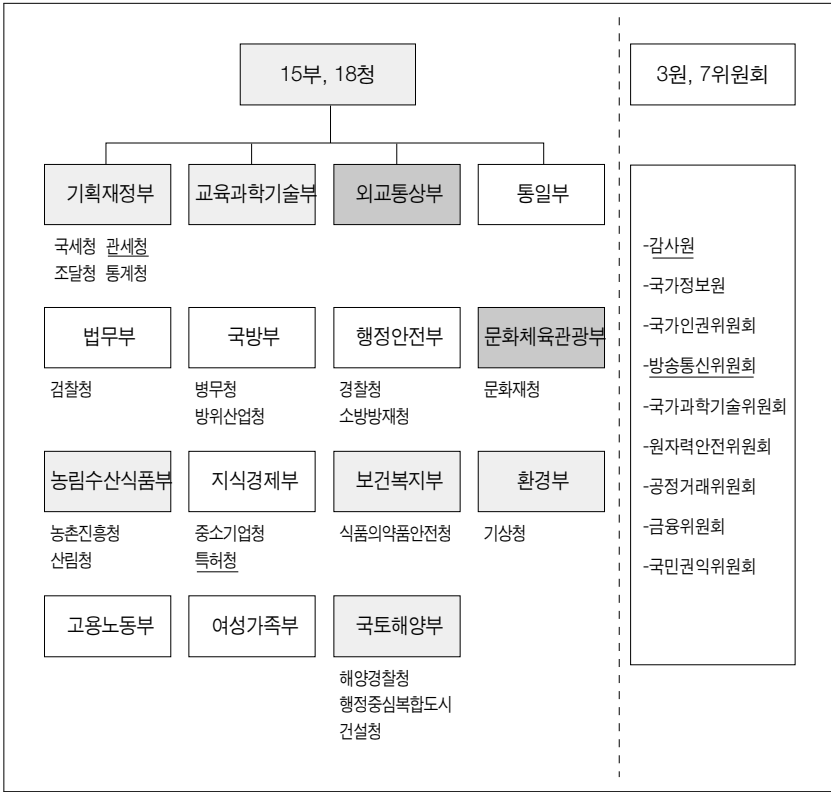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dp/home.do?Step=1&id=4>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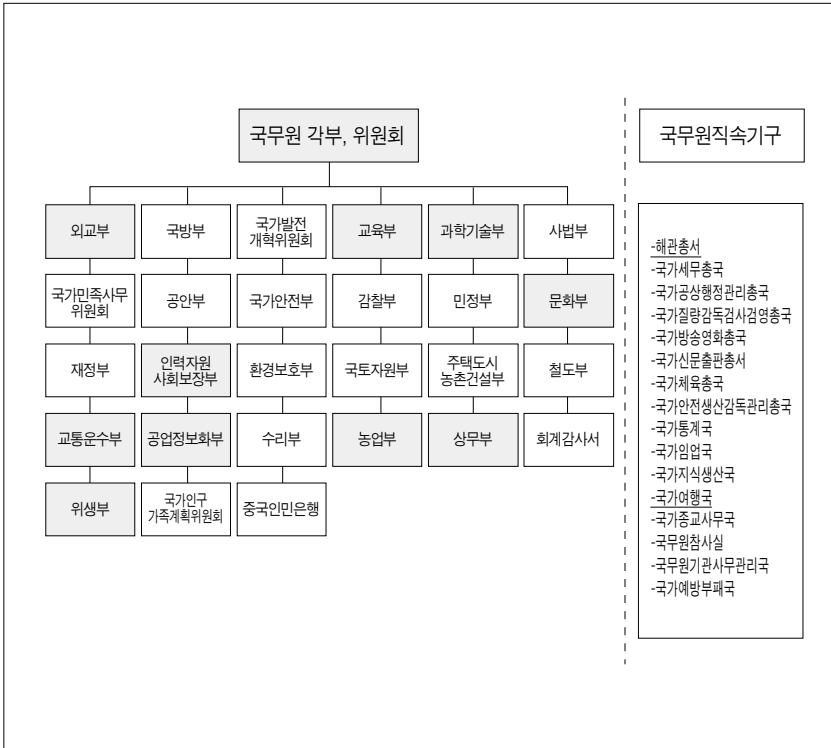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도



주: 1) 3국 장관급회의의 소관 정부기관은 음영 처리함.
 2) 한국 행정부는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로 구성됨.
 자료: 행정안전부(2012).

부록 그림 2. 중국 행정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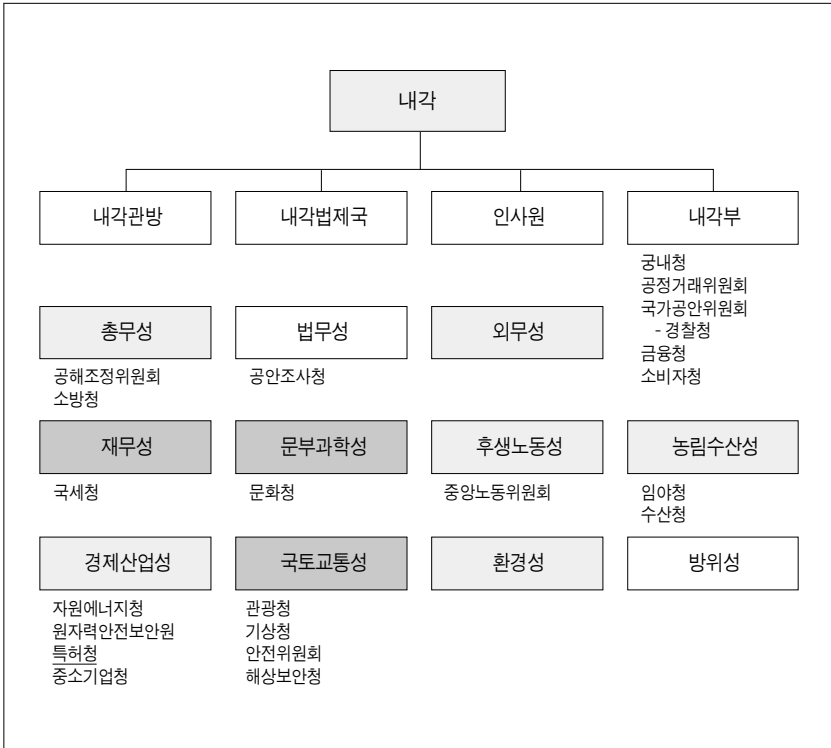


주: 1) 3국 장관급회의의 소관 정부기관은 음영 처리함

2) 중국 행정부는 국무원 산하 27개의 부와 위원회, 16개의 직속기구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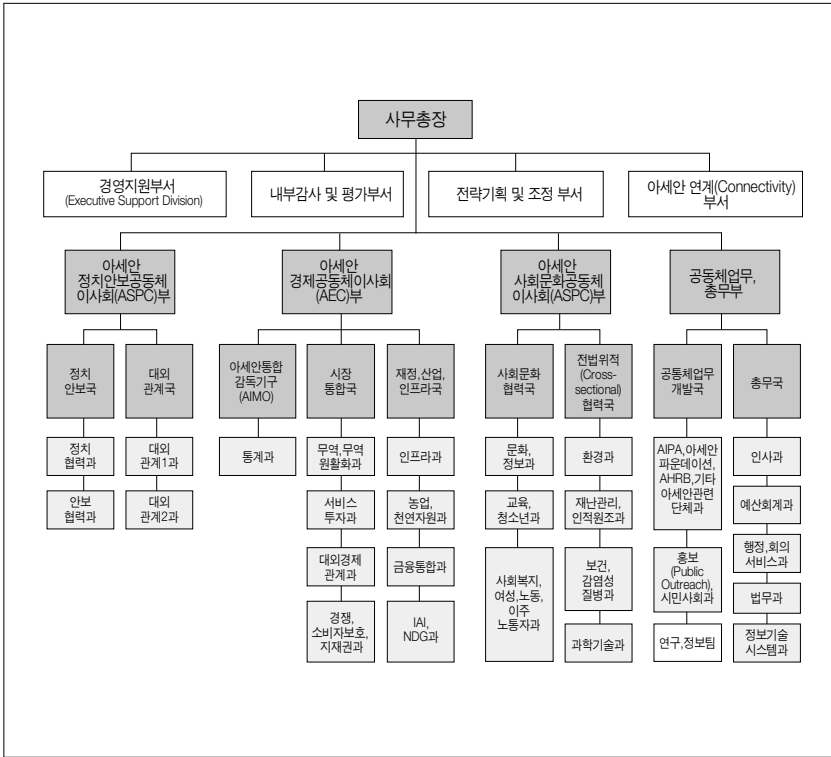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2012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3. 일본 행정부 조직도



주: 1) 3국 장관급회의의 소관 정부기관은 음영 처리함.
 2)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은 1부 11성으로 구성됨.
 자료: 외교통상부(2012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4. 아세안 사무국 조직도



주: 2012년 6월 21일 기준.

자료: <http://www.asean.org/asean-secretariat/organisational-structure>

Executive Summary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Proposal for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Dialogue Channel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Chang Jae Lee *et al.*

In terms of regional 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 East Asia lags behind other major economic regions, and within East Asia, Northeast Asia lags even further behind. However, on November 2012, the 16 East Asian countries agreed to start the negotiations for the region-wide FTA (RCEP); and the trade ministers of China, Japan and Korea officially announced the launch of the CJK FTA negotiations. Thus, a significant first step seemed to have been taken toward both the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Under this historic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entity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named “the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TEC),” which could serve as the mid-term goal in the pursuit of both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Before describing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expected implications of the TEC and the strategies to achieve it,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as well as the economic interdependency among the three countries. In addition, various existing policy dialogue channels at the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and business levels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assessment of existing policy dialogue channels and

comparative studies on existing regional consultative entities such as APEC, ASEAN+3 framework and ASEAN, the main characteristics and expected positive effects of the TEC as well as the gradual strategy to realize it are suggested.

Being a regional consultative entity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structure of the TEC is likely to be similar to that of APEC. However, since it has only three members, it would be much easier to agree on the agenda and to operate effectively. In addition, the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would be more extensive than other regional consultative entities, because the three countries share many commonalities such as strong manufacturing sectors, weak service sectors and agriculture, high external energy dependency, and usage of Chinese characters.

Apart from its contribution to regional institut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TEC could provide the three countries with various benefits such as new engines of economic growth, enhancemen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building resulting in the improvement of overall relations, effective voice in international economic arenas, and stronger regional political leadership.

Given the current political rela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however, the TEC cannot be pursued right awa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gradual approach to accomplish the establishment of the TEC. At the first stage, one has to consolidate the current Trilateral Summing Meeting framework by aligning and synchronizing the existing Ministers' Meetings to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so that it could function more effectively. Having achieved the basic institutional framework necessary for the TEC at the first stage, only sufficient political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formally the TEC at the second stage.

In the meantime, all three countries should strive to build the consensus on the need for the TEC, which would be instrumental in forming not only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but also the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 2012년
 -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한진희
 -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 김준동 · 서진교 · 송백훈 · 안덕근
 - 12-03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배찬권 · 김정곤 · 금혜윤 · 장용준
 -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 서진교 · 정 철 · 이준원 · 정윤선
 -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김영귀 · 김종덕 · 장준구 · 김혁황
 - 12-06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서정민 · 김민성 · 이재형
 -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 서정민 · 정지원 · 박혜리 · 조명환
 - 12-08 국가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이동은 · 편주현 · 양다영
 -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박은선 · 강삼모
 -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안지연 · 이동은 · 박영준 · 강은정
 -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강유덕 · 김균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12-13 한·중·일 경제협약체 구상 / 이창재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
권 울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
최필수 · 이상훈 · 문익준 · 나수엽
-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
문익준 · 박민숙 · 나수엽 · 여지나 · 은종학
- 12-18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승신 · 양평섭 · 문익준 · 노수연 · 정지현 · 여지나
-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
이재영 · 이성봉 · Alexey Kuznetsov · 민지영
-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조충제 · 송영철 · 최윤정 · 이 용 · 정혜원
-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 /
한바란 · 최필수 · 윤서영 · 손성현 · 박재은 · 전해린 · 이시욱
- 12-25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
박영호 · 광성일 · 전해린 · 장종문
-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
정형근 · 김병연 · 이 석
-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박복영 · 김종혁 · 고희재 · 박경로
-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우광

■ 2011년

-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강유덕 · 김근태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채희을
-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 고희채 · 이준규 · 오민아 · 이보람
-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 이창재 · 방호경
-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 윤덕룡 · 오승환 · 백승관
-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 박복영 · 오승환 · 정용승 · 박영준
- 11-05 대외 위협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 이동은 · 강은정 · 박영준
-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허 인 · 안지연 · 양다영
- 11-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 2권) / 박복영 편
-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영준 · 이형근 · 양다영
-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 서진교 · 이준원 · 김한호
-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 강유덕 · 이철원 · 이현진 · 오현정
-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 조미진 · 김영귀 · 박지현 · 강준하
-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강준구 · 김혁황 · 현혜정
-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 장용준 · 서정민 · 김민성 · 양주영

-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김정곤 · 박순찬
-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 권 율 · 정지선 · 박수경 · 이주영
-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방호경 · 나승권 · 윤미경
-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 박윌라 · Sherzod Shadikhodjaev · 나수엽 · 여지나 · 마 광
-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 경험 방향 /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원 · 홍익표
-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 김태윤 · 이재호 · 정재완 · 백유진 · 강대창
-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 박영호 · 전해린 · 김성남 · 김민희
-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 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고희채
-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이재영 · Sherzod Shadikhodjaev · 박순찬 · 황지영
-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 이승신 · 최필수 · 김부용 · 여지나 · 박민숙 · 임민경
- 11-28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손승호
-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 강대창 · 김규판 · 오윤아 · 이재호 · 신민금 · Siwage Dharma Negara · Latif Adam

■ 2010년

-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김형주
-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한바란 · 윤서영 · 박광순
- 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이홍식
-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 현혜정 · 장용준 · 강준구 · 김혁황 · 박철형
- 10-03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
서정민 · 김영귀 · 박지현 · 김정곤 · 금혜윤
-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
조미진 · 김한성 · 김민성 · 양주영
-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
김상겸 · 박인원 · 박순찬 · 임경수
-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
윤덕룡 · 오승환 · 김소영
-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허 인 · 이동은 · 이윤수 · 양다영
-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
박영준 · 이동은 · 오용협 · 안지연
-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 조종화 · 박복영 · 박영준 · 양다영
-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
이장규 · 나수엽 · 여지나 · 박민숙
- 10-12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 10-13 한·중·일 역내 투자동향과 활성화 방안 /
정형곤 · 이홍식 · 방호경 · 나승권

- 10-14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
정성춘 · 김규관 · 이형근 · 김근태 · 오태현
-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중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10-16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
이재영 · 이철원 · 황지영 · 파벨 미나키르
- 10-17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특성과 한국의 진출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고희채 · 박미숙 · 허경신
-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김진오 · 권기수 · 고희채 · 박미숙
- 10-19 한·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
조충제 · 성한경 · 최윤정 · 송영철
-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
박영호 · 한바란 · 정지선 · 주진홍 · 김민희 · 전해린
-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
김태윤 · 손기태 · 정재완 · 이재호 · 백유진
- 10-23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순철
-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김지연 · 홍익표
- 10-25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강유덕 · 손기태 · 김은지 · 이현진
-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
정지원 · 권 율 · 한바란 · 정지선 · 박수경 · 이계우
- 10-27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
정여천 · 이종화 · 성원용 · 황지영

이창재(李昌在)

프랑스 파리 I 대학(Panthéon-Sorbonne)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학계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cjee@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공저, 2005)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공저, 2011) 외

방호경(方浩慶)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現, E-mail: bassgu@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 연구』(공저, 2011)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공저, 2011) 외

나승권(羅承權)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skna@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일 역내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공저, 2010)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공저, 2011) 외

이보람(李보람)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동아시아연계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학 석사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동아시아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br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세계경제 위험요인 평가와 전망」(공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25호, 201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공저, 2011) 외

연구보고서 12-13

한·중·일 경제협의회 구상

2012년 12월 26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3460-1142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396-5 94320

978-89-322-1072-8 (세트)

정가 10,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専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_____ (한문) _____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_____
담당자 연락처	전화 _____ E-mail : _____ FAX _____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_____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Proposal for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Dialogue Channel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Chang Jae Lee *et al.*

한·중·일 3국간에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종 장관급회의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한·중·일 경제협의체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별 추가적인 부담 없이 단기간 내 3국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3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3국의 국민에게 전달하여 한·중·일 경제협의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3965 94320
9788932 213965
ISBN 978-89-322-1396-5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